

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

A Study on Measures to Enhance the Revitalization of Fishing Villages in Gangwon Province

2019. 2.

박상우 | 황재희 | 이호림 | 이상규 | 김충재 | 김주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진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황재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전문연구원 이호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연구원 이상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연구원 김충재 강원연구원 생태자원연구부 부연구위원 김주원 강원연구원 지역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

보고서 집필 내역	
KMI 연구책임자	박상우 연구총괄, 제1장, 제4장 제1절, 제2절, 제5장, 제6장
RIG 연구책임자	김충재 제1장, 제2장 제2절, 제4절, 제5장
연구진	황재희 제4장 제1절, 제2절 이호림 제3장 이상규 제2장 제3절, 제4절 김주원 제2장 제1절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이광표 와바다다 대표 이동철 강원 어촌특화지원센터 부센터장 이종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이중철 강원도 환동해본부 팀장 서덕훈 해양수산부 사무관
-----------------------	---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발간사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연근해어업 등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을 중심으로 수산업이 발달해 온 지역이다. 과거 어업생산량은 연간 15만 톤을 상회하였으나 기후변화, 수산자원 남획 등으로 인해 최근에는 5만 톤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어업의 쇠퇴로 인해 어촌사회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지역소멸에 직면해 있다. 강원 6개 시·군의 74개 어촌마을 중에서 80%가 소멸 고위험단계 또는 소멸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강원 어촌마을의 지역소멸 문제는 지켜만 볼 수 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강원연구원이 2차년에 걸쳐 공동연구로 수행함으로써 강원 어촌마을의 심층적인 여건변화와 문제를 진단하고,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생활밀착형 SOC, 어촌뉴딜 300사업, 수산혁신 2030 등 정부정책과 연계하고, 어촌공동체 주도의 어촌 신활력 제고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를 통해 균형발전의 생태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 연구 결과가 강원 어촌의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는 촉매제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는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의 박상우 부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았고, 황재희 전문연구원, 이상규 연구원, 이호림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또한 강원연구원에서 생태자원연구부 김충재 부연구위원과 지역사회연구부 김주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주었다. 아울러 이 연구 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이광표 와바다다 대표, 이동철 강원 어촌특화지원센터
부센터장, 충남연구원 이종화 연구위원, 강원 환동해본부 이종철 팀장, 해양
수산부 서덕훈 사무관에게 필자를 대신하여 감사드린다.

2019년 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양 창 호

목차

❖ 요약 · i

❖ EXECUTIVE SUMMARY · vii

제 1 장 서론 ·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2
2. 연구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9
1. 선행연구 검토	9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제 2 장 강원도 어촌의 여건변화와 실태 · 13

제1절 어촌의 역할과 위상의 변화	13
제2절 어촌의 여건변화와 실태	14
1. 수산업의 여건변화	14
2. 어촌사회의 여건변화	22

	제3절 강원도 어촌지역 인구전망	44
	1. 강원도 어촌지역 인구추계	44
	2. 인구추계에 따른 강원도 어촌사회 변화	51
	제4절 어촌마을 심층조사	56
	1. 조사개요	56
	2. 조사결과	57

제 3 장 국내외 어촌활성화 사례 · 61	
제1절 국내외 어촌개발 동향	61
1. 유럽연합(EU) 동향	61
2. 일본 동향	63
3. 국내 동향	65
4. 시사점	71
제2절 국내외 사례	72
1. 강원도 철원 스마트 그린빌리지	72
2. 가고시마현 이센정	74
3. 문호리 리버마켓	75
4. 시사점	76

제 4 장	어촌주민 인식조사 및 어촌지역 유형화 · 79
제1절 어촌주민 인식조사	79
1. 조사 설계	79
2. 응답자 특성	83
3. 조사 결과	84
4. 인식조사 결과 종합	109
제2절 어촌마을 유형분류	112

제 5 장	강원 어촌마을 신활력 방안 · 119
	제1절 강원 어촌마을 신활력 제고 추진방안 119
	1. 대응전략 119
	제2절 전략별 추진과제 127
	1. 전략별 과제 도출 127
	2. 어촌 신활력 추진과제 128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57
	제1절 결론 157
	제2절 정책제언 159

❖	참고문헌 · 171
----------	-------------------

❖	부록 · 177
----------	-----------------

표 목차



〈표 1-1〉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0
〈표 2-1〉 시·군별 어선척수 변화	19
〈표 2-2〉 강원도 전체 어선척수와 어촌계 어선척수의 비중	20
〈표 2-3〉 강원도 어가 수, 어업가구원 수, 어업인 수 감소 추이	21
〈표 2-4〉 고성군 어촌마을 인구추이	22
〈표 2-5〉 속초시 어촌마을 인구추이	23
〈표 2-6〉 양양군 어촌마을 인구추이	24
〈표 2-7〉 강릉시 어촌마을 인구추이	25
〈표 2-8〉 동해시 어촌마을 인구추이	25
〈표 2-9〉 삼척시 어촌마을 인구추이	26
〈표 2-10〉 고성군 어촌마을 소멸위험지수	28
〈표 2-11〉 고성군 어촌마을 고령화지수	28
〈표 2-12〉 속초시 어촌마을 고령화지수	30
〈표 2-13〉 속초시 어촌마을 소멸위험지수	30
〈표 2-14〉 양양군 어촌마을 소멸위험지수	31
〈표 2-15〉 양양군 어촌마을 고령화지수	31
〈표 2-16〉 강릉시 어촌마을 소멸위험지수	33
〈표 2-17〉 강릉시 어촌마을 고령화지수	33
〈표 2-18〉 동해시 어촌마을 소멸위험지수	34
〈표 2-19〉 동해시 어촌마을 고령화지수	34
〈표 2-20〉 삼척시 어촌마을 소멸위험지수	35
〈표 2-21〉 삼척시 어촌마을 고령화지수	36
〈표 2-22〉 연안시·도별 소멸위험지수 및 고령화율	37
〈표 2-23〉 시군 어촌계원 감소율(20% 이상, 2012~2017년)	43

〈표 2-24〉 강원도 어촌마을 인구추계	49
〈표 2-25〉 강원도 어촌마을 지역소멸위험지수	51
〈표 2-26〉 강원도 어촌마을 고령화율	54
〈표 2-27〉 강원도 동해안 어촌마을 심층 인터뷰 대상 지역	56
〈표 2-28〉 강원도 동해안 어촌마을 심층조사 결과	58
〈표 3-1〉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현황	70
〈표 4-1〉 어촌주민 인식조사 개요	80
〈표 4-2〉 조사대상 어촌마을(어촌계) 현황	80
〈표 4-3〉 강원도 어촌마을 지역주민 인식조사 항목	81
〈표 4-4〉 강원도 어촌마을 지역주민의 성별 · 연령대별 분포	83
〈표 4-5〉 강원도 어촌마을 지역주민의 거주지역 · 거주기간별 분포	84
〈표 4-6〉 응답자 특성별, 마을 쇠퇴 이유	86
〈표 4-9〉 응답자 특성별, 인구감소 원인	89
〈표 4-10〉 응답자 특성별, 마을 활성화를 위한 대안(1순위 기준)	92
〈표 4-11〉 응답자 특성별, 마을 청장년층 인구유입 방안	95
〈표 4-12〉 응답자 특성별, 마을 수산업 활성화 방안	96
〈표 4-13〉 응답자 특성별, 마을 일자리 확대 방안	99
〈표 4-14〉 응답자 특성별, 강원도의 어촌이 지닌 경쟁력(1순위 기준)	101
〈표 4-15〉 응답자 특성별, 유망한 특화사업	103
〈표 4-16〉 응답자 특성별, 수산업 분야 강점	104
〈표 4-17〉 ‘어획 및 위판 전문화’ 어종 및 ‘특화어종 양식환경’ 어종	105
〈표 4-18〉 응답자 특성별, 해양레저 · 관광 분야가 지닌 강점	106
〈표 4-19〉 응답자 특성별, 특화사업 정착을 위한 정책	109
〈표 4-20〉 어촌주민 인식조사 결과 요약	110
〈표 5-1〉 강원 어촌마을 신활력 제고를 위한 대응전략 도출	122
〈표 5-2〉 강원 신활력 어촌 대응전략별 추진과제	127
〈표 5-3〉 강원 신활력 지원단 사업내용(안)	132
〈표 5-4〉 강원 지역밀착형 생활 SOC 추진사업 확대(안)	139
〈표 5-5〉 어촌뉴딜 300사업 유형별 추진방향	141
〈표 5-6〉 귀어·귀촌 지원정책의 전략 및 추진과제	142

〈표 5-7〉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7대 영역 부문별 목표	145
〈표 5-8〉 어촌어업인 삶의 질 지역협의체 구축·운영	146
〈표 5-9〉 유형별 맞춤형 지원	152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3
〈그림 1-2〉 강원도 어촌마을 현장조사	6
〈그림 1-3〉 강원 어촌마을 주민 인식도조사	7
〈그림 1-4〉 연구수행 체계도	8
〈그림 2-1〉 강원도 수산물 생산 및 생산고 추이	15
〈그림 2-2〉 수산물 톤당 가격 추이	16
〈그림 2-3〉 어선 척수, 평균톤수, 척수비중 추이	18
〈그림 2-4〉 어선의 톤수별 증감 추이	18
〈그림 2-5〉 강원도 어업가구 수, 어가인구, 어업인수 추이	21
〈그림 2-6〉 어촌계 및 어촌계원수 추이	38
〈그림 2-7〉 어촌계원 구성 추이	38
〈그림 2-8〉 강원도 지역·어촌계별 어촌계원 변동	41
〈그림 3-1〉 유럽의 지역개발정책 변화	63
〈그림 3-2〉 어촌뉴딜 300사업의 국민휴양형 사례	67
〈그림 3-3〉 어촌 6차산업화 개념	69
〈그림 3-4〉 철원 스마트 빌리지 구상	73
〈그림 3-5〉 빈집 프로젝트 설명회 및 정리	75
〈그림 3-6〉 문호리 리버마켓	76
〈그림 4-1〉 지역주민 인식조사 현장	82
〈그림 4-2〉 마을 침체 및 쇠퇴 인식 여부	85
〈그림 4-3〉 마을 쇠퇴 이유	85
〈그림 4-4〉 마을의 인구 감소에 대한 인식	87
〈그림 4-5〉 인구 감소 원인	88
〈그림 4-6〉 마을 소멸에 대한 인식	90

〈그림 4-7〉 마을 활성화를 위한 대안	91
〈그림 4-8〉 마을 활성화를 위한 기타 의견	92
〈그림 4-9〉 마을의 공동체 역량 강화 방안	93
〈그림 4-10〉 마을 청장년층 인구유입 방안	94
〈그림 4-11〉 마을 수산업 활성화 방안	96
〈그림 4-12〉 마을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98
〈그림 4-13〉 마을 일자리 확대 방안	99
〈그림 4-14〉 강원도의 어촌이 지닌 경쟁력	100
〈그림 4-15〉 유망한 특화사업	102
〈그림 4-16〉 수산업 분야 강점	103
〈그림 4-17〉 해양레저 · 관광 분야가 지닌 강점	106
〈그림 4-18〉 수산업 6차산업을 위한 특화 ‘자원’	107
〈그림 4-19〉 특화사업 정착을 위한 정책	108
〈그림 4-20〉 어촌마을 지역소멸지수-수산생산규모 간 관계	112
〈그림 4-21〉 어촌마을 유형분류 결과	113
〈그림 4-22〉 양양군 내 해양레저 · 관광 참여 현장	114
〈그림 4-23〉 지역별(시군) 어촌마을 유형 분포도	115
〈그림 5-1〉 강원 어촌 신활력을 위한 5대 대응전략	124
〈그림 5-2〉 강원 어업지역 네트워크 구축(안)	128
〈그림 5-3〉 강원 내수면 어업지역 네트워크 예시	129
〈그림 5-4〉 강원 어업지역 네트워크 기반 권역화 방안	130
〈그림 5-5〉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 거버넌스 체계(안)	131
〈그림 5-6〉 지역전문가(은퇴공무원) 컨설팅 우수 사례	133
〈그림 5-7〉 강원 어촌의 지역소멸지수 현황	137
〈그림 5-8〉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방안	144
〈그림 5-9〉 남북 평화 강마을 대상지역(안)	149
〈그림 5-10〉 남북 평화 강마을 조성 추진방안	150
〈그림 5-11〉 남북 평화수역의 특화어항 개발 개념	151
〈그림 5-12〉 강원 청년 귀어인 특별구역제도 도입방향	153
〈그림 5-13〉 강원 어촌 복지거점센터 운영 · 관리(안)	155

〈그림 6-1〉 동해안권 남북 평화어항 후보지역 및 북한 어장 위치	160
〈그림 6-2〉 평화 강마을 도입 후보지역 및 추진방향	163
〈그림 6-3〉 강원 청년 귀어인 현황	164
〈그림 6-4〉 강원 청년 귀어인 특별구역제도 도입방향	165
〈그림 6-5〉 강원형 어촌뉴딜 300사업 가능지역	167
〈그림 6-6〉 어촌 생활서비스 거점센터 예시(제주 한림수협)	169
〈그림 6-7〉 강원 어촌 생활서비스 거점센터 운영 · 관리(안)	170

요약

강원 어촌마을 신활력 제고 방안 연구

1. 연구의 목적

- ▶ 본 연구는 저출산과 초고령화,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강원 어촌마을의 여건변화와 문제를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대응전략과 추진과제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 어촌사회 구성원에게 지속가능한 어촌사회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연구흐름	세부내용	연구방법	업무분장
↓	↓	↓	
연구의 개요	• 연구개요, 내용 및 연구 차별성	• 선행연구검토	KMI 강원연구원
↓	↓	↓	

연구흐름	세부내용	연구방법	업무분장
강원도 어촌의 여건변화와 실태	• 어촌(어촌계)의 분포 및 현황 • 어촌 쇠퇴 실태 - 인구구조 변화, 신규인력 유입실태, 지방 재정여건, 어업여건 변화, 어촌·해양관광, 공공서비스 여건	• 통계조사 • 방문조사 • GIS 공간분석	KMI 강원연구원
↓	↓	↓	
국내외 어촌의 선진사례 분석	• 국내외 정책동향 • 국내외 사례조사	• 문헌조사 • 현장조사	KMI
↓	↓	↓	
강원도 어촌의 쇠퇴지역 분석과 유형화	• 강원도 어촌의 쇠퇴와 문제점 - 쇠퇴원인 진단, 예상되는 문제점 • 어촌주민 인식도 조사 및 유형화 - 설문조사 - 유형화(군집분석) - 쇠퇴유형별 특성	• 문헌조사 • 설문조사 • 워크숍	강원연구원 KMI
↓	↓	↓	
강원도 어촌 신활력 추진방안	• 쇠퇴하는 어업지역의 신활력 추진방안 - 강원도 어촌 신활력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어촌공동체 역량강화 및 구조개편 - 어촌 활성화 관련 정부정책의 연계 강화 - 강원형 어촌특화발전 대책 마련 - 사람이 돌아오는 강원형 어촌기반 구축	• 전문가자문	KMI 강원연구원
↓	↓	↓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 정책제언	-	KMI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의 특징

- ▶ 본 연구는 강원도 어촌마을의 쇠퇴를 진단하고, 더 나아가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연구과제로, 강원도 어촌마을에 대한 지역소멸 문제와 그 대응방안을 다루는 최초의 연구임

- ▶ 특히,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강원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본 연구는 심층조사를 기반으로 어촌사회의 문제를 현장감 있게 다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연구에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의 현장포럼을 통해 행정기관과 협업체계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 이 연구는 어촌사회를 대상으로 인구추계 전망과 그 결과를 토대로 2041년의 지역소멸지수를 전망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위기를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하였고, GIS를 활용하여 시각화함으로써 일반인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 강원 어촌마을은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2041년 인구추계전망과 지역소멸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음
- ▶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어촌정책은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 인식보다는 관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어촌마을의 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 귀어·귀촌인 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강원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발생함
- ▶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고 지역쇠퇴에 대한 강원도 신활력 제고를 위한 방향을 제시함
- ▶ 첫째, 강원지역 여건에 맞는 어촌 신활력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3개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특히, 강원 어업지역 네트워크는 내

- 수면과 해면을 잇는 방안으로 어촌지역의 협력과 연대, 사업 간 연계성 제고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등 선도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함
- ▶ 둘째, 강원지역의 어촌계 분할과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소멸 고위험이 나타나는 어촌마을의 전략적 통합 및 진입장벽 완화를 유도해야하며, 이를 통해 어촌 진입장벽과 제약이 없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마련되도록 해야 함
 - ▶ 셋째,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최근 정부, 지자체, 어촌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강원도 내수면과 해면의 어촌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여 사업공모가 이루어져야 함
 - ▶ 넷째, 강원형 어촌특화발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가 갖고 있는 남북 접경지역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남북 경제협력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니즈를 어촌·어항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 마지막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귀어인 유치 및 양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미래 수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 어촌발전 및 신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첫째, 어항분야 남북 경제협력 시범사업으로,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2018. 9. 19.)」를 토대로 동해안권 남북 평화어항 사업을 구상 및

수산분야 남북 경제협력 선도사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함

- ▶ 둘째, 강원도는 접경지역을 따라 북한강, 한탄강, 임진강이 관통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경지역의 남북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남북 평화 강마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함

- 접경지역 내 ‘평화 강마을’은 남북한 지역상생 모델로써 선도적인 시범사업으로 해양수산부, 통일부, 강원도가 주도하는 협업체계를 통해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상징적인 지역개발사업이 될 수 있음

- ▶ 셋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청년 귀어인의 유치를 위해 청년 귀어인 특별구역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함

- 청년 귀어인 특별구역제도는 어촌에 연고가 없는 도시민이 진입장벽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임

- ▶ 넷째,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어촌뉴딜 300사업을 활용하여 강원도 실정에 맞는 강원형 어촌뉴딜 사업구상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이를 위해 강원도 환동해본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전문가, 중간지원조직(강원 어촌특화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이를 통한 다양한 사업 발굴이 이루어져야 함

- ▶ 다섯째, 강원도 어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어업지역 네트워크 기반 어촌생활서비스 거점센터 설립을 제안하고자 함

- 거점센터는 연안항, 무역항 또는 국가어항에 건설하고 지역 간 연계성을 높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며, 운영은 지구별 수협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 본 연구는 최근 지역소멸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어촌사회 중, 강원지역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원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강원 어촌사회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음
- ▶ 특히, 최근 강원 어촌지역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 활성화, 북한과의 협력 등을 통한 다양한 사업 및 정책제안을 통해 강원어촌의 새로운 활성화 전략 제시 및 어업 외 소득원 다변화 효과가 예상됨
- ▶ 다양한 사업유치 및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문화·관광·레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청년인력을 유입시킬 수 있어 청년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어촌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Measures to Enhance the Revitalization of Fishing Villages in Gangwon Province

1. Purpose

- ▶ This study aims to diagnose changing conditions and problems of fishing villages in Gangwon province which are facing a crisis resulting from low fertility rate, super-aging and a continued declining population. Having provided countermeasures and implementation tasks t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carry out, the present study intends to suggest a direction for sustainable fishing communities to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members of fishing communities.

2. Methodologies and Features

1) Methodologies

Research flow	Specific contents	Methods	Job Assignment
↓	↓	↓	
Changing conditions and current status of fishing villages in Gangwon Province	• Distribution and current status of fishing villages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 Status of decline in fishing villages – Demographical change, inflow status of new workforce, financial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changes of fishery conditions, conditions of fishing villages, marine tourism and public service	• Statistics research • Visiting research • GIS Spatial Research	KMI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RIG)
↓	↓	↓	
Analysis of advanced cases of domestic and foreign fishing communities	•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 Study of domestic and foreign cases	• Literature review • On-site investigation	KMI
↓	↓	↓	
Analysis and categorization of declining areas of fishing villages in Gangwon Province	• Decline of fishing villages in Gangwon province and its problems – Diagnosing the causes of decline and expected problems • Survey on the awareness of residents in fishing villages and categorization – Survey – Categorization (Cluster analysis) – Features per type of decline	• Literature review • Survey • Workshop	KMI

Research flow	Specific contents	Methods	Job Assignment
⇓	↓	↓	
Measures for the revitalization of fishing villages in Gangwon province	• Measures to boost revitalization in declining fishing areas – Establishing public-private governance for revitalization in fishing villages in Gangwon province – Capacity building and system restructuring of fishing communities –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government policies relevant to the revitalization of fishing villages – Preparing measures for specialized development for fishing communities customized to Gangwon province –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fishing communities customized to Gangwon province where people would like to return	• Consultation with experts	KMI RIG
⇓	↓	↓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	• Conclusion • Policy Suggestion	•	KMI

Source: written by authors

2) Features

- ▶ The study intends to diagnose the decline of fishing villages in Gangwon province, and further to present specific countermeasures and implementation tasks as the region is facing the risk of local extinction. In doing so, it serves as the first study in dealing

with the problem of local extinction of fishing villages in Gangwon province as well as its countermeasures.

- ▶ Jointly conducted by the Korea Maritime Institute and the Research Institute of Gangwon, the study deals with issues and problems of fishing communities at first-hand based on in-depth analysis. The study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a next year's study on cooperation system with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through on-site forum at fishing communities which are at the risk of local extinction.
- ▶ Targeting fishing communities, the present study forecasts the Local Extinction Index of 2041 based on the result of forecasts of population project. Therefore, the study provides a more objective perspective to the crisis of local society, while allowing to the general public easily understand by visualizing relevant matters based on GIS.

3. Results

1) Summary

- ▶ Fishing villages in Gangwon province are facing a risk of local extinction resulting from low fertility rate and super aging. The forecast of population projects for 2041 and the analysis of local extinction show that the region is encountered with serious risks.

- ▶ Rather than acknowledging the risk of local extinction, howeve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implementing their policies of fishing communities as a customary practice. Having limited policies primarily focusing on creating income sources and jobs of fishing villages and supporting those returning to fishing and agricultural communities, these policies have limitations in solving the root of problems in Gangwon province.
- ▶ The present study addresses such limitations, while pointing a direction to enhance the revitalization of Gangwon province on the matter of local extinction.
- ▶ First, three tasks are suggested to establish private-public governance for boosting the revitalization of fishing villages befitting to the conditions of Gangwon province. In particular, the study suggests advanced implementation measures for building a network of fishing areas in Gangwon province. These measures intend to create a synergistic effect by reinforcing the cooperation, solidarity of fishing communities as well as connection between projects by linking inland waters and sea areas.
- ▶ Second, it is necessary to induce strategic integration and reduce the entry barriers of fishing villages which are at a high risk of local extinction. Such measures will address difficulties resulting from division and conflict of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in Gangwon province. Through this effort, fishing communities need to lay a new foundation for living free from constraints and regulations.

- ▶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with government policies. In addition, a general plan for the whole fishing villages encompassing inland waters and sea areas through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to whic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of fishing communities are all paying attention. And then, goals and strategies befitting to such plan should be established while running a public contest for projects.
- ▶ Fourth, it is an urgent task to come up with measures for specialized development for fishing villages customized to Gangwon province.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discover tasks with which the need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can be implemented in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based on the potential of Gangwon province as bordering areas of South and North Korea.
- ▶ Lastly, it is essential to nurture competent young workers who will lead the future of fisher industry. For this purpose, measures for attracting and fostering young people returning to fishing villages in order to establish a ground for fishing communities where people would like to come back.

2) Policy suggestions and relevant activities

- ▶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in Gangwon province and boosting the revitalization are suggested as follows:

- ▶ First, the study proposes the formulation of a project for inter-Korean peace fishing ports in the east sea areas and the implementation of leading project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fisheries. These projects are based on the South Korea-North Korea Military Agreement (Sep 19, 2018)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should be carried out as a pilot project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fishing ports.
- ▶ Second, rivers including the Bukhan River, the Hantan River and the Imjin River are flowing through Gangwon province along its border regions. The study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Inter-Korean Peace River Village’ to promote the mutual growth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se border areas.
 - Serving as a regional model for mutual growth of both Koreaes, the ‘Peace River Village’ within border areas will be a leading project which requires its implementation through cooperation system led by MOF, MOU and Gangwon province.
- ▶ Third, the study suggests the adoption of the ‘Special Zone of Young People returning to Fishing Communities’ to attract young people returning to fishing villages which are on a continued decline.
- ▶ The ‘Special Zone of Young People returning to Fishing Communities’ is a policy for allowing urban residents without any connections in fishing communities to lay the foundation for living for stable settlement free from entry barriers.

- ▶ Fourth,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and plan fishing village new deal projects customized to Gangwon province by taking advantage of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currentl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 For this purpose, the East Sea Rim Headquarters in Gangwon province should take a leading role in organizing a regional consultation body consisting of local residents, experts and middle-level organization (the Gangwon Fishing Village Specialized Support Center). And various projects should be developed through this consultation body.
- ▶ Fifth, the establishment of network-based hub centers for fishing communities is suggested to enhance the quality of lives in fishing villages in Gangwon province.
 - Constructed in coastal, trade or national ports, hub centers increase the connection between regions, improving the service delivery system. These centers will be operated by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per each zone, allowing stable and sustainable operation and management.

3) Expected benefits including policy contribution

- ▶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of Gangwon province among fishing communities that are experiencing a worsening local extinction. Having provided countermeasures reflecting the features of Gangwon province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esented a certain direction for the future of fishing communities in Gangwon province.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한국사회는 지난 반세기에 산업화·도시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농어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농어촌지역의 저출산·초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강원도 관내의 어촌사회도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구추계 전망과 지역소멸지수를 살펴보면 2041년에는 대부분의 어촌마을에서 소멸 고위험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최근 농어촌에 대한 지역연구는 지역소멸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농촌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적어도 강원지역 어촌사회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강원도의 수산업은 동해안의 입지적인 여건상 전통적으로 잡는 어업을 기반으로 해오고 있다. 산업의 쇠락은 생명주기와 같기 때문에

미래에도 과거 수산업 중심의 어촌사회를 고집해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다행히 강원지역의 어촌은 최근 수산업의 전진기지의 역할뿐만 아니라 해양레저 중심으로 변모하는 어촌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촌사회가 여전히 주변 여건과 정책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어 수산업의 여건변화,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략과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한 미래 어촌의 방향성을 정부와 지자체, 어촌사회 구성원에게 제시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저출산과 초고령화,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강원 어촌마을의 여건변화와 문제를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대응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2차년도 연구에서는 지자체, 연구기관, 어촌주민이 현장포럼을 통해 쇠락하고 있는 어촌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력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1)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범위는 강원도의 해면과 내수면 어촌을 공간적 대상으로 한다. 어촌에 대한 공간적 정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다.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 지역, 동의 지역 중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¹⁾에 해당된다.

본 연구는 해면 어촌마을의 지역소멸 등 쇠락하는 어촌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주로 연안 6개 시·군(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강원도의 특성상 내수면어업과 접경지역의 남북 경제협력의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수면과 접경지역의 시·군(화천군, 인제군, 홍천군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자료: 저자 작성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19.1.25.)

2)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수산업 쇠퇴와 인구소멸로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강원 원지역 어촌마을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쇠퇴원인에 대한 진단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강원 어촌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제2장에서는 강원도 어촌의 여건변화 실태와 전망 등을 살펴보았다. 어촌사회의 여건변화로 수산업 위축과 어선세력 감소,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인구추계를 전망하였다. 또한, 강원 어촌마을 심층조사를 통해 마을 내 여건변화 요소와 다양한 문제 등에 대해서 어촌주민과 연구진 간 인터뷰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제3장에서는 국내외 어촌 활성화와 관련 사례를 검토하였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유럽연합과 일본의 지역소멸 대응 어촌정책과 어촌뉴딜 300사업 등 국내 어촌정책을 소개하고, 관련 사례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제4장에서는 어촌주민 인식조사와 강원 어촌지역에 대한 지역 특성별 유형화를 제시하였다. 우선 어촌주민 인식조사는 강원 74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쇠퇴 원인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역소멸성과 수산업의 위상을 토대로 3가지 유형화로 구분하고, 이를 어촌마을의 지역적인 특성과 연계하여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넷째, 제5장에서는 앞서 검토되었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강원 어촌의 신활력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공동체 역량강화, 정부정책 연계강화, 강원형 어촌특화발전 대책, 사람이 돌아오는 강원형 어촌 등 5대 대응 전략과 14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함께 강원도청(환동해본부), 해양수산부, 강원 어촌특화지원센터, 지구별 수협 등 어촌정책 유관기관에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특히, 평화 강마을, 평화수역 내 특화어항 개발 등 남북 경제협력과 미래 상생을 위한 선도적인 사업구상과 어업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어촌발전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가. 문헌조사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 관련 논문 리뷰 등을 통해 어촌의 쇠퇴 요인과 어업지역 재생과 관련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유럽연합, 일본 등 어촌사회의 침체와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대응하는 정책동향과 지역공동체의 역할 등을 살펴보았다.

나. 현장조사

본 연구에서는 강원 어촌마을 리더와 지역주민 인터뷰와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진이 직접 2018년 4~5월 2회에 걸쳐 6개 시·군에서 급격한 여건변화와 지역쇠퇴가 나타나는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1-2〉 강원도 어촌마을 현장조사



자료: 저자 촬영(촬영일: 2018. 4. 25.)

다. 통계분석 및 GIS 공간분석

본 연구는 강원 어촌의 수산업, 어촌사회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특히, 어촌사회의 인구추계 전망은 H-P(Hamilton-Perry)모형을 통해 추정하였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소멸지수를 산출하여 지역소멸 위험성을 진단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어촌마을과 어촌계 단위의 인구변화도 살펴봄으로써 수산업과 주변지역 여건변화에 대한 어촌사회의 급격한 변화까지 살펴보았다.

라. 어촌주민 인식조사

어촌주민 인식조사는 강원 어촌마을 쇠퇴에 대한 어촌주민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원이 응답자와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약 10일에 걸쳐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는 74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였고, 어촌마을 지방소멸에 대한 인지정도, 쇠퇴원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림 1-3〉 강원 어촌마을 주민 인식도조사



자료: 저자 촬영(촬영일: 2018. 10. 21.)

2) 연구 수행체계

본 연구는 강원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 세부 연구 내용은 〈그림 1-4〉와 같다. 지역실태와 쇠퇴원인 등은 강원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대응전략과 추진과제, 정책제언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공동연구 방식으로 2개년에 걸쳐 수행할 예정이다. 1차 년도는 강원 어촌의 쇠락의 원인진단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2차년도 연구에서는 금회 수행된 연구를 토대로 시범마을 2개소를 선정하고, 정부, 지자체, 연구자, 지역주민이 함께 현장포럼 운영을 통해 실행계획까지 마련하고자 한다.

〈그림 1-4〉 연구수행 체계도

연구흐름	세부내용	연구방법	업무분장
↓	↓	↓	
연구의 개요	• 연구개요, 내용 및 연구 차별성	• 선행연구검토	KMI 강원연구원
↓	↓	↓	
강원도 어촌의 여건변화와 실태	• 어촌(어촌계)의 분포 및 현황 • 어촌 쇠퇴 실태 - 인구구조 변화, 신규인력 유입실태, 지방 재정여건, 어업여건 변화, 어촌·해양관 광, 공공서비스 여건	• 통계조사 • 방문조사 • GIS 공간분석	KMI 강원연구원
↓	↓	↓	
국내외 어촌의 선진사례 분석	• 국내외 정책동향 • 국내외 사례조사	• 문헌조사 • 현장조사	KMI
↓	↓	↓	
강원도 어촌의 쇠퇴지역 분석과 유형화	• 강원도 어촌의 쇠퇴와 문제점 - 쇠퇴원인 진단, 예상되는 문제점 • 어촌주민 인식도 조사 및 유형화 - 설문조사 - 유형화(군집분석) - 쇠퇴유형별 특성	• 문헌조사 • 설문조사 • 워크숍	강원연구원 KMI
↓	↓	↓	
강원도 어촌 신활력 추진방안	• 쇠퇴하는 어업지역의 신활력 추진방안 - 강원도 어촌 신활력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어촌공동체 역량강화 및 구조개편 - 어촌 활성화 관련 정부정책의 연계 강화 - 강원형 어촌특화발전 대책 마련 - 사람이 돌아오는 강원형 어촌기반 구축	• 전문가자문	KMI 강원연구원
↓	↓	↓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 정책제언	-	KMI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등에 대한 선행 연구는 최근에 일부 수행되었고 이들의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검토된 선행연구 과제들은 어촌마을 쇠퇴에 따른 문제 진단과 대응과제를 도출하는 데 많은 참조가 되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김광익(2014)은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농촌지역 정주체계에서 획일적인 읍면소재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에서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되는 선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농어촌의 여건상 읍면소재지 이하의 마을단위에 대한 접근은 고려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박상현 외(2017)는 강원도 읍면지역의 유소년층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진단하고,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유출에 따른 고용, 산업,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강원도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인구 유입, 정주환경 개선, 고용 및 경제·산업, 보건복지 및 교육·문화로 구분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인구소멸의 문제를 농촌지역으로 국한하여 제시함으로써 어촌사회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는 못하였다.

박진경·김상민(2017)은 지자체별로 인구구조, 지역특성, 지역수요(유출원인)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고, 지자체 단위의 대응체계와 추진과제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포괄적인 정책방안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표 1-1〉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 인구감소기 읍면 중심의 농촌지역 정주체계 특성분석 및 정책과제 - 연구자(연도) : 김광익(2014) - 연구목적 : 농촌지역의 정주체계를 통근통행 연계구조 및 중심지 계층구조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	- 통행연계구조 분석 - 중심지 계층구조 분석 - 해외 사례조사	- 농촌지역 인구감소 현황 분석 - 농촌지역 정주체계 사례분석 - 해외 농촌지역 정주체계 사례 - 농촌지역 정주체계 형성의 정책과제
	2	- 과제명 : 강원도 인구구조 분석과 지역소멸 대응 방안 - 연구자(연도) : 박상헌 외(2017) - 연구목적 : 강원도 소멸지역 도출과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소멸 대응 방안 모색	- 문헌조사 - 통계분석(GIS) - 해외 사례조사	- 강원도 인구구조 및 지표분석 - 강원도 장래인구 예측 및 소멸위험지역 분석 - 지역소멸 가능성에 따른 대응방안 도출
	3	- 과제명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 연구 - 연구자(연도) : 박진경·김상민(2017) - 연구목적 : 지역발전정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를 분석하고 지역발전 논의를 검토하여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 정책방향 도출	- 문헌조사 - 통계분석 (전입/전출)	- 인구변화와 지역발전 관련 논의 검토 - 인구대응 관련정책 분석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자치단체 유형별 실태분석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 정책방안
본 연구		기존 연구는 시군(읍면) 단위의 지역문제와 농촌을 대상으로 했으나 본 연구는 어업지역을 대상으로 쇠퇴요인과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최초의 연구임	- 문헌조사 - 국내외 사례조사 - 통계분석(GIS) - 인식도조사 - 현장포럼 - 전문가 자문회의	- 현장포럼을 통한 행정, 어업인, 전문가 등이 함께 쇠퇴하는 어촌의 문제진단과 해법을 모색하는 실증연구임 - 동 연구는 2년에 걸친 연차별 수행과제로 시범대상 마을을 선정, 대안을 제시함

자료: 저자 작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강원도 어촌마을의 쇠퇴를 진단하고, 더 나아가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연구과제로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강원도 어촌마을에 대한 지역소멸 문제와 그 대응방안을 다루는 최초의 연구이다. 특히,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강원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금번 연구는 심층조사를 기반으로 어촌사회의 문제를 현장감 있게 다루었다. 또한 차년도 연구에서는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을 선정하여 대응할 수 있는 현장포럼 도입을 통한 실증연구로서 행정기관과 협업체계 마련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둘째, 이 연구는 어촌사회를 대상으로 인구추계 전망과 그 결과를 토대로 2041년의 지역소멸지수를 전망하였다. 통계분석과 인구추계 전망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의 위기를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하였고, GIS를 활용하여 시각화함으로써 일반인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제 2 장

강원도 어촌의 여건변화와 실태

제1절 어촌의 역할과 위상의 변화

어촌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 지역, 동의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수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어촌은 어업 및 수산업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어가의 정주 및 관련 인프라, 어항, 어촌정주어항, 항포구 등 어업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 수산물 유통, 가공 관련 시설, 수산 관련 공공 기관, 수협을 비롯한 금융기관 등 1, 2, 3차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다. 수산물이 풍부하던 시기에는 사람과 물자의 활발한 소통으로 소득,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지역 경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어선, 어구 등의 발달, 인구의 증가에 따른 수산물 수요 증가 등과 함께 수산물 생산량도 지속 증가하였으나 과도한 어업,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에는 어획어업에 의한 수산물 생산의

증가가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어획어업의 한계에 따라 양식 어업을 통한 수산물 생산량 증가는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여 해외로부터의 수입도 지속 증가하는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와 인구의 도시 집중화, 수산물 생산량 감소는 어업인의 감소로 나타나고, 고령화는 수산물 생산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어촌은 인구의 감소, 고령화를 고스란히 겪으면서 어촌 공동화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왔다. 어업인의 빈자리는 해양레저, 호텔, 리조트 등 대형시설이 차지하면서 공간적으로도 어촌은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경관, 문화 등 관광자원을 비롯한 풍부한 수산자원을 중심으로 자립화를 이뤄낸다면 도심지보다 풍요로운 웰빙어촌으로도 성장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촌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어촌의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어촌의 현실을 진단하고자 한다.

제2절 어촌의 여건변화와 실태

1. 수산업의 여건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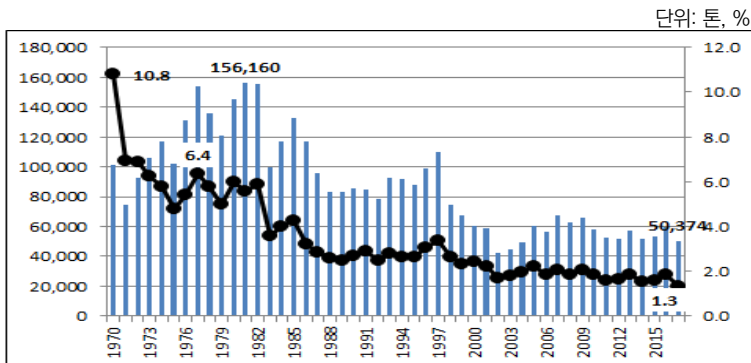
1) 수산물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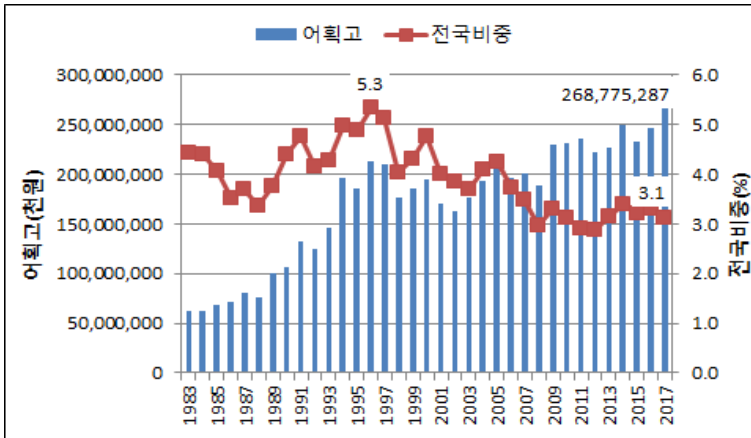
2017년의 강원도 수산물 생산량은 지금까지 최고치를 기록했던 1981년의 156,160톤에 비해 68% 감소한 50,374톤이었다. 전국 대비 생산량 비중은 동 기간 6.4%에서 1.3%로 감소하여, 강원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도

감소 정도가 급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 수산물 생산량이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것은 명태와 노가리의 소멸 탓이 크다. 1981년의 경우, 명태와 노가리의 생산량은 100,000톤을 상회했지만 현재는 수 톤에 불과하다. 명태의 새끼인 노가리는 어획 대상으로 가입되기 전에 이미 지속 어획되면서 남아나지 않게 되었고, 자동적으로 성어인 명태도 잡히지 않게 되었다. 명태는 생태, 황태, 북어 등으로 반가공되어 식품의 원료로 활용되고, 명란, 창난은 발효식품으로 애용되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자원이다. 최근에는 명태 살을 이용한 조미젓갈도 생산되고 있다. 연간 100,000톤이나 잡히던 수산물이 사라지면서 일자리, 소득, 부가가치도 그만큼 사라졌다. 이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수산업 전체가 위축되고 있다.

수산물 생산고는 1983년 610억 원에서 2017년 2,688억 원으로 331% 증가했다. 동 기간 전국 비중은 4.4%에서 3.1%로 1.3%p 감소했다.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던 1996년의 5.3%에 비해서는 2.2%p 감소했다. 생산량이나 생산고 모두 감소폭이 크지만 어획고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강원도 수산물이 가격이 높은 어류 중심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강원도 수산물 생산 및 생산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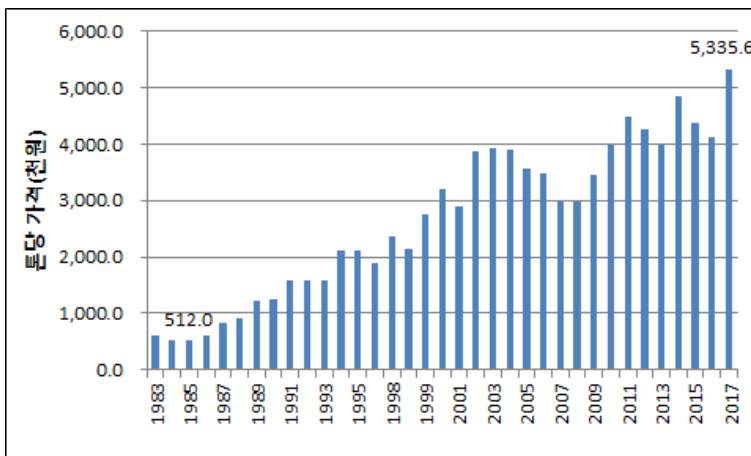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 연도

수산물 톤당 가격은 그동안 가장 낮았던 1985년의 512천 원에서 5,336천 원으로 940%나 증가했다. 동해안은 연안의 갯녹음 심화로 마을어장이 황폐화되고 있어 연안에서의 어업은 어려운 여건이나 연 근해어업은 소득 증가가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 2-2〉 수산물 톤당 가격 추이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 연도

2) 어선세력

(1) 강원도 어선세력

강원도의 어선수는 1994년 4,415척으로 전국에서 5.7%의 높은 비중을 보인 후 지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척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강원도는 전국 비중이 지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감소정도가 심한 상황이다. 2012년에는 전국 비중이 3.9%까지 낮아졌으나 최근에는 다소 증가하면서 2017년에는 2,770척으로 4.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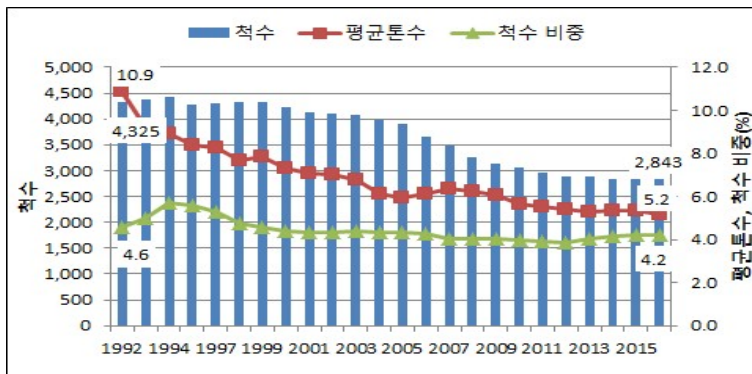
톤급별로는 1-5톤 미만이 전체의 61.0%로 가장 높고, 1톤 미만이 19.6%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5-10톤이 11.4%로 높았고, 10톤 이상은 8.0%로 낮았다. 톤급별 어선의 증감 추이를 보면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지속 증가하면서, 1992년 87.7%에서 2016년에는 92.0%였고, 10톤 이상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1992년 12.3%에서 2017년 8.0%였다.

어선의 평균톤수는 전국적으로 작아지는 추세에 있지만 이 또한 강원도 어선은 전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1992년에는 전국 10.2톤, 강원도 10.0톤으로 강원도 어선의 규모가 더 컸지만 1993년부터는 역전되어 전국 평균톤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전국 7.7톤에 비해 강원도는 5.5톤으로 71.8% 수준으로 작아졌다.

강원도 환동해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 어선은 2017년 기준으로 동해안이 2,544척으로 전체의 90.8% 이고, 나머지는 내륙의 내수면 어업어선이었다. 동력선이 2,471척으로 93.7%이고, 무동력선이 73척으로 6.3%이었다. 지역별로는 고성군이 685척으로 24.5%의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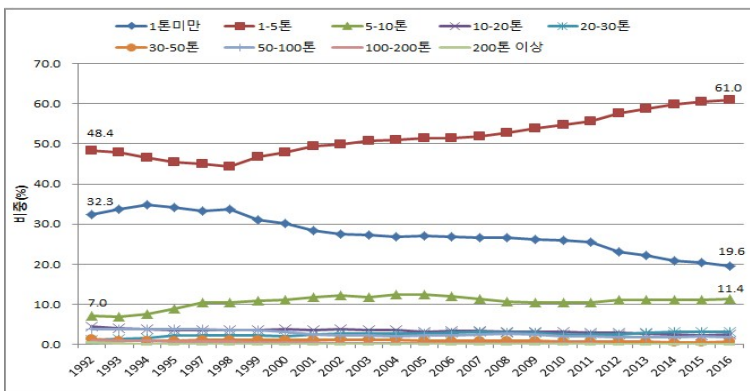
비중을 보였고, 이어서 강릉, 삼척이 각각 18.9%, 16.8%의 비중이었다. 내수면에서는 춘천이 76척으로 전체의 2.7%로 높았다. 2012년 대비 2017년에는 전체적으로 84척이 감소했고, 내수면이 53척, 해수면이 31척 감소했다. 춘천은 66척이 감소하여 가장 많은 어선의 감소를 보였고, 이어서 속초, 강릉, 삼척 순서로 감소하였다. 동해는 28척, 고성은 7척이 오히려 증가했다.

〈그림 2-3〉 어선 척수, 평균톤수, 척수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 연도

〈그림 2-4〉 어선의 톤수별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 연도

〈표 2-1〉 시·군별 어선척수 변화

단위: 척수

구분	2017	2012년	증감(척수)	지역별비중(2017년)
총계	2,801	2,885	-84	-
해수면	소계	2,544	-31	90.8
	강릉	530	-24	18.9
	동해	259	28	9.2
	속초	336	-25	12.0
	삼척	470	-7	16.8
	고성	685	7	24.5
	양양	264	-10	9.4
내수면	소계	257	-53	9.2
	춘천	76	-66	2.7
	원주	17	1	185.3
	태백	-	-	-
	홍천	24	2	13.0
	횡성	5	1	2.7
	영월	9	0	69.5
	평창	-	-	-
	정선	-	-	-
	철원	6	0	-
	화천	14	10	-
	양구	43	0	1.5
	인제	63	-1	2.2

자료: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통계』, 각 연도

(2) 강원도 어촌계 어선세력

어촌계의 어선은 2014년 기준으로 강원도 총 어선의 91.5%를 차지하고 있다. 어촌계원의 어선은 2004년 3,586척에서 2014년 2,599척으로 27.5%인 987척이 감소했다. 강원도 전체 어선은 동 기간 1,128척이 감소했고, 이 중 어촌계의 어선이 줄어든 비중은 87.5%였다. 따라서 어선은 어촌계원 소유가 대부분이므로, 어업에서 어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2〉 강원도 전체 어선척수와 어촌계 어선척수의 비중

구분	2004년	2014년	감소척수
강원도 전체 어선	3,969	2,841	1,128
어촌계 어선	3,586	2,599	987
어촌계 어선 비중(%)	90.35	91.482	87.5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 연도

3) 어업인구

강원도 어업가구는 1970년 19,023에서 2017년 2,082가구로 89.1% 감소했다. 동 기간 전국은 64.6% 감소했다. 전국 비중으로는 동 기간 12.8%에서 4.2%로 감소했다. 어업가구의 감소로 어가인구, 어업인의 감소로 이어졌다. 어가인구는 1970년 106,189명에서 2017년 4,917명으로 95.4% 감소했다. 동 기간 전국은 86.7% 감소했다. 동 기간 전국 비중은 11.6%에서 4.3%로 감소했다. 어업인²⁾은 1970년 22,204명에서 2017년 3,040명으로 86.3% 감소했다. 동 기간 전국은 71.4% 감소했다. 비중은 7.2%에서 3.5%로 감소했다.

어업가구, 어가인구, 어업인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고, 전국 비중 또한 대폭 감소했다. 전국 비중의 감소는 강원도가 특히 열악한 상황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의 원인은 무엇보다 수산물 생산량의 감소일 것이다. 실제 2017년의 수산물 생산량은 과거 최대 대비 68% 감소했다. 어가 수, 어업인 수는 수산물 생산량 감소율 이상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에는 수산물 생산 외에도 자녀 교육, 직장, 교통, 문화시설 등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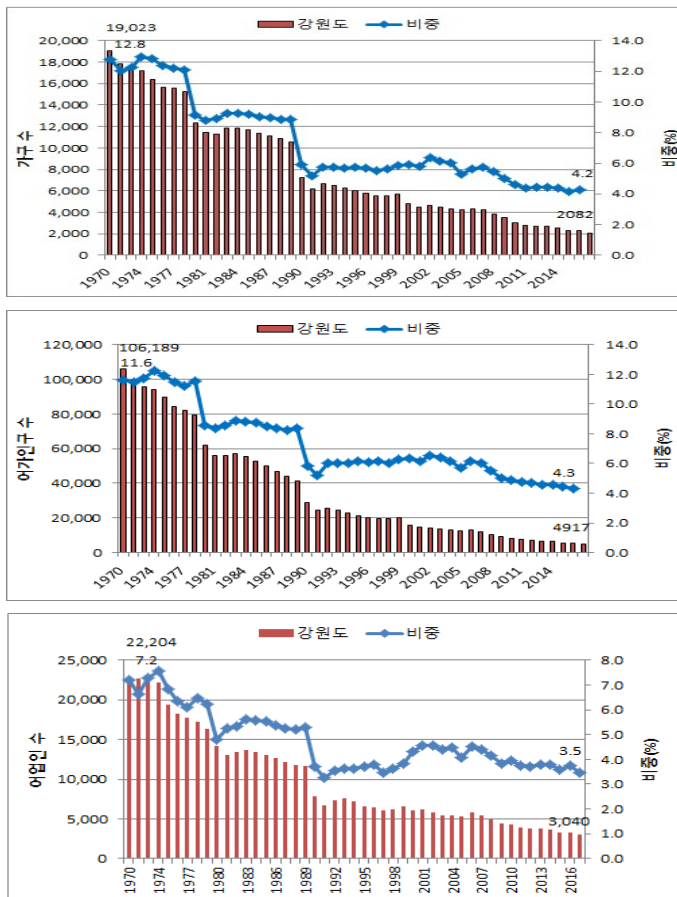
2) 통계청에서는 1년 중 1개월 이상 어업에 종사한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표 2-3〉 강원도 어가 수, 어업가구원 수, 어업인 수 감소 추이

구분	어가 수		어업가구원 수		어업인 수	
	1970	2017	1970	2017	1970	2017
강원도	19,023	2,082	106,189	4,917	22,204	3,040
전국비중	12.8	4.2	11.6	4.3	7.2	3.5
강원도 감소율(%)	89.1		95.4		86.3	
전국 감소율(%)	64.6		86.7		71.4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 연도

〈그림 2-5〉 강원도 어업가구 수, 어가인구, 어업인수 추이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 연도

2. 어촌사회의 여건변화

1) 어촌마을 인구변화

(1) 고성군 어촌마을 인구추이

고성군 어촌마을의 인구는 2014-2017년 사이에 4.7%인 658명이 감소했다. 문암1리, 2리를 제외하면 모든 어촌마을의 인구가 감소했고, 봉포, 동호, 천진은 각각 28.1%, 17.3%, 15.1%로 감소율이 높았다. 초도, 아야진은 10% 이상 감소했다.

〈표 2-4〉 고성군 어촌마을 인구추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가진	510	484	467	468	-	-6.4
거진	5,022	4,889	4,851	4,726	-	-6.8
교암	281	279	283	284	-	-3.4
대진	1,270	1,294	1,256	1,219	1,198	-5.7
동호	306	299	305	285	253	-17.3
문암1리	423	414	423	437	-	3.3
문암2리	180	185	192	189	-	3.8
반암	192	188	187	204	-	-2.9
봉포	1,286	1,121	1,165	1,090	925	-28.1
아야진	1,472	1,462	1,405	1,407	1,323	-10.1
오호	741	743	763	754	-	-2.7
천진	839	851	846	797	712	-15.1
청간	630	659	645	679	603	-4.3
초도	377	368	346	340	331	-12.2
공현진	579	577	591	571	-	-1.6
전체	14,108	13,813	13,725	13,450	-	-4.7

자료: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통계』, 각 연도

(2) 속초시 어촌마을 인구추이

속초시의 어촌마을 인구는 2014-2017년 사이에 0.4%인 90명이 증가했다. 동해안 6개 시군 중에서는 유일하게 증가했지만,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 아파트 건립 및 입주 등 일시적 호재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외옹치는 2017년 대비 2018년에 270명이 증가하는 등 2014-2018년 사이에 21.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동명의 경우에도 11.2% 증가했다. 반면에 교동은 13.7%, 내물치는 10.8%의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표 2-5〉 속초시 어촌마을 인구추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교동	357	329	327	326	308	-13.7
금호	7,312	7,246	7,002	6,895	6,706	-8.3
동명	3,834	3,654	3,518	4,327	-	11.2
장사	4,889	4,905	4,921	4,927	-	1.2
청호	4,377	4,404	4,439	4,444	4,443	1.5
내물치	342	331	327	322	305	-10.8
대포	218	225	230	236	229	5.0
외옹치	968	983	914	910	1180	21.9
전체	22,297	22,077	21,678	22,387	-	0.4

자료: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통계』, 각 연도

(3) 양양군 어촌마을 인구추이

양양군의 어촌마을 인구는 2014-2018년 사이에 8.0%인 309명이 감소했다. 전진2리는 23.9%, 기사문은 19.6%, 동산은 18.6%, 하광정 16.4%, 남애2리 10.4%의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반대로 동호, 남애1리, 오산, 수산은 10명 이내의 증가를 보였다.

〈표 2-6〉 양양군 어촌마을 인구추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인구1리	317	327	324	325	330	4.1
하광정	537	513	461	443	449	-16.4
동호	207	194	215	225	220	6.3
오산	72	73	77	74	78	8.3
남애2리	192	186	185	193	172	-10.4
광진	287	301	294	295	286	-0.3
동산	258	243	229	230	210	-18.6
낙산	403	389	369	365	365	-9.4
남애1리	192	195	193	189	193	0.5
수산	146	163	163	158	155	6.2
물치	709	705	681	660	663	-6.5
전진2리	163	149	132	122	124	-23.9
기사문	362	350	351	311	291	-19.6
전체	3,845	3,788	3,674	3,590	3,536	-8.0

자료: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통계』, 각 연도

(4) 강릉시 어촌마을 인구추이

강릉시 어촌마을의 인구는 2014년에서 2017년의 4년 동안에 전체적으로는 0.5%인 79명이 감소했다. 사천진리의 2018년 인구를 전년과 같은 730명으로 가정하여 2014-2018년 사이의 변동은 1.1%인 165명의 감소에 이른다. 어촌마을별 인구변동은 표와 같이, 도직어촌마을이 17.2%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이어서 금진, 심곡, 정동진 등이 높았다. 반대로 인구가 증가한 마을은 사근진이 3.6%로 유일했다.

〈표 2-7〉 강릉시 어촌마을 인구추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정동진	413	397	371	368	371	-10.2
정동1리	279	272	262	268	262	-6.1
영진	3,763	3,747	3,887	3,789	3,790	-0.2
안인	617	596	576	569	558	-9.6
안목	7,303	7,286	7,124	7,342	7,287	-2.3
심곡	239	226	219	211	213	-10.9
사천진리	779	765	752	730	-	-2.4
사근진	693	692	709	706	718	3.6
도직	91	85	84	85	82	-17.2
남항진	754	786	778	786	777	-1.4
금진	621	676	652	625	604	-14.0
강문	62	67	58	56	57	-8.1
총계	15,614	15,595	15,472	15,535	-	-0.5

자료: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통계』, 각 연도

(5) 동해시 어촌마을 인구추이

동해시 어촌마을의 인구는 2015-2018년 사이에 8.8%인 388명이 감소했다. 인구가 증가한 마을은 없었고 모두 감소했다. 추암은 33.2%, 대진은 10.2%로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표 2-8〉 동해시 어촌마을 인구추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대진	-	394	373	359	354	-10.2
목호	-	2,957	2,817	2,780	2,702	-8.6
어달	-	566	554	519	520	-8.1
천곡	288	295	301	299	285	-1.0
추암	211	178	149	143	141	-33.2
전체	-	4,390	4,194	4,100	4,002	-8.8

자료: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통계』, 각 연도

(6) 삼척시 어촌마을 인구추이

삼척시의 어촌마을 인구는 2014-2017년 사이에 5.8%인 407명이 감소했고, 2018년까지로 확대하면 600명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증산, 후진은 2014년 대비 2015년에 2배 이상 인구가 증가하였다. 이는 인근 대형 리조트 건립에 따른 인구 유입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로 신남, 용화, 장호1리, 초곡 등은 10명 내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8개 어촌마을 중 6개 마을은 인구가 증가했고, 나머지 12개 마을은 감소했다. 오분은 43.5%로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갈남, 광진, 노곡, 덕산, 정라 등은 10% 이상 감소했다.

〈표 2-9〉 삼척시 어촌마을 인구추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률(%)
갈남	210	218	209	204	-	-10.5
광진	195	173	154	167	162	-16.9
궁촌	540	523	513	497	491	-9.1
노곡	166	158	147	125	128	-22.9
대진	817	791	761	768	753	-7.89
덕산	630	607	577	576	558	-11.49
비화	50	53	52	52	49	-2.0
신남	168	172	169	167	-	3.7
오분	563	585	476	429	318	-43.5
용화	162	155	163	166	163	0.6
임원	578	568	548	547	-	-7.8
장호1리	162	167	171	182	177	9.3
장호2리	250	244	232	241	234	-6.4
정라	1,931	1,807	1,777	1,713	1,602	-17.0
증산	62	128	138	138	132	112.9
초곡	248	250	249	242	250	0.8
호산	206	214	203	190	196	-4.9
후진	71	201	208	198	195	174.6
전체	7,009	7,014	6,747	6,602	-	-5.8

자료: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통계』, 각 연도

2) 어촌마을 소멸위험지수 및 고령화지수

어촌마을의 인구구조 및 분포를 통해 지역소멸지수를 조사하였다. 지역소멸지수는 지역의 가임기여성인구(20-39세)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이 1.5 이상이면 지역소멸 위험 낮음, 1.0-1.5 미만은 보통, 0.5-1.0 미만이면 지역소멸 위험 주의, 0.2-0.5 미만이면 지역소멸 위험 진입, 0.2 미만이면 지역소멸 고위험으로 구분한다. 지역소멸지수를 통해 읍면동 단위, 보다 자세하게는 행정리 단위를 조사하면 어촌마을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어촌마을의 지역소멸지수 산정은 어촌계가 포함된 마을을 기준으로, 면이나 읍지역은 리 단위, 동지역은 통 또는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동해안 6개 시군 중에서 강릉시의 주문진읍의 해당 어촌마을을 제외하고 모든 어촌마을의 인구현황을 조사하였다.

고령화지수는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를 통해 고령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이다. 초고령사회 일수록 노동인력은 적고 복지수요는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소멸지수와 더불어 고령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1) 고성군 어촌마을

고성군은 13개 어촌마을 모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18년(2018년 자료가 없는 경우는 2017년) 기준 소멸위험지수는 봉포, 오호가 0.5 이상 1.0 미만으로 마을소멸 주의단계였고, 나머지는 모두 0.5 미만으로 마을소멸 진입단계이거나 0.2 미만의 마을소멸 고위험 수준이었다. 특히 반암, 동호, 초도는 0.2 미만이었고, 반암은 0.07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의 추이는, 교암이 2014년 0.18에서 2018년 0.19로 증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마을은 모두 감소하였다.

2018년(2018년 자료가 없는 경우는 2017년) 기준 고령화지수는 아야진(12.94), 천진(19.76), 초도(17.82)을 제외하면 모두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로 나타났다. 거진, 교암, 대진, 문암1리는 30%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고성군 어촌마을 소멸위험지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가진	0.47	0.43	0.35	0.41	-
거진	0.27	0.26	0.24	0.23	-
교암	0.18	0.20	0.20	0.20	0.19
대진	0.24	0.25	0.27	0.22	0.21
동호	0.27	0.26	0.29	0.24	0.15
문암1리	0.20	0.18	0.16	0.15	-
반암	0.11	0.07	0.05	0.07	-
봉포	2.00	1.60	1.07	0.89	0.71
아야진	0.29	0.27	0.26	0.23	0.24
오호	0.46	0.49	0.49	0.53	-
천진	0.48	0.50	0.42	0.47	0.41
청간	0.65	0.57	0.50	0.47	0.46
초도	0.25	0.20	0.21	0.17	0.14

자료: 강원도 환경해본부 『수산통계』, 각 연도

〈표 2-11〉 고성군 어촌마을 고령화지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가진	18.80	18.63	19.01	20.56	20.73
거진	25.98	26.88	27.65	28.43	30.00
교암	-	32.31	33.45	34.77	33.22
대진	-	28.66	28.05	28.26	32.49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동호	-	25.49	25.75	26.23	29.47
문암1리	33.33	33.81	34.06	33.10	33.18
반암	28.65	28.72	29.41	26.96	-
봉포	25.71	28.65	28.72	29.41	26.96
아아진	-	10.11	10.08	11.85	12.94
오호	-	26.02	26.33	26.98	27.58
천진	18.45	20.11	19.92	19.92	19.76
청간	-	17.52	17.63	19.03	20.58
초도	-	15.87	16.24	17.67	17.82

자료: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통계』, 각 연도

(2) 속초시 어촌마을

속초시는 6개 어촌마을 모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속초시의 어촌마을은 모두 ‘동’ 지역으로 소멸위험지수는 타 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모두 0.5 미만으로 고위험 진입단계였다. 교동은 0.25로 가장 낮았고, 동명은 0.45로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2014년에는 장사어촌마을은 0.51에서 2018년 0.37로 낮아졌고(소멸 주의에서 소멸 진입으로 변화), 동명어촌마을은 0.39에서 0.45로 오히려 증가했다. 나머지는 모두 시간이 경과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지수는 이미 모든 마을이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로 나타났다. 대포어촌마을은 25.6%로 가장 높았고, 교동은 20.0%로 가장 낮았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교동은 2014년 26.6%에서 2018년 20.0%로 감소했고, 나머지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속초시 어촌마을 고령화지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교동	26.6	29.2	28.7	18.8	20.0
금호	20.0	20.6	21.6	22.6	23.4
대포	20.8	20.5	22.3	23.8	25.6
동명	21.5	22.9	23.0	24.2	21.5
장사	16.2	17.7	19.1	20.2	21.7
청호	20.1	20.9	21.6	23.0	23.9

자료: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통계』, 각 연도

〈표 2-13〉 속초시 어촌마을 소멸위험지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교동	0.28	0.26	0.27	0.29	0.25
금호	0.42	0.41	0.38	0.35	0.33
대포	0.47	0.48	0.40	0.38	0.33
동명	0.39	0.37	0.37	0.34	0.45
장사	0.51	0.46	0.42	0.39	0.37
청호	0.47	0.46	0.45	0.43	0.41

자료: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통계』, 각 연도

(3) 양양군 어촌마을

양양군은 13개 어촌마을 모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18년을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수는 모두 0.5 미만이었다. 인구1리는 0.17로 유일하게 0.2 미만(소멸 고위험)으로 나타났다. 기사문은 0.42로 가장 높았으나 이미 지역소멸 진입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최근 5년의 추이를 보면, 남애1리, 동호, 수산의 지수는 작은 수준이지만 2018년 증가하였고, 물치는 0.30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나머지는 모두 감소하였다.

고령화지수는 모든 마을이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로 나타났다. 광진, 남애2리, 동산리, 동호, 인구1리, 하광정리는 30%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 중에서 남애2리는 33.14%로 가장 높았다. 기사문은 22.34%로 전체 마을 중에서 가장 낮았다. 남애1리와 오산의 고령화지수는 최근 5년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양양군 어촌마을 소멸위험지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광진	0.24	0.24	0.23	0.22	0.23
기사문	0.88	0.78	0.72	0.56	0.42
낙산	0.33	0.23	0.28	0.23	0.27
남애1리	0.29	0.37	0.29	0.30	0.30
남애2리	0.37	0.33	0.35	0.35	0.23
동산리	0.25	0.24	0.18	0.22	0.23
동호	0.21	0.19	0.17	0.20	0.22
물치	0.30	0.29	0.31	0.30	0.30
수산	0.25	0.34	0.29	0.24	0.29
오산	0.24	0.40	0.41	0.38	0.23
인구1리	0.20	0.19	0.21	0.17	0.17
전진2리	0.45	0.28	0.34	0.41	0.36
하광정리	0.27	0.27	0.27	0.27	0.21

자료: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통계』, 각 연도

〈표 2-15〉 양양군 어촌마을 고령화지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광진	34.15	32.56	31.29	32.54	31.82
기사문	14.36	14.57	15.38	18.33	22.34
낙산	23.82	25.71	25.47	25.75	25.75
남애1리	29.17	26.67	26.42	28.04	27.98
남애2리	28.13	27.42	27.57	28.50	33.14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동산리	27.52	29.63	31.44	30.00	30.48
동호	29.95	31.96	29.30	28.44	30.45
물치	23.41	24.26	24.38	25.15	26.24
수산	21.92	21.47	21.47	26.58	26.45
오산	29.17	27.40	28.57	28.38	28.21
인구1리	30.60	29.66	29.94	30.15	31.21
전진2리	19.02	19.46	21.97	26.23	26.61
하광정리	23.65	23.65	23.65	23.65	30.51

자료: 강원도 환경해본부 『수산통계』, 각 연도

(4) 강릉시 어촌마을

강릉시는 주문진어촌마을(소돌, 주문5리, 주문진)을 제외하고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2018년의 소멸위험지수는 남항진 어촌마을(1.09), 영진어촌마을(0.72), 안목(0.72)을 제외하고 모든 마을이 0.5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도직, 심곡, 정동1리는 0.2 미만으로 어촌마을소멸 위험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의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지역소멸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8년의 고령화지수는 남항진(10.17), 영진(15.09), 안목(15.34)을 제외하고 모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지수 7-14% 범위의 고령화사회는 남항진이 유일하였다. 도직, 심곡, 정동1리, 정동은 30%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위험지수는 2014년에는 보통 2, 주의 1, 진입 7, 고위험 2에서 2018년에는 보통 1, 주의 2, 진입 5, 고위험 3으로 소멸위험 수준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시는 이러한 추이가 이미 2014년 이전에 상당부분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령화의 지속 진전, 가임여성의 수의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표 2-16〉 강릉시 어촌마을 소멸위험지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강문	0.38	0.43	0.29	0.19	0.25
금진	0.16	0.19	0.20	0.20	0.26
남향진	1.84	1.59	1.43	1.28	1.09
도직	0.23	0.17	0.15	0.14	0.10
사근진	0.36	0.35	0.36	0.32	0.31
사천진리	0.38	0.40	0.39	0.39	-
심곡	0.07	0.08	0.13	0.14	0.14
안인	0.37	0.35	0.31	0.31	0.33
영진	1.08	0.97	0.89	0.73	0.72
안목	0.92	0.87	0.77	0.75	0.72
정동1리	0.20	0.20	0.20	0.19	0.17
정동	0.37	0.33	0.33	0.30	0.28

자료: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통계」, 각 연도

〈표 2-17〉 강릉시 어촌마을 고령화지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강문	20.97	20.90	24.14	28.57	28.07
금진	35.52	32.36	30.77	28.11	25.78
남향진	9.15	9.54	9.64	10.05	10.17
도직	28.57	28.24	32.14	32.94	35.37
사근진	23.23	24.71	25.11	26.91	28.41
사천진리	23.49	23.53	23.40	23.97	-
심곡	56.07	55.31	49.77	47.39	43.66
안인	24.31	24.16	25.35	25.13	24.55
영진	12.62	13.42	14.05	15.15	15.09
안목	13.13	13.62	14.33	14.86	15.34
정동1리	34.77	34.56	34.32	36.19	35.88
정동	23.49	24.94	25.26	27.99	30.46

자료: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통계」, 각 연도

(5) 동해시 어촌마을

동해시는 5개의 모든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소멸위험지수는 도시지역인 천곡(0.56)을 제외하면 모두 0.5 미만이었고, 대진(0.18)과 어달(0.15)은 0.2 미만으로 마을소멸 고위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곡은 0.56으로 소멸 주의 단계로 안정적인 수준은 아니었다.

고령화지수는 천곡(17.54)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이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암(24.82)을 제외한 어달, 묵호, 대진은 이미 30%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었다.

〈표 2-18〉 동해시 어촌마을 소멸위험지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진	-	0.25	0.20	0.17	0.18
묵호	-	0.27	0.26	0.25	0.23
어달	-	0.17	0.16	0.12	0.15
천곡	0.61	0.74	0.78	0.79	0.56
추암	0.50	0.37	0.32	0.28	0.26

자료: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통계』, 각 연도

〈표 2-19〉 동해시 어촌마을 고령화지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진	-	29.95	30.29	30.92	31.64
묵호	-	29.66	30.53	31.55	32.27
어달	-	34.63	36.28	37.76	37.88
천곡	15.28	14.58	14.95	15.72	17.54
추암	19.91	19.66	22.82	25.17	24.82

자료: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통계』, 각 연도

(6) 삼척시 어촌마을

삼척시는 18개의 모든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18년의 소멸위험지수는 비화(0.23), 장호1리(0.24), 호산(0.24), 후진(0.27)을 제외한 모든 마을이 0.2 미만으로 나타나 마을소멸 고위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화는 0.08로 가장 낮았다. 소멸위험지수의 추이는 장호1리, 초곡, 호산은 2014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낮아졌다.

삼척시의 어촌마을은 전체적으로 소멸위험지수가 낮은 만큼 고령화지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어촌마을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나타났고, 갈남, 노곡, 대진, 신남, 초곡은 40%를 넘었다.

〈표 2-20〉 삼척시 어촌마을 소멸위험지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갈남	0.18	0.17	0.19	0.11	0.11
광진	0.21	0.18	0.17	0.16	0.15
궁촌	0.14	0.16	0.16	0.13	0.13
노곡	0.12	0.17	0.15	0.10	0.10
대진	0.15	0.12	0.12	0.11	0.10
덕산	0.18	0.17	0.17	0.17	0.16
비화	0.30	0.27	0.30	0.25	0.23
신남	0.09	0.07	0.08	0.13	0.11
오분	0.28	0.25	0.18	0.18	0.12
용화	0.09	0.10	0.12	0.09	0.08
임원	0.22	0.20	0.15	0.15	0.16
장호1리	0.22	0.22	0.24	0.24	0.24
장호2리	0.12	0.15	0.17	0.17	0.18
정라	0.20	0.18	0.17	0.13	0.11
증산	0.32	0.15	0.16	0.17	0.17
초곡	0.09	0.12	0.12	0.14	0.14
호산	0.23	0.26	0.26	0.23	0.24
후진		0.30	0.27	0.29	0.27

자료: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통계』, 각 연도

〈표 2-21〉 삼척시 어촌마을 고령화지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갈남	39.47	41.43	41.74	42.11	43.14
광진	29.74	29.48	31.17	29.34	29.63
궁촌	35.19	35.76	35.67	37.42	36.86
노곡	39.16	41.77	44.22	49.60	49.22
대진	37.70	38.81	39.29	40.63	41.97
덕산	36.19	37.07	37.09	36.98	38.53
비화	20.00	20.75	19.23	23.08	26.53
신남	46.58	45.24	43.60	42.60	43.11
오분	30.55	30.60	30.88	33.10	35.85
용화	33.95	33.55	31.29	34.34	38.65
임원	29.51	30.80	32.22	33.58	33.46
장호1리	27.78	27.54	29.24	27.47	28.25
장호2리	29.20	27.05	28.45	29.88	30.77
정라	31.49	32.87	34.61	35.79	38.64
증산	35.48	31.25	30.43	34.06	36.36
초곡	44.35	45.20	45.38	45.45	44.00
호산	27.18	27.10	30.05	30.00	29.59
후진	23.94	22.89	23.56	25.76	25.13

자료: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통계』, 각 연도

(7) 지역별 소멸위험지수 및 고령화율 비교

시·도별 고령화율과 소멸위험지수를 살펴보기 위해, 2017년 주민등록인구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수를 계산하여 비교를 실시하였다.

강원도 지역의 고령화율은 21.9%로, 어업활동이 많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와 함께 20%가 넘는 고령화율을 보여주고 있어 어촌사회에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소멸위험지수를 살펴보면, 강원도는 연안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시·도 중 5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도

일부지역의 경우, 고속도로 등의 접근성 개선 및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인구의 유입효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은 지수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여전히 소멸 위험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2-22〉 연안시·도별 소멸위험지수 및 고령화율

시·도	소멸위험지수	고령화율(%)
강원도	0.42	21.9
경기도	0.87	13.0
경상남도	0.69	16.2
경상북도	0.40	23.0
부산광역시	0.77	16.2
울산광역시	1.25	10.4
인천광역시	0.91	13.4
전라남도	0.39	24.2
전라북도	0.31	27.0
제주특별자치도	0.67	17.0
충청남도	0.36	24.2

자료: 저자 작성

3) 어촌계의 여건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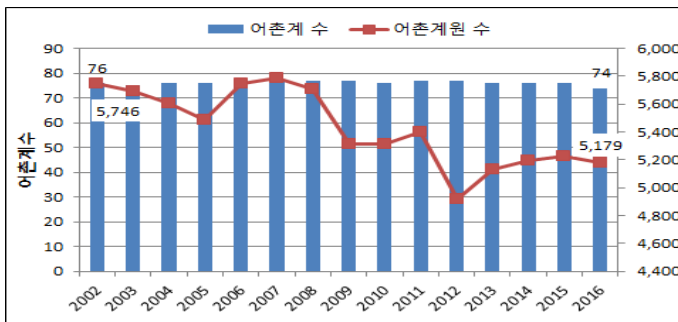
어촌계는 최근 어촌계원 수의 감소로 없어지는 어촌계도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 동해안의 어촌계는 77개까지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2017년에는 74개로 다소 감소하였다. 어촌계원의 수는 강원도 환동해본부 통계에 따르면 2002년 5,746명에서 2017년 4,616명으로 1,130명이 감소하였다. 다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강원도 어업인으로 집계한 어업인은 2017년 3,040명으로 강원도 통계와는 오차가 있다.

수협중앙회 『어촌분류평정 및 현황』에 의하면 강원도 어촌계의 계원 수는 강원도 통계에 비해 더 적었다. 2015년, 2016년의 경우, 강원도

통계에서는 각각 5,229명, 5,179명이었지만, 수협중앙회 자료에서는 각각 5,039명, 4,493명이었다. 2016년의 경우는 689명의 오차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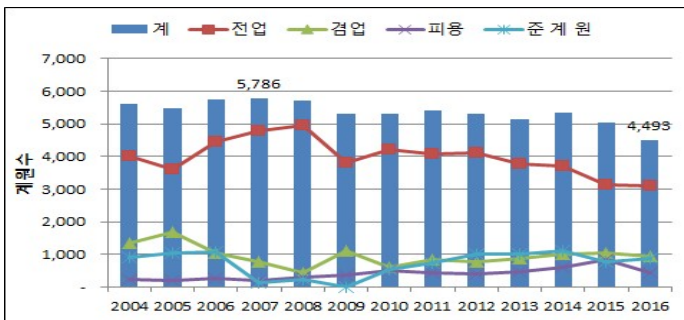
어촌계원의 직업에 따른 구성원들의 추이를 보면, 전업은 2008년까지 증가하여 4,961명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감소하여 2016년에는 3,112명으로 감소했다. 겸업은 증감을 반복하면서 1,000명 내외였고, 피용은 최근 증가하여 2015년에는 840명까지 증가하였다. 준계원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1,000여명 내외를 보였다. 이상과 같이 어촌계원은 전업에서 1,800여명의 감소가 발생하여, 어촌계원 감소를 주도하였다.

〈그림 2-6〉 어촌계 및 어촌계원수 추이



자료: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통계』, 각 연도

〈그림 2-7〉 어촌계원 구성 추이



자료: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통계』, 각 연도; 수협중앙회, 『어촌분류평정 및 현황』, 각 연도(2015~2016)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에는 삼척 2개, 속초 2개, 고성 2개 및 기타 1개씩 모두 9개의 수협이 있고, 각 수협별로 어촌계가 74개 있다. 2012년 대비 2017년의 어촌계 수 및 어촌계원 수를 비교하여 변동양상을 파악하였다. 다만, 2017년 현재까지도 어촌계원 중에는 실제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상당수의 계원이 포함되어 있어 어촌계원의 변동성은 다소 부정확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어촌계 수는 2012년 77개소에서 2017년 74개소로 3개소가 줄었다. 이는 삼척시의 LNG 기지 건설, 화력발전소 건립으로 2016년에 3개소의 어촌계가 소멸하였기 때문이다. 어촌계원의 수는 2012년 4,917명에서 2017년 4,616명으로 301명 감소하였다. 감소율은 6.1%였다.

시군별로, 어촌계원이 증가한 곳은 강릉시, 고성군 두 곳이었으며, 각각 2012년 대비 2017년에는 85명, 102명이 증가했고, 증가율은 각각 11.3%, 4.2%였다. 나머지 시군은 모두 감소했다. 동해시는 202명, 속초는 38명, 삼척은 49명, 양양은 66명 감소했고, 감소율은 각각 -39.9%, -7.7%, -8.9%, -16.8%로 동해시, 양양군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강릉시에는 13개소의 어촌계가 있고, 주문진리 어촌계, 영진 어촌계, 경포사근진 어촌계, 정동진 어촌계는 어촌계원이 증가했고, 나머지는 변동 없거나 감소하였다. 어촌계원이 증가한 어촌계 중에서는 주문진리 어촌계가 1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가율도 40.9%로 가장 높았다. 감소한 어촌계 중에서 감소한 계원은 주문5리 어촌계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소율은 안목 어촌계가 -36.3%로 가장 높았다.

동해시는 금진 어촌계를 제외하면 모든 어촌계는 계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진 어촌계는 19명이 증가했고, 증가율은 46.3%였다. 감소한 어촌계 중에서는 묵호 어촌계가 179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감소율도 -60.7%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어달 어촌계가 31명 감소, -48.4%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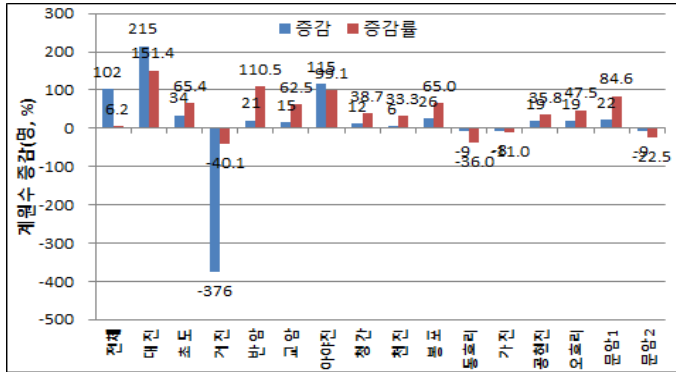
속초시는 8개소의 어촌계가 있고, 3명이 증가한 교동을 제외하면 모든 어촌계가 계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한 계원 수로는 청호 어촌계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금호 어촌계가 15명으로 많았다. 감소율은 금호 어촌계가 -18.5%로 가장 높았다.

삼척시에는 동해안 시군 중에서는 어촌계가 가장 많은 22개소가 있다. 어촌계원이 증가한 어촌계는 증산 어촌계, 오분 어촌계, 대진 어촌계, 장호 어촌계, 추암 어촌계, 작진 어촌계였고 나머지 어촌계는 감소하였다. 호산, 월천, 고포 어촌계는 LNG 기지 및 발전소 건립으로 소멸되었다. 어촌계원이 증가한 어촌계 중에서는 장호 어촌계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가율은 추암이 90%로 가장 높았다. 감소한 어촌계 중에서는 정라 어촌계가 63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감소율은 노곡 어촌계가 -48.7%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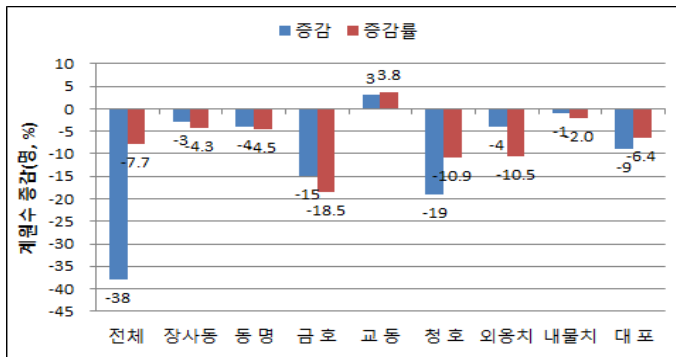
고성군은 동해안 6개 시군 중에서는 어촌계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으로 102명이 증가했고, 증가율은 6.2%였다. 고성군에는 15개소의 어촌계가 있고, 거진 어촌계, 동호리 어촌계, 가진 어촌계, 문암2리 어촌계를 제외하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한 어촌계 중에서는 대진 어촌계가 2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아야진이 115명으로 많았다. 증가율로는 대진 어촌계가 151.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반암 어촌계가 110.5%로 높았다. 감소한 어촌계 중에서는 거진 어촌계가 3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소율도 -40.1%로 가장 높았다.

양양군은 13개소의 어촌계가 있고 오산리 어촌계를 제외하면 모든 어촌계가 계원이 변동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산리 어촌계의 경우도 증가는 4명으로 많지 않았다. 감소한 어촌계 중에서는 남애 2리 어촌계가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수산리 어촌계가 16명으로 많았다. 감소율로는 수산리가 -47.1%, 남애2리가 -31.8%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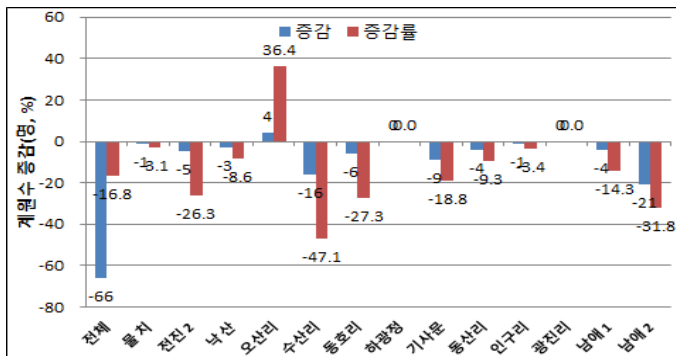
〈그림 2-8〉 강원도 지역·어촌계별 어촌계원 변동



〈고성군 어촌계원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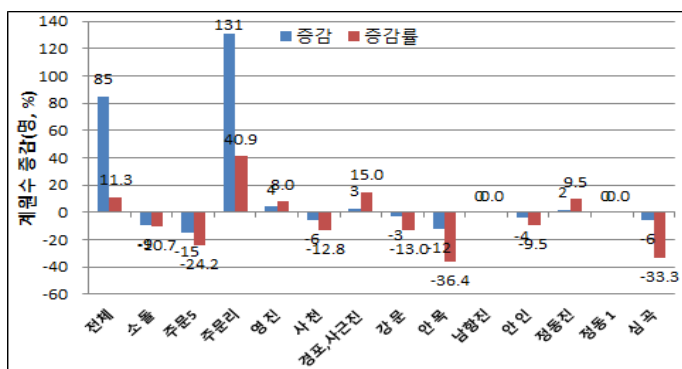


〈속초시 어촌계원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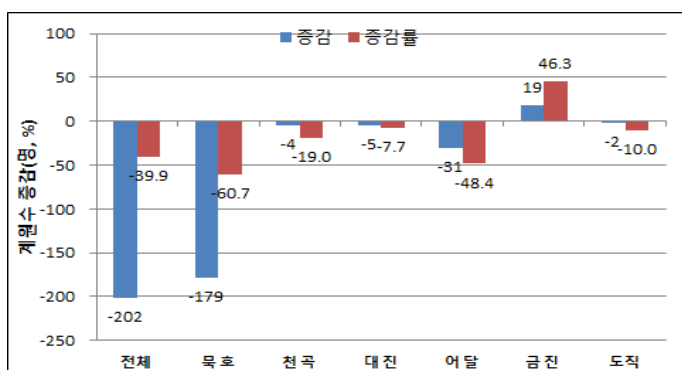


〈양양군 어촌계원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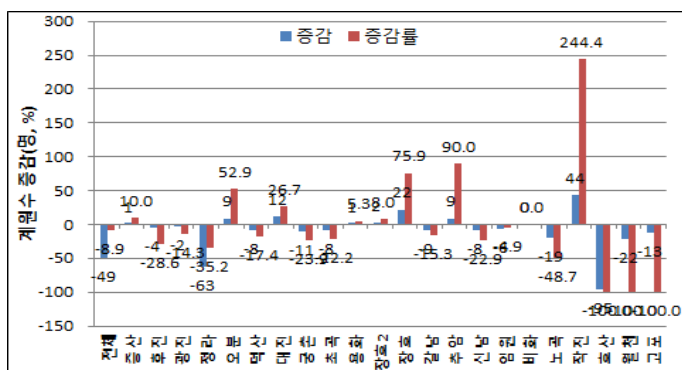
〈그림 2-8〉 강원도 지역·어촌계별 어촌계원 변동(계속)



〈강릉시 어촌계원 변동〉



〈동해시 어촌계원 변동〉



〈삼척시 어촌계원 변동〉

어촌계별 증감을 요약하면, 어촌계원의 두드러진 증가는 고성군 대진 어촌계가 215명, 강릉시 주문진리 어촌계가 131명, 아야진 어촌계가 115명 순으로 많았고, 나머지는 44명 이하였다. 증가율은 작진 어촌계가 244.4%, 대진 어촌계가 151.4%, 아야진 어촌계가 99.1%, 추암 어촌계 90.0% 순으로 높았다. 어촌계원의 두드러진 감소는 고성군 거진 어촌계가 376명, 동해시 묵호 어촌계가 179명, 정라 어촌계가 63명 순으로 많았고, 나머지는 31명 이하였다. 감소율은 묵호 어촌계가 60.7%, 노곡 어촌계가 48.7%, 어달 어촌계가 48.4%, 거진 어촌계가 40.1%, 수산리 어촌계가 47.1%, 안목 어촌계가 36.4%, 정라 어촌계가 35.2%, 심곡 어촌계가 33.3%, 남애2리 어촌계가 31.8% 순으로 높았다. 거진 어촌계, 묵호 어촌계, 정라 어촌계 등 어촌계원 수가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감소율이 높은 어촌계에 대해서는 어촌계원 감소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진단을 통해 어촌계원 감소 완화 및 방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어촌계원 수는 앞서 밝혀두었듯이 현재 활동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망한 경우, 전출한 경우 등 다수가 어촌계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어업활동을 하는 정회원 중심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어촌계원이 대폭 감소한 경우는 어촌계원이 정비되면서 나타난 결과인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23〉 시군 어촌계원 감소율(20% 이상, 2012~2017년)

구분	어촌계	어촌계원 감소율(%)	어촌계원 감소(명)
고성군	거진	-40.1	-376
	동호리	-36.0	-9
	문암2	-22.5	-9
양양군	수산리	-47.1	-16
	남애2	-31.8	-21

구분	어촌계	어촌계원 감소율(%)	어촌계원 감소(명)
양양군	동호리	-27.3	-6
	전진2	-26.3	-5
강릉시	안 목	-36.4	-12
	심 곡	-33.3	-6
	주문5	-24.2	-15
동해시	묵 호	-60.7	-179
	어 달	-48.4	-31
삼척시	노 곡	-48.7	-19
	정 라	-35.2	-63
	후 진	-28.6	-4
	궁 촌	-23.9	-11
	신 남	-22.9	-8
	초 곡	-22.2	-8

자료: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통계』, 각 연도

제3절 강원도 어촌지역 인구전망

1. 강원도 어촌지역 인구추계

1) 인구추계 방법(Hamilton-Perry 모형, H-P 모형)

인구추계를 위해 통계청 및 여러 연구에서 활용되는 인구추계 방법으로 코호트 조성법(Cohort-component method)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구추계에 필요한 요인들(시점별 출생, 사망, 인구이동)에 대한 자세한 자료들이 요구된다. 통계청의 경우, 시·군·구 단위별 출생률, 사망률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이 방법을 활용한 인구추계가 가능하나, 시·군·구보다 작은 규모인 읍·면·동 단위의 인구를 추계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의 인구추계 시 한계가 발생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Hamilton과 Perry에 의해 1962년 새로운 추계방법이 제안되었으며 소규모 지역단위의 인구추계를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다.

H-P 모형은 코호트 조성법에서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복잡한 과정을 거쳐 추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최근 조사된 두 센서스 기간의 연령별 변화율을 사용하여 추계한다. 두 기간 간의 연령별 변화율(코호트 변화비, Cohort-change ratio)이 다음 번 센서스에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인구를 추계하는 방법으로, 이 가정에는 i) 인구에 대한 정의 또는 추계하고자 하는 지역의 경계가 변하지 않고, ii) 세부 연령별 사망률과 이동률이 변하지 않으며, iii) 과거 센서스에서의 추계 오차가 향후 센서스에서도 동일하다는 세부적 가정들이 포함되어 있다.³⁾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인구 추계를 위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값이 연령별 변화율(CCR)이며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CCR_{x \sim x+n} = \frac{P_{x+y \sim x+y+n, t+y}}{P_{x \sim x+n, t}}$$

$P_{x \sim x+n, t}$ 는 두 기간의 인구조사시점 중 처음에 집계된 시점(t)의 x 세부터 $x+n$ 세 미만 연령대의 인구수이고, $P_{x+y \sim x+y+n, t+y}$ 는 나중에 집계된 시점($t+y$)의 $x+y$ 세에서 $x+y+n$ 세 미만 연령대의 인구수를 의미하며, 여기서 y 는 두 인구조사시점 간의 연도차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인구추계 시 통계청 인구총조사를 사용하거나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구총조사의 경우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추계를 위해 강원도 어촌

3) Hamilton and Perry(1962), pp. 163-170.

마을의 주민등록인구자료를 사용하였으나, 자료 제약으로 인해 2014~2017년까지의 1세별 인구자료만을 확보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추계를 3세 단위로 추정을 실시하였다. 3세 단위별 추정을 위한 연령별 변화율 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CCR_{x \sim x+2} = \frac{P_{x+3 \sim x+3+2, t+3}}{P_{x \sim x+2, t}} = \frac{P_{x+3 \sim x+5, t+3}}{P_{x \sim x+2, t}}$$

이렇게 산출된 연령별 변화율의 활용하여 다음 시점의 인구를 추계하게 되는데 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P_{x+y \sim x+y+n, t+3} = CCR_{x \sim x+2} \times P_{x \sim x+2, t}$$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연령별 변화율로 추계할 수 없는 0~2세 및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84세 이상)에 대한 인구추계이다. Hamilton and Perry(1962)는 이를 위해 최근시점과 그 이전 시점 간의 출생아수와 가장 최근 시점에서 추계시점까지의 출생아수의 비율을 최근시점의 0~4세⁴⁾ 인구에 곱하여 추계를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최근시점과 추계시점사이의 출생아수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가임연령의 여성인구와 연령별 출산율을 통해 산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소규모 지역의 경우는 이러한 연령별 출산율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추계를 하는 데 있어 한계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Smith, Tayman, and Swanson(2001)은 인구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어린이-가임기 여성비율(Child-Woman Ratio, CWR)⁵⁾을 구하여

4) 5세별 인구추계인 경우 0~4세이지만, 본 연구는 3세별 인구추계이기 때문에 0~2세 인구추계를 실시함

5) Smith, Tayman, and Swanson(2001), p. 78.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0~4세 인구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남녀를 구분하여 추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의 특성상 0~2세 인구추계를 위한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FP_{0 \sim 2, t} = \left(\frac{FP_{0 \sim 2, t-3}}{FP_{15 \sim 50, t-3}} \right) \times FP_{15 \sim 50, t}^{6)}$$

$$MP_{0 \sim 2, t} = \left(\frac{MP_{0 \sim 2, t-3}}{FP_{15 \sim 50, t-3}} \right) \times FP_{15 \sim 50, t}$$

또한 84세 이상의 인구추계를 위해서 최근시점의 84세 이상 인구와 이전시점의 81세 이상 인구의 변화율을 최근시점의 81세 이상 인구에 곱해줌으로써 산출하도록 하였다. 84세 이상 연령의 인구추계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⁷⁾

$$P_{85^+, t+3} = \left(\frac{P_{84^+, t}}{P_{81 \sim 83, t-3} + P_{85^+, t-3}} \right) \times (P_{81 \sim 83, t} + P_{84^+, t})$$

본 연구에서 연안지역의 읍·면·동 단위의 인구추계를 위해 위의 추계 방법을 통해 전 연령대의 인구추계를 실시하였으며, 남녀 구분 인구추계를 통해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H-P 모형에서 인구추계를 위해 사용되는 연령별 변화율(코호트 변화비)은 두 시점 간의 이동과 사망이 발생한 결과값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과 사망에 대한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지 않는다.⁸⁾ 따라서

6) 가임기여성의 연령을 기존연구에서는 15~49세의 자료를 활용하나, 본 연구는 3세 단위 인구추계이기 때문에 15~50세 자료를 활용함

7) Smith, Tayman, and Swanson, *op. cit.*, pp. 156~158.

8) 이지연(2005), p. 10.

정확한 연령별 자료를 구하기 힘든 소규모 지역, 특히 국내의 읍면동 지역의 인구추계를 할 경우, 이 방법을 활용하면 인구추계가 가능해진다. 즉, 인구추계의 요인인 출생, 사망, 인구이동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연령별 인구추계를 위해 복잡한 산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상립, 조영태(2005), Smith and Tayman(2003), 이지연(2005) 등의 연구에서 H-P기법을 활용한 실증분석에서 코호트 조성법보다 인구추계 오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H-P 모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한계점은 두 시점 간 인구 변화가 어떠한 요인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변할 경우, 인구추계가 과대 추정되거나 과소 추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오차는 추계 기간이 길어질수록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의 경우는 인구추계 정확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추계를 2041년까지만 실시하였으며, 연령별 변화율이 평균치보다 크게 나타나는 값들은 변화율 최댓값 설정을 통해 과대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였다.⁹⁾

본 연구에서 인구추계를 위해 강원도에서 제공 받은 66개의 어촌마을의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중 3개 지역¹⁰⁾은 제공자료의 기간이 짧아 활용이 불가능하였고, 1개 지역(정라어촌마을)은 인구자료 기준이 2014년과 2017년이 달라 추계에서 제외하여 62개 지역에 대한 인구추계를 실시하였다.

9) 연령별 변화율 값이 3을 넘으면 두 시점 간의 차이 값으로 반영하도록 하였고, 특히 84세 이상의 경우는 인구이동 및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여 변화율 값이 2를 넘을 경우 두 시점 간의 차이 값으로 계산함

10) 제외지역은 동해시 대진동, 묵호동, 어달동으로 2014년 인구자료를 확보하지 못함

2) 인구추계 결과

인구추계 결과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총 26개 지역으로 인구증가가 가장 큰 지역은 대부분 시지역(강릉시, 속초시, 삼척시)의 동지역이거나 최근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양양군(서핑), 삼척시(레일바이크)의 어촌마을 또는 바다 휴양지로 유명한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시지역이라도 마을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마을단위 활성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4〉 강원도 어촌마을 인구추계

어촌마을	2017	2020	2023	2026	2029	2032	2035	2038	2041
금진어촌마을	625	572	525	483	446	413	380	348	319
남향진어촌마을	786	865	1,002	1,202	1,421	1,595	1,761	1,921	2,142
도직어촌마을	85	93	98	98	100	103	106	105	94
사천진리어촌마을	730	704	676	635	603	568	525	481	446
심곡어촌마을	211	190	178	172	172	155	153	148	139
안목어촌마을(송정동)	3,965	4,198	4,423	4,651	4,884	5,116	5,374	5,621	5,869
안목어촌마을(견소동)	3,377	3,187	2,996	2,805	2,614	2,433	2,257	2,084	1,912
안인어촌마을	569	528	497	461	421	379	340	307	267
영진어촌마을	3,789	3,820	3,844	3,858	3,877	3,881	3,865	3,835	3,793
정동1리어촌마을	268	257	235	215	200	179	165	149	135
정동어촌마을	368	409	450	493	501	531	609	698	889
가진어촌마을	468	452	433	426	418	412	396	383	376
거진어촌마을	4,726	4,425	4,110	3,793	3,494	3,205	2,914	2,620	2,339
교암어촌마을	283	289	299	309	317	310	305	289	294
대진어촌마을	1,219	1,161	1,096	1,031	967	910	843	767	685
동호어촌마을	285	295	311	316	327	337	336	344	344
문암1리어촌마을	436	464	495	519	551	584	613	628	626
반암어촌마을	204	236	264	296	361	435	531	677	858
봉포어촌마을	1,090	945	889	875	826	849	922	913	841

어촌마을	2017	2020	2023	2026	2029	2032	2035	2038	2041
아아진어촌마을	1,406	1,360	1,294	1,233	1,158	1,086	1,028	966	892
오호어촌마을	754	761	768	765	767	771	764	742	713
천진어촌마을	852	870	878	882	888	904	911	912	912
청간어촌마을	679	739	765	811	884	940	1,030	1,091	1,172
초도어촌마을	340	319	317	322	324	328	333	332	325
천곡동어촌마을	299	324	336	365	410	454	490	576	668
추암동어촌마을	143	103	83	66	52	43	38	35	33
갈남어촌마을	204	206	202	195	187	168	149	128	114
광진어촌마을	167	155	140	135	129	116	108	99	87
궁촌어촌마을	497	480	485	499	519	517	463	396	337
노곡어촌마을	125	105	91	80	69	58	50	43	35
대진어촌마을	768	709	643	582	528	476	429	377	327
덕산어촌마을	576	531	484	432	397	358	324	284	252
비화어촌마을	52	56	55	52	50	51	51	54	57
신남어촌마을	167	166	166	155	149	146	139	129	120
오분어촌마을	429	329	248	187	140	103	74	53	38
용화어촌마을	82	83	90	90	96	103	116	131	147
임원어촌마을	547	531	507	474	441	413	377	348	311
장호1리어촌마을	182	240	301	392	532	767	1,059	1,403	1,733
장호2리어촌마을	241	242	230	229	217	184	152	127	102
증산어촌마을	138	162	185	206	229	247	256	252	255
초곡어촌마을	242	245	239	239	227	209	195	174	150
호산어촌마을	190	189	212	252	302	386	387	387	288
후진어촌마을	198	220	245	276	307	327	345	387	458
교동어촌마을	326	297	272	253	227	202	180	154	132
금호어촌마을	6,895	6,468	6,029	5,578	5,141	4,708	4,299	3,898	3,508
대포동어촌마을	1,471	1,428	1,392	1,351	1,293	1,239	1,185	1,130	1,072
동명어촌마을	4,327	4,936	5,621	6,455	7,475	8,666	10,028	11,555	13,316
장사어촌마을	4,927	4,968	5,005	5,039	5,073	5,103	5,132	5,160	5,184
청호어촌마을	4,444	4,505	4,561	4,615	4,669	4,717	4,762	4,804	4,842
광진리어촌마을	295	344	387	453	531	618	684	753	932
기사문어촌마을	311	280	257	237	222	199	181	148	123

어촌마을	2017	2020	2023	2026	2029	2032	2035	2038	2041
낙산어촌마을	365	343	312	293	273	260	235	210	196
남해1리어촌마을	189	198	204	219	229	240	245	242	226
남해2리어촌마을	193	202	214	232	249	265	269	270	267
동산리어촌마을	230	223	215	200	185	173	158	142	127
동호어촌마을	225	272	328	382	432	491	559	706	879
물치어촌마을	660	637	611	578	548	516	461	422	381
수산어촌마을	158	190	221	224	225	238	251	263	276
오산어촌마을	74	74	81	79	63	65	64	64	60
인구1리어촌마을	325	368	410	459	509	552	579	618	635
전진2리어촌마을	122	92	74	60	52	39	33	30	29
하광정어촌마을	443	384	352	324	298	264	242	212	182

자료: 저자 작성

2. 인구추계에 따른 강원도 어촌사회 변화

1) 지역소멸위험지수

지역소멸위험지수를 살펴보면 2017년 소멸지수가 0.2 미만인 소멸 고위험지역이 22개에서 2041년 51개 지역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멸위험지수가 0인 지역도 9개로 강원도의 지역소멸 위험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41년 소멸위험지수가 1이 넘는 지역은 2개 지역으로, 향후 강원도 전체의 지역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2-25〉 강원도 어촌마을 지역소멸위험지수

어촌마을	2017	2020	2023	2026	2029	2032	2035	2038	2041
금진어촌마을	0.14	0.10	0.07	0.07	0.05	0.04	0.03	0.02	0.01
남향진어촌마을	1.14	0.95	1.34	2.13	2.82	3.21	3.06	2.96	2.43
도직어촌마을	0.15	0.13	0.04	0.03	0.03	0.03	0.00	0.01	0.02

어촌마을	2017	2020	2023	2026	2029	2032	2035	2038	2041
사천진리어촌마을	0.39	0.42	0.40	0.31	0.27	0.19	0.20	0.13	0.15
심곡어촌마을	0.15	0.21	0.23	0.22	0.16	0.17	0.08	0.04	0.02
안목어촌마을(송정동)	0.54	0.50	0.46	0.43	0.39	0.36	0.33	0.33	0.33
안목어촌마을(견소동)	1.04	0.73	0.50	0.39	0.34	0.29	0.24	0.20	0.18
안인어촌마을	0.29	0.27	0.17	0.11	0.06	0.05	0.03	0.01	0.01
영진어촌마을	0.72	0.47	0.35	0.31	0.27	0.26	0.23	0.20	0.16
정동1리어촌마을	0.20	0.14	0.08	0.06	0.04	0.02	0.05	0.07	0.10
정동어촌마을	0.30	0.15	0.10	0.06	0.02	0.01	0.00	0.00	0.00
가진어촌마을	0.40	0.39	0.25	0.31	0.28	0.29	0.34	0.38	0.45
거진어촌마을	0.21	0.17	0.13	0.09	0.08	0.06	0.06	0.05	0.05
교암어촌마을	0.20	0.24	0.30	0.34	0.36	0.45	0.30	0.34	0.40
대진어촌마을	0.22	0.19	0.17	0.14	0.10	0.07	0.06	0.05	0.05
동호어촌마을	0.25	0.29	0.25	0.23	0.26	0.24	0.16	0.21	0.24
문암1리어촌마을	0.15	0.15	0.14	0.10	0.07	0.07	0.06	0.07	0.06
반암어촌마을	0.04	0.04	0.01	0.03	0.02	0.03	0.04	0.04	0.03
봉포어촌마을	0.88	0.40	0.24	0.19	0.13	0.08	0.14	0.13	0.11
아야진어촌마을	0.23	0.17	0.12	0.08	0.07	0.07	0.10	0.13	0.15
오호어촌마을	0.47	0.42	0.39	0.38	0.34	0.27	0.22	0.17	0.14
천진어촌마을	0.47	0.45	0.37	0.27	0.22	0.18	0.12	0.07	0.04
청간어촌마을	0.47	0.44	0.37	0.30	0.28	0.18	0.17	0.15	0.15
초도어촌마을	0.16	0.13	0.09	0.04	0.01	0.01	0.03	0.04	0.05
천곡동어촌마을	0.71	0.77	0.75	0.98	0.85	0.58	0.46	0.61	0.73
추암동어촌마을	0.29	0.25	0.10	0.06	0.07	0.08	0.08	0.07	0.07
갈남어촌마을	0.08	0.03	0.01	0.01	0.01	0.01	0.01	0.01	0.01
광진어촌마을	0.15	0.13	0.12	0.12	0.08	0.00	0.00	0.00	0.00
궁촌어촌마을	0.13	0.10	0.05	0.02	0.01	0.01	0.00	0.00	0.00
노곡어촌마을	0.10	0.10	0.08	0.06	0.03	0.03	0.04	0.04	0.06
대진어촌마을	0.12	0.10	0.07	0.03	0.03	0.03	0.03	0.02	0.01
덕산어촌마을	0.17	0.22	0.21	0.20	0.26	0.18	0.17	0.13	0.09
비화어촌마을	0.30	0.34	0.25	0.14	0.00	0.00	0.00	0.00	0.00
신남어촌마을	0.11	0.19	0.22	0.30	0.39	0.35	0.24	0.09	0.16
오분어촌마을	0.15	0.13	0.09	0.10	0.11	0.07	0.03	0.02	0.01
용화어촌마을	0.15	0.17	0.19	0.21	0.24	0.29	0.38	0.57	0.73
임원어촌마을	0.16	0.11	0.12	0.12	0.12	0.11	0.10	0.10	0.10

어촌마을	2017	2020	2023	2026	2029	2032	2035	2038	2041
장호1리어촌마을	0.22	0.21	0.15	0.10	0.06	0.02	0.01	0.00	0.00
장호2리어촌마을	0.18	0.26	0.32	0.33	0.23	0.14	0.03	0.01	0.01
증산어촌마을	0.18	0.16	0.14	0.13	0.10	0.14	0.07	0.06	0.09
초곡어촌마을	0.12	0.18	0.21	0.21	0.20	0.13	0.07	0.02	0.03
호산어촌마을	0.22	0.22	0.21	0.21	0.13	0.14	0.08	0.03	0.02
후진어촌마을	0.23	0.13	0.11	0.08	0.10	0.06	0.03	0.03	0.02
교동어촌마을	0.30	0.21	0.16	0.08	0.05	0.06	0.04	0.04	0.05
금호어촌마을	0.33	0.26	0.20	0.17	0.15	0.13	0.11	0.09	0.08
대포동어촌마을	0.37	0.26	0.22	0.15	0.11	0.08	0.06	0.05	0.05
동명어촌마을	0.44	0.44	0.41	0.38	0.37	0.38	0.36	0.43	0.51
장사어촌마을	0.35	0.28	0.23	0.18	0.15	0.12	0.10	0.07	0.06
청호어촌마을	0.42	0.31	0.24	0.18	0.14	0.12	0.09	0.07	0.06
광진리어촌마을	0.20	0.21	0.09	0.01	0.01	0.01	0.01	0.03	0.06
기사문어촌마을	0.54	0.21	0.15	0.12	0.11	0.08	0.09	0.08	0.09
낙산어촌마을	0.22	0.17	0.08	0.05	0.03	0.02	0.01	0.01	0.00
남해1리어촌마을	0.29	0.28	0.20	0.10	0.10	0.05	0.04	0.04	0.05
남해2리어촌마을	0.33	0.37	0.26	0.22	0.22	0.32	0.32	0.41	0.37
동산리어촌마을	0.23	0.19	0.11	0.06	0.04	0.01	0.00	0.00	0.00
동호어촌마을	0.18	0.32	0.75	1.07	1.27	1.31	1.27	1.33	1.13
물치어촌마을	0.28	0.29	0.27	0.23	0.32	0.33	0.30	0.27	0.26
수산어촌마을	0.26	0.42	0.47	0.60	0.70	0.90	0.92	0.35	0.16
오산어촌마을	0.30	0.40	0.69	0.45	0.00	0.00	0.00	0.00	0.00
인구1리어촌마을	0.16	0.16	0.13	0.04	0.03	0.01	0.01	0.00	0.01
전진2리어촌마을	0.34	0.21	0.11	0.07	0.07	0.02	0.00	0.00	0.00
하광정어촌마을	0.19	0.10	0.13	0.19	0.17	0.12	0.18	0.12	0.05

자료: 저자 작성

2) 고령화율

강원도 어촌마을의 고령화율을 살펴보면 2017년 고령화율이 20%가 넘는 어촌지역이 49개 지역으로 이미 대부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41년에는 56개 마을로 고령화율이 매우 심화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70%가 넘는 마을도 18개 지역으로 나타나 미래의 젊은 세대 부족으로 인한 강원도 어촌지역의 침체가 매우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6〉 강원도 어촌마을 고령화율

단위 : %

어촌마을	2017	2020	2023	2026	2029	2032	2035	2038	2041
금진어촌마을	33.1	41.8	49.9	57.8	66.9	72.7	77.4	82.9	88.0
남향진어촌마을	9.8	10.2	10.9	10.7	10.1	9.8	10.7	10.8	12.0
도직어촌마을	31.8	33.3	51.5	65.6	70.1	75.7	79.0	81.4	77.8
사천진리어촌마을	21.5	23.3	25.7	29.7	32.3	33.1	30.9	30.8	30.5
심곡어촌마을	45.5	39.3	31.9	28.3	26.2	28.2	28.8	41.7	42.0
안목어촌마을(송정동)	16.7	18.4	20.7	23.2	25.0	26.0	27.0	27.6	28.2
안목어촌마을(견소동)	10.1	12.3	15.3	18.7	21.8	24.8	28.8	33.5	37.8
안인어촌마을	23.9	25.5	30.6	36.3	43.9	48.2	53.7	58.3	59.1
영진어촌마을	13.8	16.5	20.1	24.0	26.9	30.0	34.7	38.5	43.8
정동1리어촌마을	34.0	34.9	40.7	46.4	49.9	52.0	53.4	58.2	61.3
정동어촌마을	25.0	37.5	44.2	51.3	55.9	61.1	70.0	73.5	71.6
가진어촌마을	19.7	22.2	27.2	31.7	35.5	35.3	39.7	38.8	37.5
거진어촌마을	28.0	31.9	37.3	43.7	49.2	52.7	56.3	59.7	62.1
교암어촌마을	31.1	33.5	36.1	37.0	35.8	38.9	38.2	39.3	34.8
대진어촌마을	30.1	35.2	41.2	47.8	54.1	58.3	60.2	60.3	60.5
동호어촌마을	27.7	27.9	30.8	33.2	33.9	33.5	38.2	38.2	36.6
문암1리어촌마을	31.2	29.6	28.2	31.2	35.3	34.2	36.6	39.4	47.6
반암어촌마을	26.0	29.1	33.3	38.3	46.9	52.9	59.6	66.6	72.2
봉포어촌마을	12.0	16.4	19.5	22.8	27.2	26.5	23.8	23.2	24.6
아야진어촌마을	25.7	29.7	33.7	39.0	41.8	42.2	42.8	43.6	42.8
오호어촌마을	19.0	21.9	24.8	27.8	30.7	33.2	36.6	38.8	38.3
천진어촌마을	17.8	18.9	20.6	24.8	27.3	29.8	34.1	35.3	39.0
청간어촌마을	15.9	18.1	21.8	27.1	32.2	37.6	43.9	52.3	56.9
초도어촌마을	30.3	34.1	36.6	37.2	38.5	35.1	30.2	27.2	24.7
천곡동어촌마을	14.0	15.6	19.0	18.4	17.5	17.8	17.7	15.9	13.5
추암동어촌마을	24.5	25.7	33.1	43.8	54.3	64.6	70.0	80.5	88.2

단위 : %

어촌마을	2017	2020	2023	2026	2029	2032	2035	2038	2041
갈남어촌마을	42.2	41.8	45.9	48.3	49.8	64.6	73.8	75.8	77.6
광진어촌마을	28.1	25.9	24.6	24.2	28.3	38.4	44.6	54.5	58.1
궁촌어촌마을	36.0	38.3	43.6	58.0	72.2	82.0	86.9	93.8	97.0
노곡어촌마을	48.0	56.2	70.1	77.4	85.9	83.7	80.9	78.0	72.6
대진어촌마을	37.5	42.4	45.8	50.2	56.2	60.3	67.8	73.3	79.8
덕산어촌마을	35.4	34.8	37.1	39.7	38.7	40.3	42.9	44.7	46.7
비화어촌마을	19.2	25.8	29.6	40.8	54.4	67.4	75.4	83.8	89.4
신남어촌마을	41.9	41.9	43.6	40.2	38.1	33.4	33.0	33.5	31.9
오분어촌마을	31.2	34.4	38.2	42.7	46.3	51.7	56.4	62.9	70.0
용화어촌마을	31.7	35.3	40.3	46.9	48.0	43.3	38.4	33.4	28.4
임원어촌마을	31.8	37.1	39.3	42.7	48.4	49.7	50.0	49.3	50.8
장호1리어촌마을	26.9	32.0	39.9	49.5	62.4	76.9	85.5	92.5	95.8
장호2리어촌마을	27.4	27.5	31.3	38.1	45.9	52.5	70.6	80.1	80.2
증산어촌마을	29.0	31.0	30.3	30.8	34.6	36.2	38.4	44.1	43.1
초곡어촌마을	44.6	40.1	41.7	46.0	52.4	66.7	70.9	74.1	78.9
호산어촌마을	28.4	29.3	28.7	24.6	20.4	14.7	12.9	11.9	15.0
후진어촌마을	24.2	33.8	38.6	44.1	49.2	59.3	70.4	79.2	89.0
교동어촌마을	24.5	30.3	32.7	37.2	37.5	37.6	38.8	40.5	41.0
금호어촌마을	21.0	24.4	28.8	33.9	38.8	42.4	46.4	50.1	53.3
대포동어촌마을	21.8	25.6	30.2	37.0	43.6	47.9	52.7	55.7	58.1
동명어촌마을	19.9	19.7	19.8	20.0	20.1	19.1	18.6	17.4	16.4
장사어촌마을	20.2	25.4	31.7	38.8	44.5	49.5	54.5	59.1	62.3
청호어촌마을	21.6	26.4	31.7	38.5	43.7	48.5	53.0	56.5	59.4
광진리어촌마을	31.2	30.4	29.4	28.8	27.1	24.1	20.6	17.8	14.0
기사문어촌마을	16.1	26.3	37.2	41.9	47.5	53.5	53.9	61.2	67.7
낙산어촌마을	23.8	26.9	32.9	41.8	48.5	52.8	57.0	59.4	62.0
남해1리어촌마을	25.9	24.3	27.4	38.9	44.3	53.0	59.3	67.4	63.7
남해2리어촌마을	26.4	24.8	24.0	22.7	20.5	18.6	17.8	17.8	20.7
동산리어촌마을	28.7	31.2	36.3	40.1	42.4	45.9	47.5	51.6	54.3
동호어촌마을	27.6	22.5	18.3	16.6	14.5	15.0	16.9	14.9	14.6
물치어촌마을	23.9	26.5	30.1	35.1	39.4	40.5	41.5	41.4	42.0
수산어촌마을	22.2	23.8	24.8	25.7	24.4	20.9	19.8	23.5	21.9
오산어촌마을	27.0	27.1	27.1	33.5	40.9	48.9	65.3	70.7	76.0

단위 : %

어촌마을	2017	2020	2023	2026	2029	2032	2035	2038	2041
인구1리어촌마을	28.6	32.5	31.7	30.8	30.1	28.3	27.7	25.3	25.7
전진2리어촌마을	23.8	38.5	43.7	51.7	62.9	70.5	81.8	86.0	85.4
하광정어촌마을	28.9	35.5	43.0	49.6	53.6	62.6	67.4	73.8	81.7

자료: 저자 작성

제4절 어촌마을 심층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어촌마을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는 지역소멸지수가 낮고 최근 어촌계원의 감소가 많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표 2-27〉 강원도 동해안 어촌마을 심층 인터뷰 대상 지역

지역	어촌계	소멸위험 지수	어촌계원수 (2018)	계원감소 (명)	감소율 (%)
강릉시 강동면	심곡	0.14	12	-6	-33.3
강릉시 건소동	안목	0.72	21	-12	-36.4
강릉시 강동면	정동1리	0.17	16	0	0.0
동해시 묵호동	묵호	0.23	116	-179	-60.7
삼척시 근덕면	궁촌	0.13	35	-11	-23.9
삼척시 교동	후진	0.27	10	-4	-28.6
삼척시 원덕읍	노곡	0.10	20	-19	-48.7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	0.21	16	0	0.0
양양군 현남면	광진	0.23	11	0	0.0
양양군 손양면	수산	0.29	18	-16	-47.1
고성군 거진읍	거진	0.23	562	-376	-40.1

자료: 저자 작성

2) 조사방법

어촌마을의 어촌계장과 장시간(1시간 이상)의 면담을 통해 어촌마을 및 어촌계 현황, 문제점 등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어촌마을을 자립마을(자체 인프라를 통해 자립이 가능한 마을), 지원마을(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마을), 통합마을(어촌마을 구성원, 어촌계원, 수산업 인프라 등의 측면에서 이웃한 마을과 통합이 필요한 마을)로 구분하였다. 지원마을 가운데 외부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 어촌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을 선정하여 2019년 연구과제로 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2. 조사결과

조사 대상 11개 어촌계 중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4개로 강릉시 안목어촌계, 동해시 묵호어촌계, 양양군 수산어촌계, 고성군 거진어촌계였다. 이들 어촌계는 대부분이 어촌계원이 많거나, 어촌계원이 적은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을소멸지수는 안목마을 0.72, 묵호동 0.23, 수산마을 0.29, 거진마을 0.23이었다. 지원이 필요한 곳은 강릉시 심곡어촌계, 삼척시 궁촌어촌계, 노곡어촌계였다. 이들 어촌계는 어촌계원이 20명 내외로 적으나 관광자원이나 수산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을소멸지수는 심곡마을 0.14, 궁촌마을 0.13, 노곡마을 0.10으로 0.2 미만의 소멸 위험으로 나타났다. 통합이 필요한 곳은 정동1리어촌계, 후진어촌계, 하광정어촌계, 광진어촌계로 어촌계원이 15명 내외로 적고 어항 등 수산기반시설이 없거나 활용성이 낮은 곳이었다. 어촌소멸지수는 정동1리마을 0.17, 후진마을 0.27, 하광정마을 0.21, 광진마을 0.23으로 소멸단계 진입이거나 위험으로 나타났다.

〈표 2-28〉 강원도 동해안 어촌마을 심층조사 결과

어촌계	어촌계현황	문제점 및 방안
심곡	• 어촌계 현황 - 가입조건 : 거주 5년. 가입비 없음 - 어촌계원 22명(고령으로 인한 자연감소 중) - 신규가입 없음 • 자원 현황 - 미역(강릉에서 가장 많이 생산) - 바다부채길로 관광객 증가 • 공동체 사업 - 최근 축제(성계), 카누 등 체험 준비	• 자체역량 부족 • 자체사업 필요 • 어촌계 가입기준 완화 필요 • 학교문제 해결 필요 • 지원 필요
안목	• 어촌계 현황 - 어촌계원 24명(최근 귀어 3명) - 가입은 3년 어업활동, 계원 2/3 찬성 • 자원 현황 - 관광복합어항. 관광객 증가. 커피거리 - KTX 개통으로 관광객 2배 증가 • 공동체 사업 - 공동체 사업은 없으나 활어회센터, 낚시어선 운영(11척), 어업 등 소득이 높음	• 소득수준 높음 • 어촌계 가입기준 완화 필요 • 소득원이 많음 • 자립가능
정동1리	• 어촌계 현황 - 어촌계원 16명 - 가입은 3년 거주, 가입비 300만원 (어선소유자는 바로 가입) • 자원 현황 - 어항 없음(어선수 미달). 어항부지 없음 - 미역, 지누아리, 민들조개 풍부. 최근 2년간 휴식년제 운영 - 어촌계 갈등(어선/나잠) • 공동체 사업 - 없음	• 어촌계 갈등 • 어촌계 가입기준 완화 필요 • 자원은 많음 • 통합 필요
목호	• 어촌계 현황 - 어촌계원 119명(계원 정리함) • 자원 현황 - 목호항 어장 협소 문제 - 민박, 펜션 임대사업자 많음 • 공동체 사업 - 어달항 캠핑 추진(어촌뉴딜 300사업 선정)	• 자체역량 있음 • 자체사업 가능 • 자립가능

어촌계	어촌계현황	문제점 및 방안
궁촌	• 어촌계 현황 - 가입조건은 지역 거주 2년. 가입비 없음 - 어촌계원 37명(자연감소, 원전부지 보상차원에서 가입, 신규가입 부진) • 자원 현황 - 경관자원 우수함. 미역자원 • 공동체 사업 - 여름철 카누 등 체험(마을과 공동). 6차산업화 지원사업 추진 -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대상	• 자체역량 낮음 • 자체사업 가능하나 어려움 • 지원필요
후진	• 어촌계 현황 - 가입조건은 지역 거주 2년. 가입비 200만원 - 어촌계원 11명(준계원 4명) • 자원 현황 - 문어, 가자미, 광어, 미역 등 - 썰비치 관광객 많음 • 공동체 사업 - 어촌체험마을 3년째 운영 - 작은 직판장 운영 - 썰비치 활용 사업 추진 - 작은후진 임차 운영	• 자체역량 있음 • 자체사업 가능 • 소멸가능성 있음 • 통합 필요
노곡	• 어촌계 현황 - 어촌계원 20명(자연감소) - 어촌계 갈등 - 발전소 건설로 어장 축소. 소음, 먼지 피해 • 자원 현황 - 문어, 대구, 가자미 • 공동체 사업 - 발전소 발전기금으로 공동사업 논의 중(펜션 검토)	• 어촌계 열악 • 자체사업 필요 • 소멸가능성 있음 • 지원 필요
하광정	• 어촌계 현황 - 어촌계원 15명(준계원 2명) - 가입조건은 5년 거주 후 동의 필요. 가입비 500만원 • 자원 현황 - 미역, 민들조개, 돌김, 고리매, 가시리 등 풍부 - 어항이 없음 • 공동체 사업 - 민들조개 직판 및 어장체험사업 추진	• 어촌계 열악 • 어촌계 가입기준 완화 필요 • 자체사업 확대 필요 • 소멸가능성 있음 • 통합 필요

어촌계	어촌계현황	문제점 및 방안
광진	• 어촌계 현황 - 어촌계원 13명(준계원 2명, 정계원 중 5명은 고령으로 어업 불가) - 가입조건은 60일 이상 조업. 가입비 500만 원 • 자원 현황 - 휴휴암 관광지 - 미역, 지누아리, 툃, 다시마, 전복 등 - 어항이 없음 • 공동체 사업 - 카누, 카약 체험사업 운영 - 직판장 설치 추진	• 어촌계 열악 • 자체사업 확대 필요 • 소멸가능성 있음 • 통합 필요
수산	• 어촌계 현황 - 어촌계원 23명(자연감소 많음) - 3년 이상 거주, 계원 과반 찬성시 정계원 • 자원 현황 -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객 증가 - 요트 정박지 • 공동체 사업 - 편의점, 건어물, 체험마을 운영 -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대상	• 자체역량 있음 • 어촌계 가입기준 완화 필요 • 자체사업 가능 • 자립가능
거진	• 어촌계 현황 - 수협 조합원이면 정회원으로 가입 - 어촌계원 545명. 자연감소 많음 • 자원 현황 - 미역, 전복, 해삼, 성게 • 공동체 사업 - 민박임대, 마을어장, 화센터임대 - 어촌체험마을 추진	• 계원 정리 필요 • 수산물 생산 등으로 소득수준 양호 예측 • 자체사업 가능 • 자립가능

자료: 저자 작성

제 3 장

국내외 어촌활성화 사례

제1절 국내외 어촌개발 동향

1. 유럽연합(EU) 동향

유럽연합(EU)의 지역개발 정책은 1957년 로마협약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로마협약에 참여한 국가의 경제격차 축소 및 지역 간 지역개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958년에 ESF(the European Social Fund) 및 EAGGF(the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를 조성하였다. 1988년 유럽집행위원회에서 낙후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을 위해 연대기금(Solidarity Fund)을 조성하여 680억 유로를 투자하였고, 유럽연합의 통합공동체는 모든 공동체에서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경제개발을 위해 환경과 교통부문 개선을 지원하는 결합기금(Cohesion Fund)이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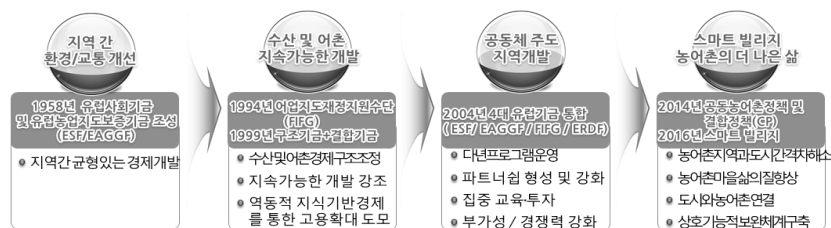
또한, 유럽연합은 1994년 FIFG(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프로그램을 만들어 1994년~1999년 기간 중 유럽의회 예산의 1/3인 2,000억 유로를 투입하였고, 수산 및 어촌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강조하고, 운영절차를 단순화 하여 세계 경제상황에 맞는 대응과 수산자원의 확보 및 어획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1999년 유럽연합은 구조기금(Structural Fund)과 결집기금(Cohesion Fund)을 결속한 정책(Cohesion Policy)으로 2000년~2006년 300억 유로를 투입하여 역동적인 지식기반경제로 발전 및 고용확대를 도모하였다.

유럽연합은 2004년 새로운 가맹국의 참여로 인한 여건변화를 수용하고, 소득향상, 경쟁력 강화,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시각 속에서 2007년~2013년 새로운 프로그램인 공동체주도 지역개발 프로그램(C.L.L.D)을 도입하여 유럽 4대 기금인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유럽사회기금(ESF), 유럽어업기금(FIFG)과 유럽농업기금(EAGGF)을 활용하여 지역인프라 구축, 고용창출, 지역개발 프로젝트 추진, 중소기업 지원, 실업자 및 장애인 그룹의 교육 훈련, 재취업 알선 지원, 어업의 현대화, 낙후된 지역의 농어가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2016년 유럽의 농어촌마을 이해관계자들은 아일랜드 코크(Cork)에 모여 “농어촌마을의 더 나은 삶”이라는 주제로 「코크(Cork)선언 2.0」을 발표하고, 농어촌지역과 도시 간 정보격차를 줄이고, 농어촌마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개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스마트 빌리지’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도시와 농어촌을 연결하고, 각 특성을 반영하면서 상호 기능적 보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강조하였다. 이에 유럽연합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동농어촌정책(Common Agricultural and Fisheries Policy)과

일자리 창출의 결합정책(Cohesion Policy)이 주요 지원정책으로 내세우며, 스마트 빌리지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였다. 유럽연합의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위해 결합정책(Cohesion Policy)으로 2014년~2020년에 3,520억 유로(약 465조 원)를 투입하였고, 유럽연합은 스마트 빌리지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리소스를 지원하고, 공동체주도 지역개발 프로그램(C.L.L.D) 등을 통해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1〉 유럽의 지역개발정책 변화



자료: 저자 작성

2. 일본 동향

일본은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방지하여 지역에도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확보할 목적으로 2014년 「지방창생법」을 제정하였다. 일본 정부는 지방창생법에 따라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를 설치·운영하고, 2014년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생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사업에 추진 중에 있다.

지방창생전략은 인구감소에 대한 사회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해소하고, 청년취업, 결혼, 육아문제를 해결,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우수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1차산업분야, 관광·레저자원개발, 지역상품개발 등을 통해 지방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매력을 브랜드화하는 로컬브랜딩사업, 지역기업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 사업전략 및 판로를 개척하는 로컬 이노베이션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마을만들기, 서비스 생산성 향상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고도화 사업 등이 있다.

둘째, 지방에 사람이 유입을 촉진시키는 전략으로 빈집, 유휴부지 등의 지역의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매력을 발굴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빈집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용지 특례 해제 등의 제도를 완화하고, 지자체는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지자체 출장소, 농어촌민박, 실버타운 커뮤니티 등의 시설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을을 만들기 위해 인재육성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방대학 활성화, 기업의 지방거점강화, 지방채용 취업의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유입시키고 있다.

셋째, 일본은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일본정부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방출신 학생들이 지방으로 돌아갈 수 있고, 지방거주 학생의 정착을 촉진하는 산·관·학이 연계하여 지역기업에서 인턴십을 실시하도록 지원하여 청년층 고용대책을 추진하고, 임신 출산 및 육아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농어촌 여성경력 단절 등을 방지하고, 여성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시대에 맞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작은 거점사업 실시하고, 지방도시·마을의 경제·생활권 자립 등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작은 거점 사업은 의료·복지·대중교통·공공시설 등 마을에 꼭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거점화하여 지역에 지속적으로 생활 서비스를 유지하고 나아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작은 거점사업을 1,000개소를 조성하고, NPO 등을 통한 지역 운영조직을 5,000개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작은 거점은 지역재생의 거점으로 진료소, 보육소, 마을회사, 상점, 주유소 등의 시설을 집약시키는 것이다.

일본의 지방창생전략은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효과는 아직 평가되지 않았지만,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인구소멸 및 감소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와 사회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지방도시의 쇠퇴에 대하여 일본은 매우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으며,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지방창생에 대한 많은 대응전략들이 나오고 있다.

3. 국내 동향

우리나라는 어촌개발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 특화어항 개발, 작은 SOC 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생활형 SOC 사업으로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한 지역활성화, 포용성장을 통해 어촌의 삶의 질 향상, 어촌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생활형 SOC 확대

지역 생활형 SOC 확대는 공간개발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SOC 사업을 사람·이용자 중심의 SOC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생활형 SOC 사업의 추진배경은 삶의 질에 대한 어촌주민의 수요가 높아지고,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인구유출이 지속되어 도시와 어촌지역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가 사람과 지역 중심의 생활인프라에 집중 투자하여 삶의 질 향상,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생활형 SOC 사업으로 어촌뉴딜 300은 2019년 70개소를 선정하여 선착장 개선 등의 단기간 완료 가능한 생활형 SOC 사업뿐만 아니라 해양레저형, 국민휴양형,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의 4가지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 관광자원개발사업,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등의 타 부처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집중 투자·관리할 예정이다.

어촌의 생활형 SOC 사업은 단기적으로 선착장, 대합실 등 생활 SOC 조성을 통해 지역의 소규모 건설사 및 소상공인의 활력을 증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어촌재생 및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숙박, 음식점, 서비스 업 등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해양레저·관광분야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3-2〉 어촌뉴딜 300사업의 국민휴양형 사례



자료: 경제활력대책회의, 『어촌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어촌뉴딜 300」 후속조치 추진방안』, 2018, p. 3

2) 포용성장 및 어촌의 삶의 질 향상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수출주도, 성장 중심의 경제전략을 추진해 왔고,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은 사회보장제도 확충 및 취약계층의 보호 등이 지역발전 불균형 등의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어촌지역의 포용성장은 어촌사회를 통합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환경을 조성, 어촌공동체 육성, 도시-어촌의 지역 간 차별이 없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어촌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촌지역의 포용성장의 정책방향은 어촌주민 및 청년의 일자리·소득을 창출하고, 정주환경·공공서비스 등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투자를 확대, 어업재해 및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첫째로, 정부는 어촌지역의 포용성장을 위해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로 어업인 누구나 가입이 쉽도록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청년 귀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어정착금 지원, 창업·주택자금 지원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수산모태펀드 확대 등을 통해 어촌지역의 소자본 벤처기업의 유치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둘째로, 정부는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적용범위를 전체 도서로 확대하고,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세를 감면하는 한편, 어업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제도를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어업재해 및 자연재해 등의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을 실시하여 ①해상교통시설 정비 ②해양재난사고 대응 ③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등의 유형별로 개선이 필요한 300개의 소규모 어항·포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3) 어촌경제 활성화

해양수산부는 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2015년 어촌 6차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어촌 6차산업화는 1차 산업인 수산업의 생산물을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가공된 새로운 제품을 새로운 판로에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어촌 6차산업화는 어촌자원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어촌의 일자리를 창출, 어촌주민의 소득을 증대, 귀어·귀촌을 활성화하여 어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3-3〉 어촌 6차산업화 개념



자료: 해양수산부, 「어촌 6차산업화 인포그래픽」(검색일: 2018. 10. 15.)

정부는 어촌의 6차산업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2014년부터 시작하여 10개의 6차산업화 시범마을 조성하였고, 시범마을은 자원, 입지 등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어촌 6차산업화의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어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산물 생산 협의체 구성, 가공시설 조성, 특화상품 개발, 새로운 판로 개척 등이 있으며, <표 3-1>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표 3-1〉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현황

구분	마을명	주요사업내용
1차 (‘14년~ ‘15년)	태안 대야도마을	(1차) 우럭, 바지락, 낙지, 해삼 등, (2차) 우럭 가공시설 및 레스토랑 건립 , (3차) 우럭 요리개발, 마을브랜드 개발 등
	여수 안포마을	(1차) 피조개, 바지락 등 생산, (2차) 피조개 가공시설 및 레스토랑 건립 , (3차) 피조개 활용 요리개발 · 판매
	해남 송호중리 마을	(1차) 전복, 낙지, 파래 생산, (2차) 전복방 제조시설 및 로컬푸드 레스토랑 건립 , (3차) 전복을 이용한 요리개발 · 판매, 특산물 판매
	거제 해금강마을	(1차) 돌미역 · 톳 · 동백열매 생산, (2차) 동백화장품, 오일생산, 동백 액세서리 만들기 체험장 및 판매장 조성 , (3차) 마을브랜드 · 개발, 액세서리 판매 등
	양양 남애마을	바닷속 체험마을로 개발하기 위한 다이빙 포인트 기반시설, 다이빙 교육 및 체험장비 보관시설 건립, 마을 역량강화 추진
2차 (‘16년~ ‘18년)	서산 중왕마을	(1차) 감태, 낙지 등 생산, (2차) 감태 가공시설 건립 , (3차) 조미감태 유통망 확보, 감태 분말 초콜릿 만들기 체험장 조성 등
	고창 두어마을	(1차) 가무락조개, 장어 등 생산, (2차) 장어엑기스 가공시설 및 로컬푸드 레스토랑 및 판매장 건립 , (3차) 레스토랑 · 판매장 운영
	고흥 신평마을	(1차) 미역 생산, (2차) 건미역 특화상품 개발 및 가공시설 건립 , (3차) 브랜드 개발 및 특화상품 유통망 확보
	남해 전도마을	(1차) 파래, 죽방멸치, 썩 생산, (2차) 멸치액젓 가공시설, 어촌체험시설 · 판매장 조성 , (3차) 어촌체험장 운영(썩 잡기 등), 특화상품 판매
	거제 계도마을	(1차) 대구 생산, (2차) 대구 스테이크 및 젓갈 가공시설 건립 , (3차) 특화상품 관내 어촌민박 및 펜션 판매 유통망 확보

자료: 해양수산부,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 (검색일: 2018. 10. 15.)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은 어촌 마을단위의 어업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산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여 수익을 창출, 어촌마을의 소득제고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4. 시사점

국내외 어촌 개발동향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민주도형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과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상향식 지역개발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과 참여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해 이룬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 역시 높일 수 있다.

둘째, 일본과 같이 작은 거점에 생활편의시설을 집중시켜 주민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주도하는 것이다.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생활편의시설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지역의 일자리 역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을 간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지역의 거점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지역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6차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어촌은 지속적으로 어업소득이 정체하고 있다. 어업생산에 필요한 인력은 감소하고, 소득은 정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상품개발과 판로 확대를 통해 어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2절 국내외 사례

1. 강원도 철원 스마트 그린빌리지

철원 스마트 그린빌리지 사업은 지역의 고령화,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를 에너지 자립 및 경제적 자립을 통해 해소하는 사례이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친환경 기술과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마을 브랜드화를 통해 경제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혜택 등의 소득원 창출 인프라를 제공한다. 철원 스마트 그린빌리지 사업은 4차산업 혁명 기술과 마이크로그리드, ICT 플랫폼 등의 인프라를 통해 마을의 에너지 자립을 구축하고, 자체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관광과 마을 수익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구축하는 것이다. 주요사업은 철원 문혜5리 마을에 스마트 그린홈을 도입하여 에너지 자립 및 스마트 민박을 도입하고, 마을 내 교통을 전기자전거, 전기보드 등으로 대체하여 고령의 주민에게 이동편의를 제공, LED를 활용하여 친환경 조형물, 가로 등, 문패 및 우체통을 설치하여 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스마트 그린빌리지 사업은 마을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마을과 기업의 상생협약을 통해 마을의 에너지를 자립하고, 나아가 마을주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마을주민이 발전소 주주로 참여하여 일정 수익률을 분배받아 주민의 경제적인 자립을 촉진시킨다.

철원 스마트 그린빌리지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마을주민과 소통을 통해 마을의 에너지 및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을 브랜드화함으로써 마을의 경쟁력을 높여 접경지역 마을이 가진 사회적

지금까지 태양광발전소는 건설과정에서부터 이익 분배까지 지역 주민들이 배제되었지만, 문혜리 마을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유치·참여·투자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 빌리지를 구축하고, 낙후된 마을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3-4〉 철원 스마트 빌리지 구상



자료: (주)레즐러, 『스마트 그린빌리지 문혜5리 사업계획서』, 2018, p. 24

2. 가고시마현 이센정

일본은 지금까지 이도지역 및 낙후지역의 재생지원과 빈집은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고령화·공동화가 두드러진 지역으로 예술가 등 젊은 이주희망자가 증가하여 젊은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였다. 일본 지자체는 NPO 등과 함께 차량, 중장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과 골목, 섬 지역에 빈집을 확보하고, 도시의 청년 이주자와 매칭하는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

가고시마현 이센정은 창작활동 장소를 찾는 젊은 이주민들과 지역의 공동화를 대처하기 위해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오노마치(NPO)가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빈집 재생프로젝트는 현직 목수나 은퇴한 목수를 활용하여 빈집재생을 위한 서포터로 등록시키고, 서포터는 지역으로 파견을 나가 빈집을 개·보수 한다. 빈집의 개·보수에 사용되는 자재는 우선적으로 마을의 재사용 가능한 자재를 활용하고, 마을주민과 함께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NPO는 코디네이터로서 마을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부인과의 벽을 허물어 공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지자체는 빈집 주인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빈집은행에 빈집을 등록시키고, 재사용 가능한 자재를 관리하는 역할 등을 하고 있다. 빈집에 들어올 이주희망자는 NPO와 함께 서포터 및 마을 주민과 협동하고, 시공업체의 산출내역을 기초로 하여 비용을 지불한다.

가고시마현 이센정의 빈집 재생프로젝트는 빈집은행에 등록된 3개의 빈집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이 실시되어 이주민이 정착하였고, 9개의 빈집을 빈집은행에 등록시켜 개·보수할 예정에 있다.

〈그림 3-5〉 빈집 프로젝트 설명회 및 정리



자료: FC2(검색어:빈집 재생 프로젝트.검색일: 2018. 1. 15.)

3. 문호리 리버마켓

문호리 리버마켓은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의 강변 유휴공간에 생겨난 플리마켓으로 양평으로 이주해온 귀촌인의 주도로 지역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시장이다. 문호리 리버마켓은 2014년 4월 첫 시장을 보였고, 지역 이주민의 주도하에 마을의 특산품을 마켓에 파는 장을 열었다. 지역 주민이 유기농 농산물을 가공하여 상품으로 개발하여 리버마켓에서 팔고, 지역 도자기 장인의 생활 자기들을 만들어 시장에 판다. 또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의 신청자를 받아 판매·홍보하고 있다. 문호리 리버마켓은 약 100개팀이 참여하고, 그중 40팀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판매할 수 있게 장소를 열어주고 있다.

문호리 마켓에서 판매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위탁판매 할 수 없고, 시장이나 다른 곳에서 사온 물건·재고물품을 일절 판매할 수 없다. 본인이 직접 기르고, 만든 상품, 즉 6차산업화 상품만을 판매해야 한다. 또한, 참가자로서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활동(마을청소, 행사 참여 등)을 준수한 사람만이 판매자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수익의 일부를 활성화 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문호리 리버마켓은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자신들의 상품을 유희공간에서 판매함으로써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문호리 리버마켓을 1호점으로 양양 후진항 비치마켓, 경기도 광주 곤지암 마켓을 상시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이천 도자기 마을 등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확대하고 있다.

〈그림 3-6〉 문호리 리버마켓



자료: 안완배, (문호리 리버마켓 기획자) 제공

4. 시사점

국내외 세부사례를 살펴보면, 지역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철원의 스마트 빌리지와 문호리 리버마켓과 같이 지역의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지역 홍보 및 활성화가 성공한다.

또한, 지역의 귀촌인·지역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 일본의 빈집 개보수 프로젝트와 같이 지역단체가 앞장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지역의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지역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거버넌스 구축이 있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간 기업·단체,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주민의 지역의 문제점을 건의하고, 이것을 수용·해결할 수 있는 기업·단체, 지자체가 협약 및 협업을 통해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제 4 장

어촌주민 인식조사 및 어촌지역 유형화

제1절 어촌주민 인식조사

1. 조사 설계

본 연구는 강원도 어촌마을의 쇠퇴요인 및 활성화 과제를 발굴하고자 강원지역 어촌계를 대상으로 지역주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어촌마을 쇠퇴에 대한 인식수준, 어촌마을의 활성화 방안, 어촌마을의 특화분야로 구성하였다.

인식조사는 강원지역 어촌계에 방문하여 어촌지역의 쇠퇴·활성화 요인 및 지역활력 제고 방안을 질의하는 대면면접 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표본은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제공한 「강원도 어촌계 현황 내역」(6개 시군, 9개 수협, 74개 어촌계)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조사대상은 강원지역 74개 어촌계장(전수)으로 설정하였다.

〈표 4-1〉 어촌주민 인식조사 개요

구분	내 용
조사 대상	74명(어촌계별 어촌계장)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방문면접 조사
조사 기간	2018. 12. 12. ~ 2018. 12. 17. (6일간)

조사대상 지역 및 어촌계 현황은 〈표 4-2〉에 표기된 바와 같다.

〈표 4-2〉 조사대상 어촌마을(어촌계) 현황

거주 지역	수협 별	어촌계명	어촌계원 (명)	거주 지역	수협 별	어촌계명	어촌계원 (명)
강릉	강릉시 수협 (13)	주문리	451	삼척	삼척 수협 (14)	추암	19
		주문5리	47			증산	11
		소돌	75			후진	10
		영진	54			광진	12
		사천	41			정라	116
		경포 사근진	23			오분	26
		강문	20			덕산	38
		안목	21			대진	57
		남향진	13			궁촌	35
		안인	38			초곡	28
		정동1리	16			용화	20
		정동	23			정호2	27
		심곡	12			장호	51
						갈남	50
동해	동해시 수협 (6)	금진	60		원덕 수협 (5)	신남	27
		도직	18			임원	116
		목호	116			비화	16
		어달	33			노곡	20
		대진	60			호산	62
		천곡	17				
속초	속초시 수협	동명	85	고성	고성군 수협	대진	357
		금호	66			초도	86

거주 지역	수협 별	어촌계명	어촌계원 (명)	거주 지역	수협 별	어촌계명	어촌계원 (명)
양 양	(5)	교동	82		(10)	거진	562
		청호	155			반암	40
		장사	66			동호리	16
	대포 수협 (3)	대포	132			교암	39
		외옹치	34			아야진	231
		내물치	50			청간	43
	양양군 수협 (13)	물치	31			천진	24
		전진2리	14			봉포	55
		낙산	32		죽왕 수협 (5)	가진	65
		오산	15			공현진	72
		수산	18			오호	59
		동호	16			문암1	48
		하광정	16			문암2	31
		기사문	39				
		동산	39				
		인구	28				
		광진	11				
		남애2리	45				
		남애1리	24				

〈표 4-3〉 강원도 어촌마을 지역주민 인식조사 항목

항목	조 사 항 목
어촌마을 쇠퇴에 대한 주민인식	• 마을 침체 및 쇠퇴 인식 여부 • 마을 쇠퇴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 마을의 인구 감소에 대한 인식 • 마을의 인구 감소 원인 • 향후 마을 소멸에 대한 인식
어촌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민인식	• 마을 활성화를 위한 대안 •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방안 • 마을 청장년층 인구유입 방안 • 마을 수산업 활성화 방안 • 마을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 마을 일자리 확대 방안

항목	조 사 항 목
어촌마을의 특화 분야에 대한 주민의견	- 강원도 어촌이 지닌 경쟁력 - 마을의 유망한 특화사업 - 마을의 수산업 분야 강점 - 마을의 해양레저 · 관광 분야가 지닌 강점 - 마을의 수산업 6차산업을 위한 특화 '자원' - 마을의 특화사업 정착을 위한 정책
응답자 특성	- 성별, 연령 - 거주지역 및 어촌계, 거주지역 거주기간 - 경제활동 분야, 어업활동 분야

주: 조사표는 <부록 1> 참조

조사문항은 어촌마을의 쇠퇴에 대한 주민의식에 대한 부분과 어촌 마을 활성화에 대한 방안, 어촌마을의 특화분야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마을의 침체 및 쇠퇴에 대한 인식과 인구 감소 원인, 마을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질문했다. 또한 강원도 어촌이 지나고 있는 경쟁력과 마을의 유망한 특화사업, 수산업 6차 산업화를 위한 특화 자원 등의 다양한 문항을 질의하였다.

〈그림 4-1〉 지역주민 인식조사 현장



자료: 저자 촬영(촬영일: 2018.12.12.~17.)

2. 응답자 특성

(1) 성별 · 연령대별 분포

강원도 어촌마을 인식조사는 응답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남성이며, 연령대별 분포는 60대 이상이 6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60대 미만(40대와 50대 묶음)과 6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4-4〉 강원도 어촌마을 지역주민의 성별 · 연령대별 분포

구분		사례수	비율 (%)
전체		(74)	100.0
성별	여성	(1)	1.4
	남성	(73)	98.6
연령	40대	(1)	1.4
	50대	(27)	36.5
	60대 이상	(46)	62.2

(2)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경제활동 분포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삼척시가 2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고성군 20.3%, 강릉시와 양양군이 각각 17.6%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거주기간은 31~60년 이하 60.8%, 61년 이상 27.0%를 차지하는 등 어촌마을에 오래 거주한 주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응답자 모두는 어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77.0%는 어업만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업+요식업은 13.5%, 어업+관광업은 8.1%, 어업+수산물 가공판매업은 1.4%로 나타났다.

〈표 4-5〉 강원도 어촌마을 지역주민의 거주지역 · 거주기간별 분포

구분		사례수	비율 (%)
전체		(74)	100.0
거주지역	강릉시	(13)	17.6
	동해시	(6)	8.1
	속초시	(8)	10.8
	삼척시	(19)	25.7
	고성군	(15)	20.3
	양양군	(13)	17.6
거주기간	30년 이하	(9)	12.2
	31~60년 이하	(45)	60.8
	61년 이상	(20)	27.0
경제활동	어업	(57)	77.0
	어업+수산물 가공판매업	(1)	1.4
	어업+요식업	(10)	13.5
	어업+관광업	(6)	8.1

3.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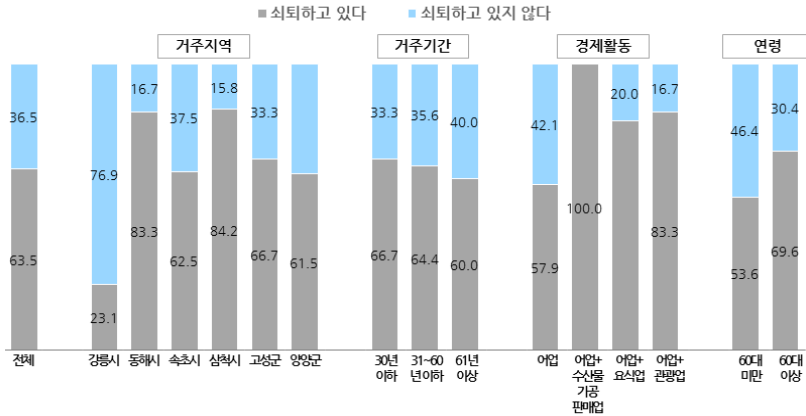
(1) 어촌마을 쇠퇴에 대한 주민인식 조사

가. 마을의 침체 및 쇠퇴 인식 여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침체 또는 쇠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전체의 절반 이상이(63.5%) ‘쇠퇴하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삼척시와 동해시에서 ‘쇠퇴하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비중이 높았으며,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쇠퇴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2〉 마을 침체 및 쇠퇴 인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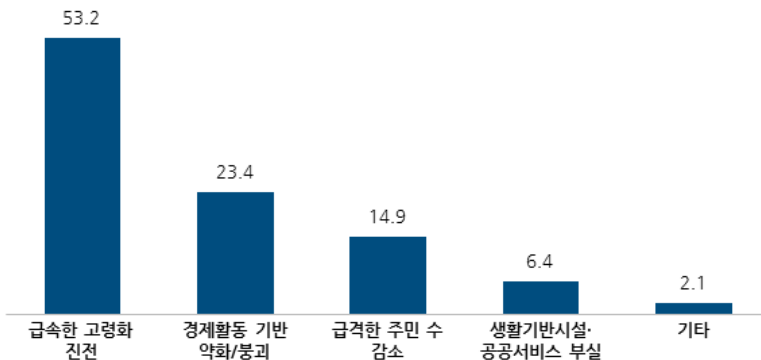
단위: %, n=74



마을이 쇠퇴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급속한 고령화 진전’이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경제활동 기반 약화/붕괴’ 23.4%, ‘급격한 주민 수 감소’ 14.9%, ‘생활기반시설·공공서비스 부실’ 6.4%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마을 쇠퇴 이유

단위: %, n=47



거주지역별로는 동해시 거주자들은 ‘경제활동 기반 약화/붕괴’를 60.0%로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강릉시 거주자들은 ‘급격한 주민수 감소’(33.3%)를 가장 심각한 쇠퇴 이유로 응답했다.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30년 이하 그룹에서 ‘급속한 고령화 진전’(66.7%)을 가장 큰 쇠퇴 이유로 선택했으며, 31~60년 이하 그룹에서는 ‘급속한 고령화 진전’을 48.3%, 61년 이상 그룹에서는 ‘급속한 고령화 진전’을 58.3%가 선택했다.

반면 연령대별로는 60대 미만에서 ‘급속한 고령화 진전’(33.3%)과 ‘경제활동 기반 약화/붕괴’(33.3%)를 쇠퇴하는 이유로 동일한 수준으로 선택하였으며, 60대 이상에서는 ‘급속한 고령화 진전’(62.5%)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표 4-6〉 응답자 특성별, 마을 쇠퇴 이유

단위: %, n=47

		사례수	쇠퇴이유				
			급속한 고령화 진전	경제활동 기반 약화/붕괴	급격한 주민 수 감소	생활기반시설 공공서비스 부실	기타
전체		47	53.2	23.4	14.9	6.4	2.1
거주지역	강릉시	3	33.3	33.3	33.3	-	-
	동해시	5	20.0	60.0	20.0	-	-
	속초시	5	100.0	-	-	-	-
	삼척시	16	37.5	31.3	18.8	6.3	6.3
	고성군	10	90.0	-	10.0	-	-
	양양군	8	37.5	25.0	12.5	25.0	-
거주기간	30년 이하	6	66.7	-	16.7	16.7	-
	31~60년 이하	29	48.3	24.1	17.2	6.9	3.4
	61년 이상	12	58.3	33.3	8.3	-	-
경제활동	어업	33	51.5	21.2	15.2	9.1	3.0
	어업+수산물 가공판매업	1	100.0	-	-	-	-
	어업+음식업	8	25.0	50.0	25.0	-	-
	어업+관광업	5	100.0	-	-	-	-
연령	60대 미만	15	33.3	33.3	20.0	6.7	6.7
	60대 이상	32	62.5	18.8	12.5	6.3	-

나. 마을의 인구감소에 대한 인식

마을의 인구감소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7.0%가 ‘심각하다’라고 응답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속초시와 삼척시, 고성군에서 마을 인구 감소에 대해 응답자 중 80% 이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동해시 거주자들은 50%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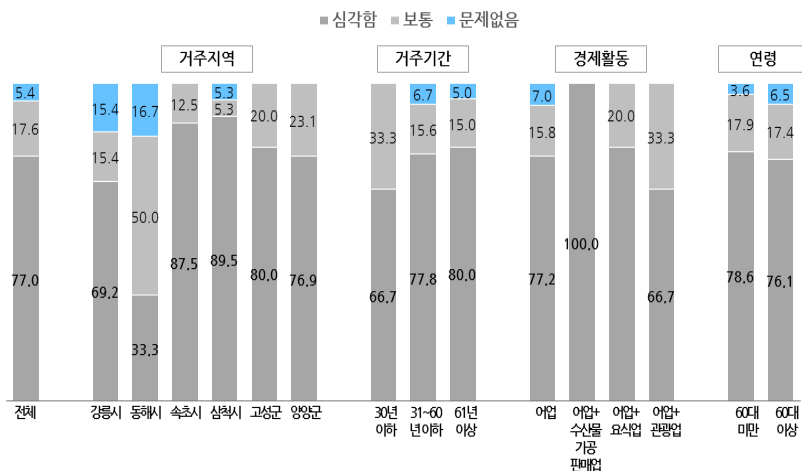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마을 인구 감소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30년 이하: 66.7%, 31~60년 이하: 77.8%, 61년 이상: 80.0%)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 측면에서 보면, 어업+관광업을 같이 하는 거주자들이 마을 인구 감소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66.7%로 다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미만 거주자들(78.6%)이 60대 이상 거주자들(76.1%)보다 마을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마을의 인구 감소에 대한 인식

단위: %, n=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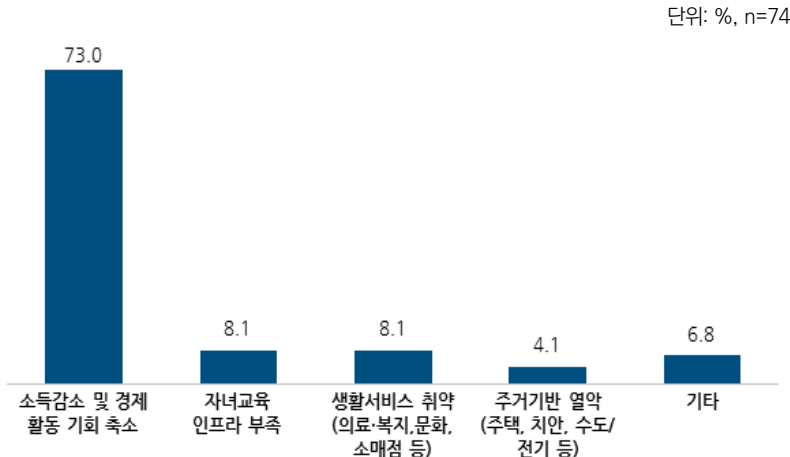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인구감소 원인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73.0%가 ‘소득감소 및 경제활동 기회 축소’를 선택하였다. 이어 ‘자녀교육 인프라 부족’(8.1%), ‘생활서비스 취약(의료·복지, 문화, 소매점 등)’(8.1%), ‘주거기반 열악(주택, 치안, 수도/전기 등)’(4.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동해시 거주자들이 ‘소득감소 및 경제활동 기회 축소’에 대한 원인을 100%로 선택하여, 타 지역 거주자들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소득감소 및 경제활동 기회 축소’에 대한 응답 비율(30년 이하: 66.7%, 31~60년 이하: 73.3%, 61년 이상: 75%)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미만 거주자들이 ‘소득감소 및 경제활동 기회 축소’에 대한 응답률이 60대 이상 거주자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4-5〉 인구 감소 원인



〈표 4-9〉 응답자 특성별, 인구감소 원인

단위: %, n=74

		사례수	감소이유				
			소득감소 및 경제활동 기회 축소	자녀교육 인프라 부족	생활서비스 취약 (의료·복지, 문화 등)	주거기반 열악 (주택, 치안, 수도/전기 등)	기타
전체		74	73.0	8.1	8.1	4.1	6.8
거주지역	강릉시	13	61.5	7.7	7.7	23.1	-
	동해시	6	100.0	-	-	-	-
	속초시	8	75.0	12.5	-	-	12.5
	삼척시	19	68.4	10.5	5.3	10.5	5.3
	고성군	15	73.3	6.7	20.0	-	-
	양양군	13	76.9	7.7	7.7	-	7.7
거주기간	30년 이하	9	66.7	-	22.2	11.1	-
	31~60년 이하	45	73.3	6.7	4.4	4.4	11.1
	61년 이상	20	75.0	15.0	10.0	-	-
경제활동	어업	57	75.4	10.5	8.8	1.8	3.5
	어업+수산물 가공판매업	1	-	-	100.0	-	-
	어업+요식업	10	80.0	-	-	10.0	10.0
	어업+관광업	6	50.0	-	-	16.7	33.3
연령	60대 미만	28	75.0	3.6	7.1	3.6	10.7
	60대 이상	46	71.7	10.9	8.7	4.3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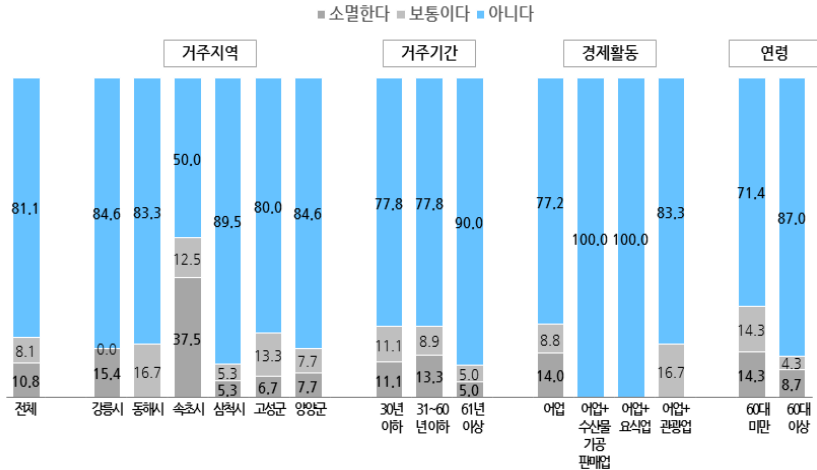
다. 향후 마을의 소멸여부에 대한 인식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향후 소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10.8%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속초시 거주자가 37.5%로 다른 지역 거주자들보다 ‘소멸한다’는 의견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응답하였다.

거주기간과 연령대별로 보면,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61년 이상 거주자들과 연령대가 높은 60대 이상 거주자들이 향후 마을이 ‘소멸한다’는 의견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6〉 마을 소멸에 대한 인식

단위: %, n=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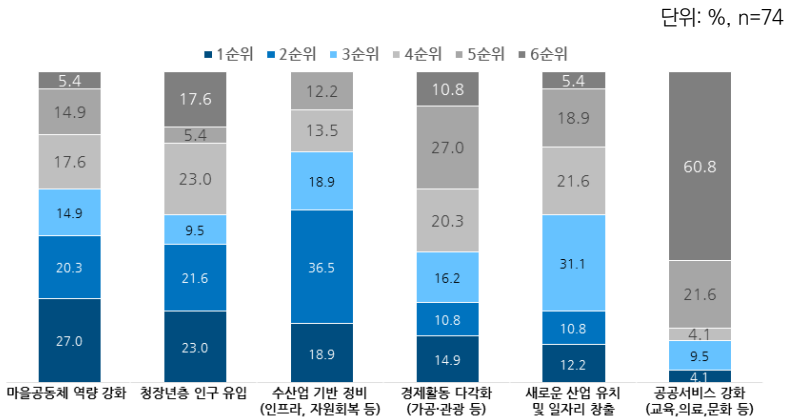


(2) 어촌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민인식

가. 마을 활성화를 위한 대안

현재 거주하는 마을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는 1순위 기준으로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27.0%)를 가장 높게 선택하였으며, ‘청장년층 인구 유입’(23.0%), ‘수산업 기반 정비(인프라, 자원회복 등)’(18.9%), ‘경제활동 다각화(가공·관광 등)’(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기준으로는 ‘수산업 기반 정비(인프라, 자원회복 등)’(36.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장년층 인구 유입’(21.6%),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20.3%)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그림 4-7〉 마을 활성화를 위한 대안



거주지역별로는 동해시는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66.7%), 속초시는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및 ‘수산업 기반 정비’(각각 37.5%), 강릉시는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및 ‘청장년층 인구 유입’(각각 30.8%)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으며, 속초와 고성 거주자들은 ‘수산업 기반 정비(인프라, 자원회복 등)’(대포: 66.7%, 죽왕: 40.0%)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 삭제요망

경제활동 측면에서 보면, 어업+요식업을 하고 있는 거주자들의 경우 응답자 중 50%가 ‘경제활동 다각화(가공, 관광 등)’를 마을활력을 위한 대안으로 선택하였으며, 어업에만 종사하시는 거주자들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29.8%), ‘청장년층 인구 유입’(26.3%)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미만인 거주자들은 ‘청장년층 인구 유입(25.0%)’을 가장 높게 선택한 반면, 60대 이상 거주자들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30.4%)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마을활성화를 위한 다른 의견으로는 ‘체험마을, 해수욕장 개발, 경관 조성 등의 관광 인프라 확대’가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무료 주차장 운영, 선착장 개발, 주택 공급 등의 생활 인프라 확대’(18.2%), ‘정부지원(양식사업, 어촌계 지원 등)’(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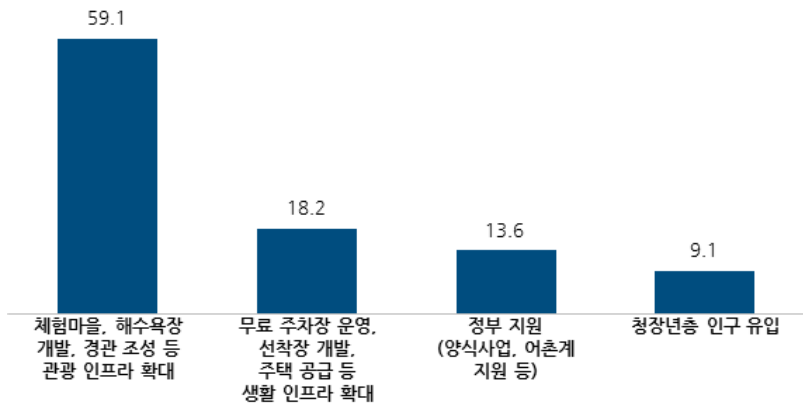
〈표 4-10〉 응답자 특성별, 마을 활성화를 위한 대안(1순위 기준)

단위: %, n=74

		사례수	마을 활성화를 위한 대안(1순위)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청장년층 인구 유입	수산업 기반 정비(인프라, 자원회복 등)	경제활동 다각화 (가공·관광 등)	새로운 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공공서비스 강화(교육, 의료·문화 등)
전체		74	27.0	23.0	18.9	14.9	12.2	4.1
거주지역	강릉시	13	30.8	30.8	15.4	15.4	-	7.7
	동해시	6	66.7	16.7	16.7	-	-	-
	속초시	8	37.5	12.5	37.5	12.5	-	-
	삼척시	19	21.1	21.1	5.3	31.6	10.5	10.5
	고성군	15	26.7	20.0	20.0	6.7	26.7	-
	양양군	13	7.7	30.8	30.8	7.7	23.1	-
거주기간	30년 이하	9	22.2	22.2	11.1	11.1	22.2	11.1
	31~60년 이하	45	28.9	22.2	20.0	17.8	8.9	2.2
	61년 이상	20	25.0	25.0	20.0	10.0	15.0	5.0
경제활동	어업	57	29.8	26.3	19.3	7.0	12.3	5.3
	어업+수산물 가공판매업	1	100.0	-	-	-	-	-
	어업+요식업	10	-	20.0	30.0	50.0	-	-
	어업+관광업	6	33.3	-	-	33.3	33.3	-
연령	60대 미만	28	21.4	25.0	21.4	10.7	17.9	3.6
	60대 이상	46	30.4	21.7	17.4	17.4	8.7	4.3

〈그림 4-8〉 마을 활성화를 위한 기타 의견

단위: %, n=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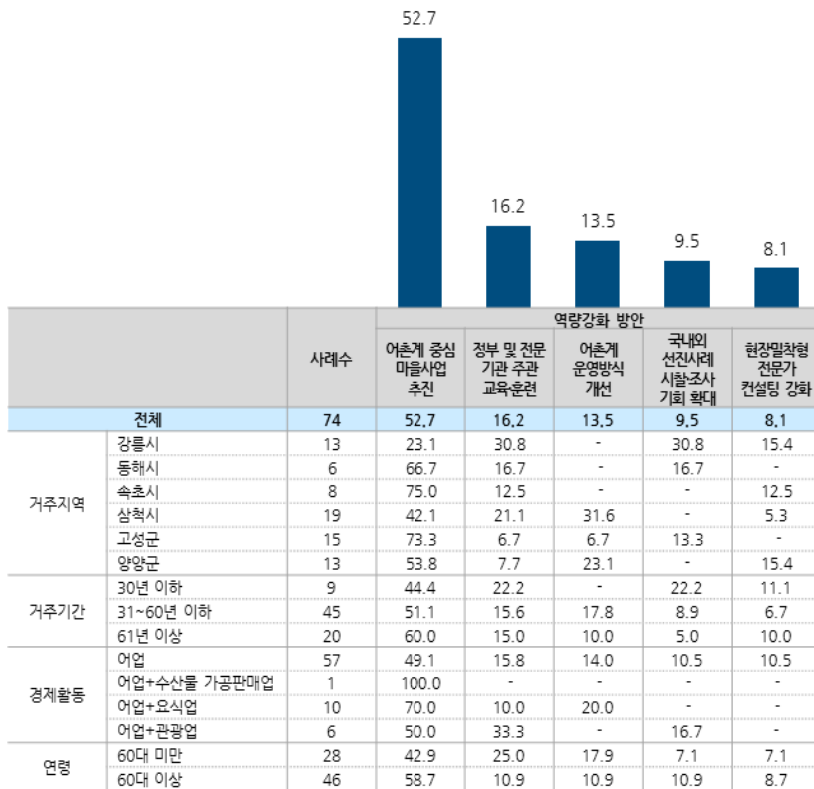


나. 마을의 공동체 역량 강화 방안

마을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촌계 중심 마을사업(발전기금 추진)’이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 및 전문기관 주관 교육·훈련’(16.2%), ‘어촌계 운영 방식 개선’(13.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9〉 마을의 공동체 역량 강화 방안

단위: %, n=74



거주지역 분류 중에는 강릉시 거주자들이 ‘정부 및 전문기관 주관 교육·훈련’ 및 ‘국내외 선진사례 시찰·조사기회 확대’(각각 30.8%)를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다. 삼척시 거주자는 ‘어촌계 중심 마을사업 추진’(42.1%), ‘어촌계 운영 방식 개선’(31.6%)을 높게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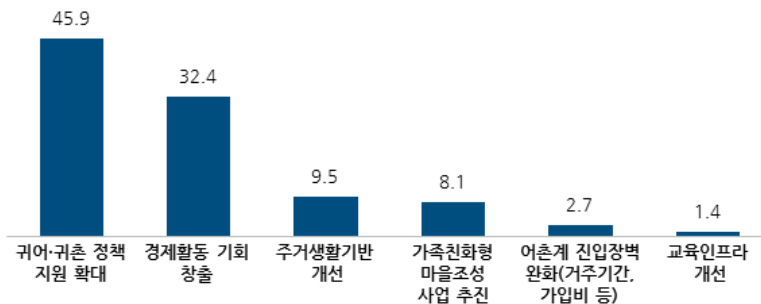
거주기간 및 경제활동,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어촌계 중심 마을사업 추진’을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마을의 청장년층 인구유입 방안

인구유입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귀어·귀촌 정책 지원확대’를 전체 응답자 중 45.9%가 선택하였으며, ‘경제활동 기회 창출’은 32.4%, ‘주거생활 기반 개선’은 9.5%, ‘가족친화형 마을 조성 사업 추진’은 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 마을 청장년층 인구유입 방안

단위: %, n=74



거주지역별로는 동해시 거주자가 ‘경제활동 기회 창출’(50.0%)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경제활동 측면에서도 어업+요식업 종사자들이 ‘경제활동 기회 창출’(70.0%)을 가장 많이 청장년층 인구 유입 방안으로 선택하였다. 그 외 그룹에서는 ‘귀어·귀촌 정책 지원 확대’를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표 4-11〉 응답자 특성별, 마을 청장년층 인구유입 방안

단위: %, n=74

		사례수	인구유입 방안					교육인프라 개선
			귀어귀촌 정책 지원 확대	경제활동 기회 창출	주거생활 기반 개선	가족친화형 마을조성 사업 추진	어촌계 진입 장벽 완화 (거주기간, 가입비 등)	
전체		74	45.9	32.4	9.5	8.1	2.7	1.4
거주지역	강릉시	13	46.2	30.8	7.7	15.4	-	-
	동해시	6	33.3	50.0	-	16.7	-	-
	속초시	8	75.0	25.0	-	-	-	-
	삼척시	19	42.1	42.1	10.5	-	-	5.3
	고성군	15	26.7	33.3	20.0	6.7	13.3	-
	양양군	13	61.5	15.4	7.7	15.4	-	-
거주기간	30년 이하	9	66.7	22.2	-	-	-	11.1
	31~60년 이하	45	40.0	37.8	11.1	8.9	2.2	-
	61년 이상	20	50.0	25.0	10.0	10.0	5.0	-
경제활동	어업	57	50.9	26.3	10.5	8.8	1.8	1.8
	어업+수산물 가공판매업	1	-	-	-	-	100.0	-
	어업+요식업	10	30.0	70.0	-	-	-	-
	어업+관광업	6	33.3	33.3	16.7	16.7	-	-
연령	60대 미만	28	42.9	32.1	14.3	7.1	-	3.6
	60대 이상	46	47.8	32.6	6.5	8.7	4.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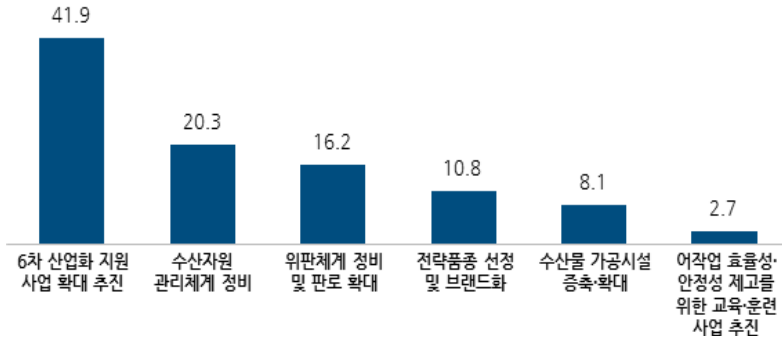
라. 마을의 수산업 활성화 방안

거주마을의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전체 응답자 중 41.9%가 '6차 산업화 지원 사업 확대 추진'을 선택하였다. 이어 '수산자원 관리체계 정비'(20.3%), '위판체계 정비 및 판로 확대'(16.2%), '전략품종 선정 및 브랜드화'(10.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속초시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수산자원 관리 체계 정비'(대포: 100.0%, 죽왕: 40.0%)를 높게 평가하였다. 여타 지역 거주자들은 '6차 산업화 지원 사업 확대 추진'을 주요 수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4-11〉 마을 수산업 활성화 방안

단위: %, n=74



〈표 4-12〉 응답자 특성별, 마을 수산업 활성화 방안

단위: %, n=74

		사례수	수산업 활성화 방안					
			6차 산업화 지원사업 확대 추진	수산자원 관리 체계 정비	위판체계 정비 및 판로 확대	전략품종 선정 및 브랜드화	수산물 가공시설 증축·확대	여각업 효율성 안정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추진
전체		74	41.9	20.3	16.2	10.8	8.1	2.7
거주지역	강릉시	13	53.8	15.4	-	23.1	-	7.7
	동해시	6	33.3	16.7	50.0	-	-	-
	속초시	8	12.5	50.0	12.5	-	25.0	-
	삼척시	19	42.1	10.5	10.5	10.5	21.1	5.3
	고성군	15	40.0	20.0	26.7	13.3	-	-
	양양군	13	53.8	23.1	15.4	7.7	-	-
거주기간	30년 이하	9	33.3	33.3	11.1	11.1	-	11.1
	31~60년 이하	45	48.9	20.0	11.1	6.7	11.1	2.2
	61년 이상	20	30.0	15.0	30.0	20.0	5.0	-
경제활동	어업	57	43.9	19.3	17.5	8.8	7.0	3.5
	어업+수산물 가공판매업	1	-	-	-	100.0	-	-
	어업+요식업	10	20.0	40.0	10.0	20.0	10.0	-
	어업+관광업	6	66.7	-	16.7	-	16.7	-
연령	60대 미만	28	50.0	17.9	7.1	10.7	10.7	3.6
	60대 이상	46	37.0	21.7	21.7	10.9	6.5	2.2

거주기간별로는 30년 이하 거주자들이 ‘6차 산업화 지원사업 확대 추진’(33.3%)과 ‘수산자원 관리 체계 정비’(33.3%)를 높게 평가한 반면, 61년 이상 거주자들은 ‘6차 산업화 지원사업 확대 추진’(30.0%)과 ‘위판체계 정비 및 판로 확대’(30.0%)를 수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어업+요식업 종사자들이 ‘수산자원 관리체계 정비’(40.0%)를 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마. 마을의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마을 내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주민이 직접 관리 할 수 있는 중소 규모 관광사업 운영’이 36.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나아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사업 발굴’도 35.1%로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중앙·지방정부 주도의 대규모 해양 관광 인프라 조성(해양레포츠단지, 마리나 등)’이 25.7%, ‘대국민 선호도가 높은 관광사업 발굴’이 2.7% 순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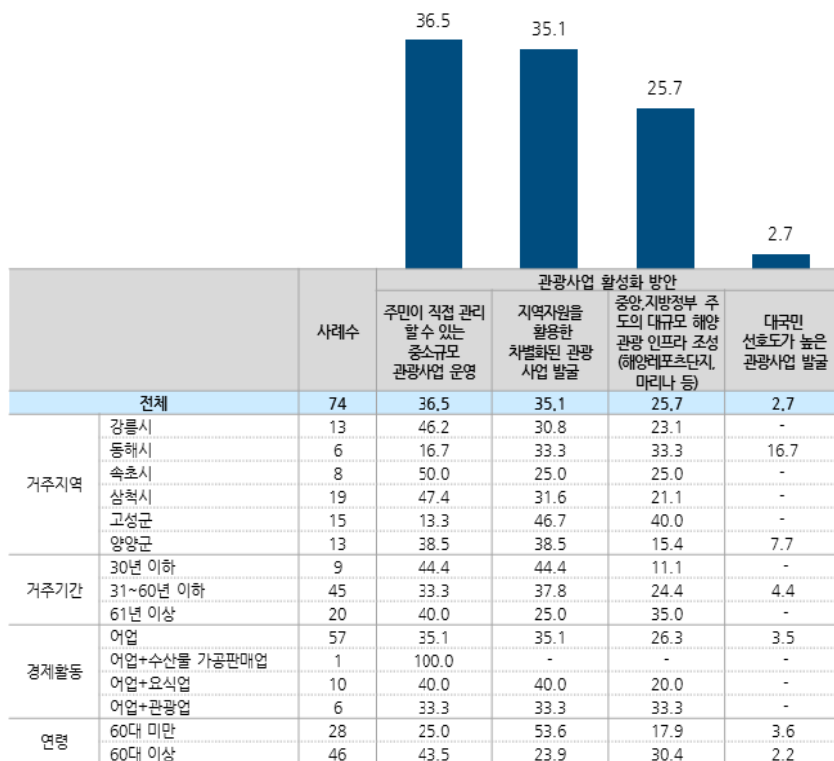
거주지역별로 보면, 강릉시/속초시/삼척 거주자들은 ‘주민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중소 규모 관광사업 운영’을 가장 높게 선택한 반면, 고성군 거주자들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사업 발굴’을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고성군의 죽왕수협 응답자들의 경우는 ‘중앙·지방정부 주도의 대규모 해양 관광 인프라 조성(해양레포츠단지, 마리나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거주기간별로는 30년 이하 거주자들은 ‘주민이 직접 관리 할 수 있는 중소규모 관광사업 운영’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사업 발굴’(각각 44.4%)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31~60년 이하 거주자들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사업 발굴’(37.8%)을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미만 거주자들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사업 발굴’(53.6%)을, 60대 이상 거주자들은 ‘주민이 직접 관리 할 수 있는 중소규모 관광사업 운영’(43.5%)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림 4-12〉 마을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단위: %, n=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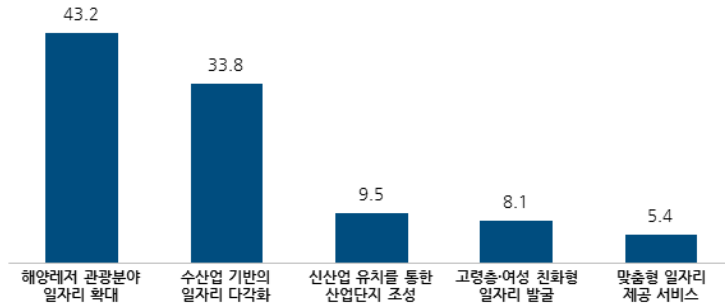


바. 마을의 일자리 확대 방안

어촌마을 내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는 전체 응답자 중 43.2%가 ‘해양레저 관광 분야 일자리 확대’를 선택하였다. 이어 ‘수산업 기반의 일자리 다각화’(33.8%), ‘신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9.5%)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3〉 마을 일자리 확대 방안

단위: %, n=74



거주지역별로는 속초시 거주자는 ‘수산업 기반의 일자리 다각화’(62.5%)를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해안레저 관광 분야 일자리 확대’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어업+요식업 종사자들이 ‘수산업 기반의 일자리 다각화’(70.0%)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경제활동 참여자들은 ‘해안레저 관광 분야 일자리 확대’를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3〉 응답자 특성별, 마을 일자리 확대 방안

단위: %, n=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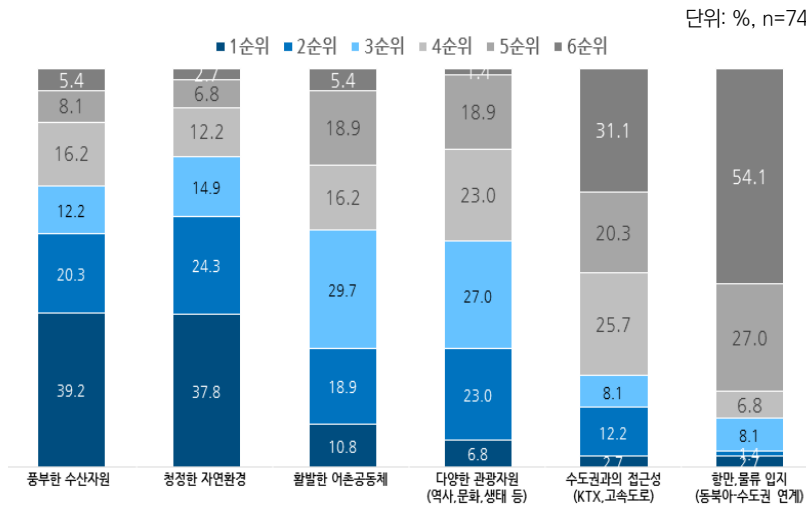
		사례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				
			해양레저 관광분야 일자리 확대	수산업 기반 일자리 다각화	신산업 유치 통한 산업 단지 조성	고령층·여성 친화형 일자리 발굴	맞춤형 일자리 제공 서비스
전체		74	43.2	33.8	9.5	8.1	5.4
거주지역	강릉시	13	53.8	30.8	7.7	7.7	-
	동해시	6	66.7	16.7	-	-	16.7
	속초시	8	37.5	62.5	-	-	-
	삼척시	19	31.6	31.6	15.8	10.5	10.5
	고성군	15	46.7	33.3	6.7	13.3	-
	양양군	13	38.5	30.8	15.4	7.7	7.7
거주기간	30년 이하	9	44.4	33.3	22.2	-	-
	31~60년 이하	45	44.4	35.6	4.4	6.7	8.9
	61년 이상	20	40.0	30.0	15.0	15.0	-
경제활동	어업	57	42.1	29.8	10.5	10.5	7.0
	어업+수산물 가공판매업	1	100.0	-	-	-	-
	어업+요식업	10	20.0	70.0	10.0	-	-
	어업+관광업	6	83.3	16.7	-	-	-
연령	60대 미만	28	46.4	35.7	7.1	7.1	3.6
	60대 이상	46	41.3	32.6	10.9	8.7	6.5

(3) 어촌마을 특화분야에 대한 주민의견

가. 강원도 어촌이 지닌 경쟁력

강원도의 어촌이 지니는 경쟁력에 대해서는 1순위 기준으로 ‘풍부한 수산자원’(39.2%)을 가장 높게 선택하였으며, ‘청정한 자연환경’(37.8%), ‘활발한 어촌공동체’(10.8%), ‘다양한 관광자원(역사, 문화, 생태 등)’(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기준으로는 ‘청정한 자연환경’(24.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관광자원(역사, 문화, 생태 등)’(23.0%), ‘풍부한 수산자원’(20.3%)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4〉 강원도의 어촌이 지닌 경쟁력



거주지역별로는 속초시의 속초시수협 및 대포수협 응답자들이 ‘풍부한 수산자원’(속초시: 80.0%, 대포: 66.7%)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과 양양군 거주자들은 ‘청정한 자연환경’(삼척: 42.1%, 양양군: 53.8%)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거주기간별로는 30년 이하 거주자들은 ‘청정한 자연환경’(44.4%)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61년 이상 거주자들은 ‘풍부한 수산자원’(45.0%)이 강원도의 어촌이 지닌 경쟁력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경제활동 측면에서 보면, 어업+요식업을 하고 있는 거주자들의 경우 응답자 중 60.0%가 ‘풍부한 수산자원’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어업과 어업+관광업을 하고 있는 거주자들은 ‘청정한 자연환경’이라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60대 미만인 거주자들은 ‘청정한 자연환경(46.4%)’을 가장 높게 선택한 반면, 60대 이상 거주자들은 ‘풍부한 수산자원’(39.1%)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4-14〉 응답자 특성별, 강원도의 어촌이 지닌 경쟁력(1순위 기준)

단위: %, n=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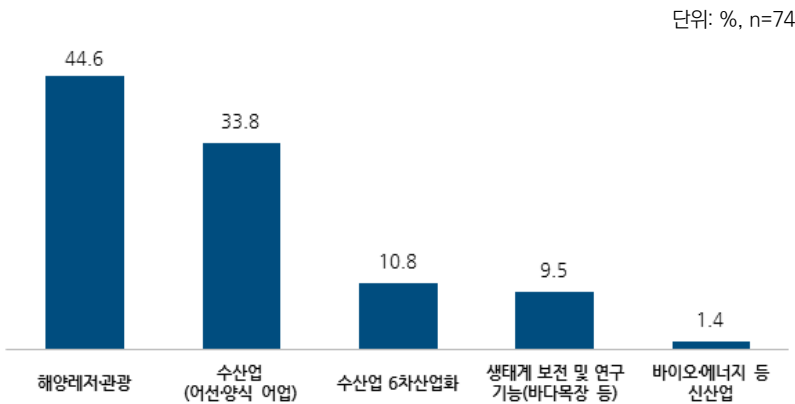
		사례수	강원도의 어촌이 지닌 경쟁력(1순위)					
			풍부한 수산자원	청정한 자연환경	활발한 어촌 공동체	다양한 관광자원	수도권과의 접근성	함만물류 입지
전체		74	39.2	37.8	10.8	6.8	2.7	2.7
거주지역	강릉시	13	15.4	61.5	-	7.7	7.7	7.7
	동해시	6	50.0	16.7	16.7	-	-	16.7
	속초시	8	75.0	12.5	12.5	-	-	-
	삼척시	19	36.8	42.1	10.5	10.5	-	-
	고성군	15	40.0	20.0	20.0	13.3	6.7	-
	양양군	13	38.5	53.8	7.7	-	-	-
거주기간	30년 이하	9	33.3	44.4	-	11.1	-	11.1
	31~60년 이하	45	37.8	37.8	13.3	8.9	2.2	-
	61년 이상	20	45.0	35.0	10.0	-	5.0	5.0
경제활동	어업	57	38.6	42.1	8.8	5.3	3.5	1.8
	어업+수산물 가공판매업	1	-	-	100.0	-	-	-
	어업+요식업	10	60.0	10.0	10.0	20.0	-	-
	어업+관광업	6	16.7	50.0	16.7	-	-	16.7
연령	60대 미만	28	39.3	46.4	3.6	7.1	3.6	-
	60대 이상	46	39.1	32.6	15.2	6.5	2.2	4.3

강원도의 어촌이 지닌 경쟁력에 대한 다른 의견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어업기반조성’과 ‘수산물판매 개척과 관광산업 육성’, ‘소규모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됨’, ‘관광활성화를 위한 유료체험마을 조성’이라고 응답하였다.

나. 마을의 유망한 특화사업

마을의 유망한 특화사업으로 전체 응답자 중 44.6%가 ‘해양레저·관광’을 선택하였다. 이어 ‘수산업(어선·양식어업)’(33.8%), ‘수산업 6차산업화’(10.8%), ‘생태계 보전 및 연구기능(바다목장 등)’(9.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4-15〉 유망한 특화사업



거주지역별로는 동해시와 양양군의 거주자들 중 ‘해저레저·관광’을 특화사업(50%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이어 고성군 죽왕수협 구역 내 응답자들은 ‘수산업(어선·양식업)’(50.0%)이라고 선택하였다.

〈표 4-15〉 응답자 특성별, 유망한 특화사업

단위: %, n=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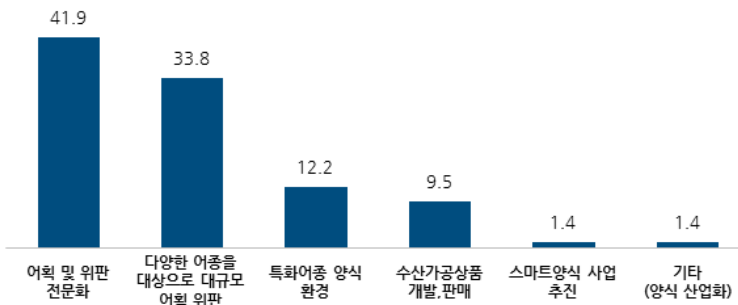
		사례수	특화사업 유망분야				
			해양레저 관광	수산업(어선 양식 어업)	수산업 6차 산업화	생태계 보전 및 연구기능 (바다목장 등)	바이오- 에너지 등 신산업
전체		74	44.6	33.8	10.8	9.5	1.4
거주지역	강릉시	13	38.5	38.5	15.4	7.7	-
	동해시	6	50.0	33.3	-	-	16.7
	속초시	8	37.5	37.5	12.5	12.5	-
	삼척시	19	47.4	26.3	5.3	21.1	-
	고성군	15	26.7	46.7	26.7	-	-
	양양군	13	69.2	23.1	-	7.7	-
거주기간	30년 이하	9	44.4	22.2	11.1	22.2	-
	31~60년 이하	45	46.7	31.1	13.3	6.7	2.2
	61년 이상	20	40.0	45.0	5.0	10.0	-
경제활동	어업	57	43.9	31.6	10.5	12.3	1.8
	어업+수산물 가공판매업	1	-	100.0	-	-	-
	어업+요식업	10	30.0	50.0	20.0	-	-
	어업+관광업	6	83.3	16.7	-	-	-
연령	60대 미만	28	53.6	21.4	14.3	10.7	-
	60대 이상	46	39.1	41.3	8.7	8.7	2.2

경제활동 측면에서 보면, 어업+관광업을 같이 하는 거주자들이 ‘해저레저·관광’을 특화사업으로 바라보는 비율이 83.3%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거주자들(39.1%)보다 60대 미만 거주자들(53.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 마을의 수산업 분야 강점

〈그림 4-16〉 수산업 분야 강점

단위: %, n=74



마을의 수산업 분야 강점으로는 전체 응답자 중 41.9%가 ‘어획 및 위판 전문화’를 선택하였다. 이어 ‘다양한 어종을 대상으로 대규모 어획·위판’(33.8%), ‘특화어종 양식 환경’(12.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강릉시와 삼척시, 고성군 거주자들이 ‘어획 및 위판 전문화’를 수산업 분야의 강점이라고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속초시와 양양군 거주자들은 ‘다양한 어종을 대상으로 대규모 어획·어판’이라고 선택하였다.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이 61년 이상(50.0%)인 거주자들은 ‘어획 및 위판 전문화’를 수산업 분야의 강점이라고 응답하였다.

경제활동 측면에서 보면, 어업+요식업(60.0%)을 같이 하는 거주자들이 ‘어획 및 위판 전문화’를 강점으로 선택하였으며, 연령별로는 60대 미만 거주자들(39.3%)보다 60대 이상 거주자들(43.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6〉 응답자 특성별, 수산업 분야 강점

단위: %, n=74

		사례수	수산업 분야의 강점					
			어획 및 위판 전문화	다양한 어종 대상 대규모 어획위판	특화어종 양식 환경	수산물가공상품 개발·판매	스마트양식 사업 추진	기타 (양식 산업화)
전체		74	41.9	33.8	12.2	9.5	1.4	1.4
거주지역	강릉시	13	61.5	30.8	-	-	-	7.7
	동해시	6	33.3	33.3	33.3	-	-	-
	속초시	8	12.5	50.0	-	25.0	12.5	-
	삼척시	19	52.6	15.8	15.8	15.8	-	-
	고성군	15	46.7	20.0	26.7	6.7	-	-
	양양군	13	23.1	69.2	-	7.7	-	-
거주기간	30년 이하	9	33.3	44.4	11.1	11.1	-	-
	31~60년 이하	45	40.0	33.3	11.1	11.1	2.2	2.2
	61년 이상	20	50.0	30.0	15.0	5.0	-	-
경제활동	어업	57	38.6	38.6	12.3	8.8	1.8	-
	어업+수산물 가공·판매업	1	-	-	100.0	-	-	-
	어업+요식업	10	60.0	30.0	10.0	-	-	-
	어업+관광업	6	50.0	-	-	33.3	-	16.7
연령	60대 미만	28	39.3	42.9	7.1	10.7	-	-
	60대 이상	46	43.5	28.3	15.2	8.7	2.2	2.2

‘어획 및 위판 전문화’ 관련 어종으로는 가자미(2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어(17%), 대게(10%), ‘광어’ 및 ‘도치’, ‘해삼’ 각각 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화어종 양식 환경’ 관련 어종으로는 ‘해삼’(60%)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17〉 ‘어획 및 위판 전문화’ 어종 및 ‘특화어종 양식환경’ 어종

[어획 및 위판 전문화 어종]			[특화어종 양식환경 어종]		
어종	사례수	비율	어종	사례수	비율
가자미	7	24%	해삼	6	60%
문어	5	17%	멍게	1	10%
대게	3	10%	미역	1	10%
광어	2	7%	연어	1	10%
도치	2	7%	전복	1	10%
해삼	2	7%			
고등어	1	3%			
도다리	1	3%			
도루묵	1	3%			
미역	1	3%			
양미리	1	3%			
오징어	1	3%			
오징어	1	3%			
청어	1	3%			

라. 마을의 해양레저·관광 분야가 지닌 강점

마을의 해양레저·관광 분야가 지닌 강점으로 전체 응답자 중 56.8%가 ‘체험형 생태관광’을 선택하였다. 이어 ‘레저형 해양스포츠 및 경기운영’ (31.1%), ‘요양형 힐링관광’(5.4%), ‘학습형 역사·문화 관광’ (2.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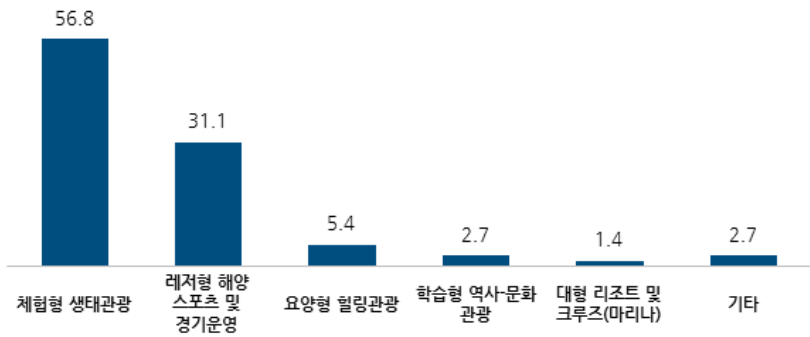
거주지역별로는 동해시 거주자는 주로 ‘레저형 해양스포츠 및 경기운영’(50.0%)이 강점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외 거주자들은 ‘체험형 생태관광’을 해양레저·관광 분야가 지닌 강점이라고 선택하였다.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이 61년 이상(60.0%)인 거주자들은 ‘체험형 생태관광’을 해양레저·관광 분야가 지닌 강점이라고 응답하였다.

경제활동 측면에서 보면, 어업+요식업(60.0%)을 같이 하는 거주자들이 ‘체험형 생태관광’을 강점으로 선택하였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거주자들(52.2%)보다 60대 미만 거주자들(64.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7〉 해양레저 · 관광 분야가 지닌 강점

단위: %, n=74



〈표 4-18〉 응답자 특성별, 해양레저 · 관광 분야가 지닌 강점

단위: %, n=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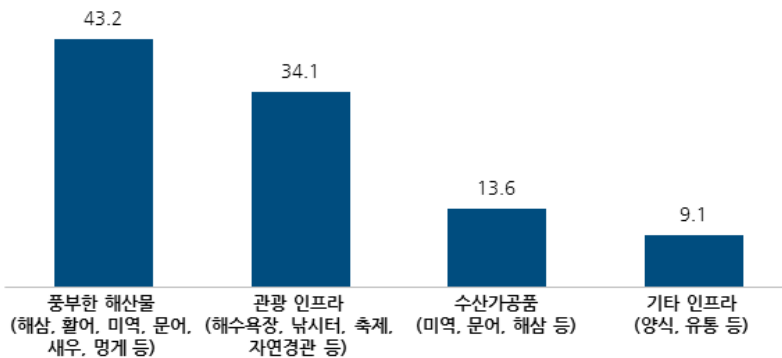
		사례수	해양레저 · 관광분야 강점					
			체험형 생태관광	레저형 해양 스포츠 및 경기운영	요양형 힐링 관광	학습형 역사·문화 관광	대형 리조트 및 크루즈 (마리나)	기타
전체		74	56.8	31.1	5.4	2.7	1.4	2.7
거주지역	강릉시	13	53.8	30.8	-	7.7	-	7.7
	동해시	6	16.7	50.0	16.7	-	16.7	-
	속초시	8	75.0	-	25.0	-	-	-
	삼척시	19	63.2	26.3	-	5.3	5.3	-
	고성군	15	53.3	46.7	-	-	-	-
	양양군	13	61.5	30.8	7.7	-	-	-
거주기간	30년 이하	9	44.4	33.3	11.1	-	-	11.1
	31~60년 이하	45	57.8	28.9	4.4	4.4	2.2	2.2
	61년 이상	20	60.0	35.0	5.0	-	-	-
경제활동	어업	57	57.9	33.3	5.3	-	1.8	1.8
	어업+수산물 가공판매업	1	-	100.0	-	-	-	-
	어업+요식업	10	60.0	20.0	10.0	10.0	-	-
	어업+관광업	6	50.0	16.7	-	16.7	-	16.7
연령	60대 미만	28	64.3	32.1	3.6	-	-	-
	60대 이상	46	52.2	30.4	6.5	4.3	2.2	4.3

마. 마을의 수산업 6차산업을 위한 특화 '자원'

마을의 수산업 6차산업을 위한 특화 '자원'으로 전체 응답자 중 43.2%가 '풍부한 해산물(해삼, 활어, 미역, 문어, 새우, 멍게 등)'을 선택하였다. 이어 '관광 인프라(해수욕장, 낚시터 축제, 자연경관 등)'(34.1%), '수산물가공품(미역, 문어 해삼 등)'(13.6%), '기타 인프라(양식, 유통 등)'(9.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4-18〉 수산업 6차산업을 위한 특화 '자원'

단위: %, n=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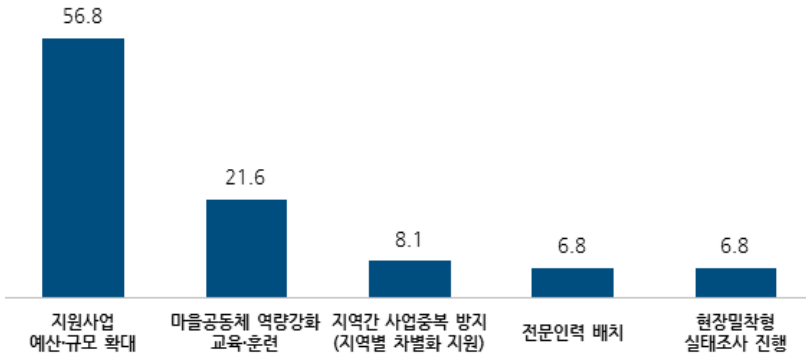


바. 마을의 특화사업 정착을 위한 정책

마을의 특화사업 정착을 위한 정책으로 전체 응답자 중 56.8%가 '지원사업 예산·규모 확대'를 선택하였다. 이어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훈련'(21.6%), '지역 간 사업중복 방지(지역별 차별화 지원)'(8.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4-19〉 특화사업 정착을 위한 정책

단위: %, n=74



지역별로는 속초시 거주자들의 경우 ‘지원사업 예산·규모 확대’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훈련’(각각 50.0%)이 특화사업 정착을 위한 주요 정책지원 사항이라고 주목하였다. 여타 지역의 거주자들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훈련’이 마을의 특화사업 정착을 위한 주요 정책대안임에 공감하고 있다.

거주기간별로는 거주기간 61년 이상(65.0%)의 거주자들 중 ‘지원사업 예산·규모 확대’를 주요 특화사업 정착대안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 측면에서 보면, 어업+요식업(70.0%)을 같이 하는 거주자들이 ‘지원사업 예산·규모 확대’를 선택하였으며, 연령별로는 60대 미만 거주자들(50.0%)보다 60대 이상 거주자들(60.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9〉 응답자 특성별, 특화사업 정착을 위한 정책

단위: %, n=74

		사례수	특화사업 정착을 위한 정책				
			지원사업 예산규모 확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훈련	지역간 사업 충복 방지 (지역별 차별화 지원)	전문인력 배치	현장밀착형 실태조사 진행
전체		74	56.8	21.6	8.1	6.8	6.8
거주지역	강릉시	13	53.8	15.4	7.7	15.4	7.7
	동해시	6	66.7	16.7	-	16.7	-
	속초시	8	50.0	50.0	-	-	-
	삼척시	19	52.6	5.3	21.1	5.3	15.8
	고성군	15	60.0	33.3	-	6.7	-
	양양군	13	61.5	23.1	7.7	-	7.7
거주기간	30년 이하	9	22.2	22.2	22.2	-	33.3
	31~60년 이하	45	60.0	24.4	8.9	2.2	4.4
	61년 이상	20	65.0	15.0	-	20.0	-
경제활동	어업	57	54.4	22.8	7.0	8.8	7.0
	어업+수산물 가공판매업	1	-	100.0	-	-	-
	어업+요식업	10	70.0	10.0	10.0	-	10.0
	어업+관광업	6	66.7	16.7	16.7	-	-
연령	60대 미만	28	50.0	21.4	14.3	-	14.3
	60대 이상	46	60.9	21.7	4.3	10.9	2.2

4. 인식조사 결과 종합

본 연구는 강원도 어촌마을의 인구감소 요인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어촌마을 쇠퇴에 대한 인식과 어촌마을 활성화 방안, 어촌마을의 특화분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강원도 어촌마을의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문항은 3개 파트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어촌마을 쇠퇴에 대한 주민인식 조사 결과, 현재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점점 쇠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원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였으며, 경제활동 기반이 약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향후 소멸할 것 같다는 생각은 대부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와 청장년층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어촌계 중심 마을 사업추진과 정부 및 전문기관 주관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청장년층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귀어·귀촌 정책 지원이 확대되고, 경제활동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 외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6차 산업화 지원 사업 확대 추진과 수산자원 관리체계 정비,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이 직접 관리 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관광사업 또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현재 강원도 어촌의 경쟁력은 풍부한 수산자원과 청정한 자연환경 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해양레저·관광과 수산업이 유망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어획 및 위판 전문화와 다양한 어종의 대규모 어획·위판을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해양레저·관광분야에서는 체험형 생태관광과 레저형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을 상당한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화사업들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책사업 확대와 더불어 교육·훈련을 통한 어촌공동체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표 4-20〉 어촌주민 인식조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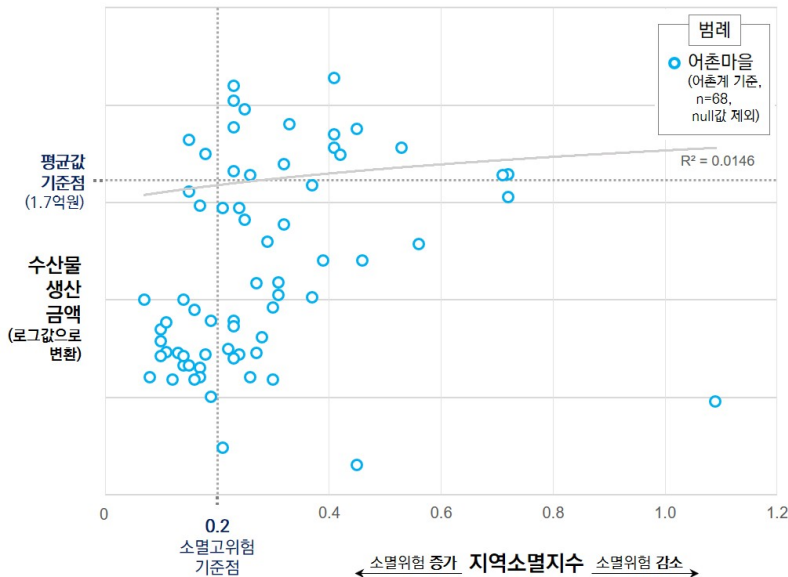
구분	주요 결과 및 이슈	
어촌마을 쇠퇴에 대한 인식	쇠퇴에 대한 인식 및 이유	• 쇠퇴하고 있다(63.5%) • 쇠퇴 이유 1순위 : 급속한 고령화 진전(53.2%) 2순위 : 경제활동 기반 약화·붕괴(23.4%)
	마을 인구 감소에 대한 인식 및 원인	• 인구감소에 대한 인식 : 심각하다(77.0%) • 인구감소 원인 1순위 : 소득감소 및 경제 활동 기회 축소(73.0%) 2순위 : 자녀교육 인프라 부족(8.1%), 생활서비스 취약(의료, 복지, 문화 등)(8.1%)

구분	주요 결과 및 이슈	
어촌마을 활성화 방안 주민인식	향후 소멸에 대한 인식	• 향후 마을이 소멸할 것 같다(10.8%)
	마을 활성화를 위한 대안	• 1순위 :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27.0%) • 2순위 : 청장년층 인구 유입(23.0%)
	마을 공동체 역량강화 방안	• 1순위 : 어촌계 중심 마을 사업추진(52.7%) • 2순위 : 정부 및 전문기관 주관 교육·훈련(16.2%)
	인구유입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 1순위 : 귀어·귀촌 정책 지원 확대(45.9%) • 2순위 : 경제활동 기회 창출(32.4%)
	수산업 활성화 방안	• 1순위 : 6차 산업화 지원 사업 확대 추진(41.9%) • 2순위 : 수산자원 관리체계 정비(20.3%)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 1순위 : 주민이 직접 관리가 가능한 관광사업 운영(36.5%) • 2순위 :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발굴(35.1%)
	일자리 확대 방안	• 1순위 : 해양레저 관광분야 일자리 확대(43.2%) • 2순위 : 수산업 기반의 일자리 다각화(33.8%)
어촌마을 특화분야 주민의견	강원도 어촌 경쟁력	• 1순위 : 풍부한 수산자원(39.2%) • 2순위 : 청정한 자연환경(37.8%)
	특화사업 유망분야	• 1순위 : 해양레저 관광(44.6%) • 2순위 : 수산업(어선, 양식어업)(33.8%)
	수산업 분야 강점	• 1순위 : 어획 및 위판 전문화(41.9%) → 어종 : 가자미(24%)>문어(17%)>대게(10%) 순 • 2순위 : 다양한 어종을 대상으로 대규모 어획·위판(33.8%)
	해양레저·관광 분야 강점	• 1순위 : 체험형 생태관광(56.8%) • 2순위 : 레저형 해양 스포츠 및 경기운영(31.1%)
	수산업 6차산업화 특화 자원	• 1순위 : 풍부한 해산물(해삼, 활어, 미역, 문어, 새우 등)(43.2%) • 2순위 : 관광 인프라(해수욕장, 낚시터, 축제 · 자연경관 등)(34.1%) • 3순위 : 수산가공품(미역, 문어, 해삼 등)(13.6%)
	특화사업 정책을 위한 정책	• 1순위 : 지원사업 예산·규모 확대(56.8%) • 2순위 :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훈련(21.6%) • 3순위 : 지역간 사업중복 방지(지역별 차별화)(8.1%)

제2절 어촌마을 유형분류

강원 어촌지역에서는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을수록 어촌계의 수산물 생산실적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그림 4-20〉 참조). 이는 강원 어촌지역의 마을공동체가 수산업에 대한 강한 의존도를 보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¹¹⁾. 〈그림 4-20〉에서 좌표의 x축은 개별 어촌계를 포함하는 마을의 지역소멸지수로, 어촌공동체의 활성화 수준 및 지속가능성을 대변한다. y축은 어촌계별 수산물 생산실적(금액)으로 수산업의 규모를 의미하며, 어촌계별 편차가 큰 관계로 평균치를 기준으로 남긴 채 로그값으로 변환한 값을 활용하였다.

〈그림 4-20〉 어촌마을 지역소멸지수-수산생산규모 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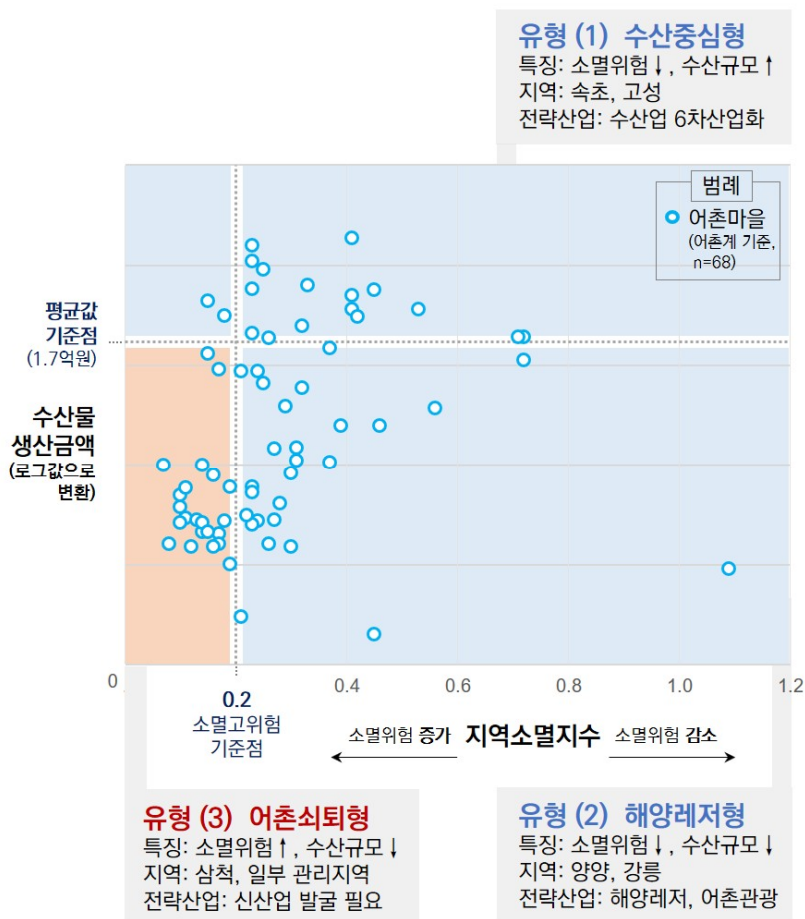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11) 그러나 어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지역의 수산업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어촌마을 유형화에는 지역 내 수산업 규모의 평균수준과 지역소멸 지수 0.2(소멸고위험)를 분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유형분류 결과에 따르면, 강원 어촌마을은 ① 수산중심형 ② 해양레저형 ③ 어촌쇠퇴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4-21) 참조).

〈그림 4-21〉 어촌마을 유형분류 결과



자료: 저자 작성

먼저, ① 수산중심형은 소멸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역내 수산업 규모가 큰 유형으로서 주로 속초시와 고성군의 어촌계가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21〉 참조). 해당 유형은 수산업을 중심으로 어촌공동체가 활성화 되어 있으며,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지역의 대표적인 경쟁력으로 ‘풍부한 수산자원 보유’를 꼽는 등 어획·위판 전문화를 통해 어촌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어촌마을의 활성화 방안으로 공동체 역량 제고를 1순위로 지목하였으며, 역량 제고를 위해 어촌계 중심의 마을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응답하여 어촌계의 수산역량 강화를 통해 수산특화 어촌마을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수산중심형 어촌마을의 전략산업으로는 전문 위판체계 마련과 수산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제안할 수 있다.

둘째, 양양군과 강릉시에서 주로 관찰되는 ② 해양레저형은 어촌의 지역소멸위험이 낮으면서 수산업 규모도 작은 지역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수산업 중심의 어촌공동체 운영보다는 연안지역의 관광·교육 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을 통해 공동체의 활성화 수준을 유지 및 확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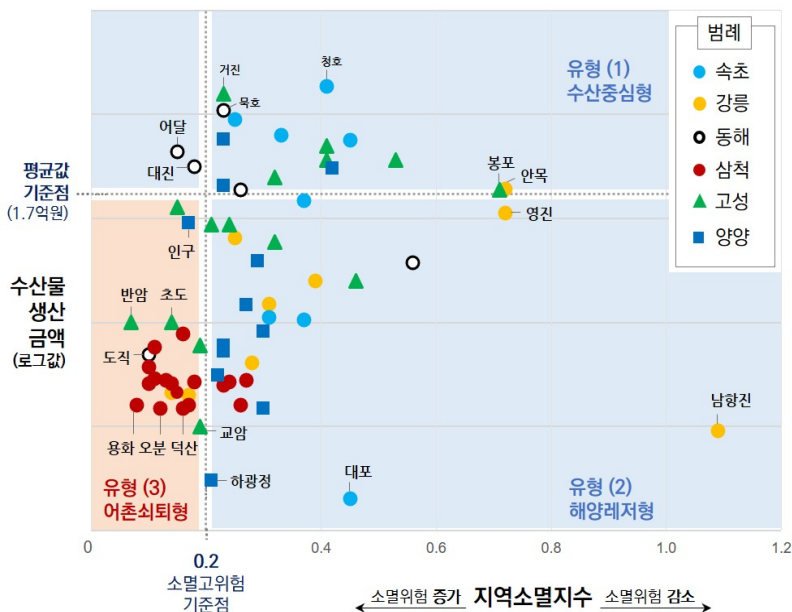
〈그림 4-22〉 양양군 내 해양레저·관광 참여 현장



자료: 속초양양인터넷뉴스(검색일: 2018. 1. 22.)
머니투데이(검색일: 2018. 1. 22.)

해양레저형의 대표적인 전략산업으로는 현재 양양과 강릉 일대에서 기 활성화 되어 있는 해양레저와 어촌관광을 꼽을 수 있다. 나아가 심층면담 결과에서 해당 지역의 어촌계 갈등과 공동체 운영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지적된바, 레저·관광사업 분야 신규인력 유입을 통한 어촌공동체 운영방식 재구성이 요구된다. 양양과 강릉지역 인식조사에서도 청장년층 인구유입을 주요한 마을활성화를 대안으로 응답한 만큼, 청장년층 인구유입이 용이하도록 어촌계 가입기준을 완화하거나 ‘청장년층 귀어·귀촌 특구’ 등을 조성하는 등 획기적인 신규인력 유입방안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림 4-23〉 지역별(시군) 어촌마을 유형 분포도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 ③ 어촌쇠퇴형은 지역소멸위험이 높고 수산업규모는 작아 어촌마을로서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지역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어촌쇠퇴형 지역으로는 삼척시의 용화·오분·덕산마을과 고성군·강릉시의 일부 어촌마을 일대가 해당된다. 특히, 삼척시의 용화마을은 강원도 어촌마을 중 지역소멸위험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어촌쇠퇴형 마을 중 수산업 활성화 수준 또한 매우 낮은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삼척을 중심으로 한 어촌마을 쇠퇴위험은 본 연구의 인식조사 및 심층면담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실제 삼척시 삼척·원덕수협이 어촌계원들은 여타 강원지역 어촌계 대비 마을쇠퇴와 공동체 붕괴의 위험성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삼척지역에서는 시멘트 사업장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어장축소 및 생활환경 피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부실 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수산업 여건의 악화 문제가 제기되었다.

어촌쇠퇴 유형은 자체 자원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수산중심형·해양레저형과는 달리, 정책지원을 통해 어촌마을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삼척지역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물생산에서 나아가 가공·관광 등 경제활동을 다각화하는 것이 마을활성화의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현지 수산업 경쟁력 및 여건이 강원도 내 다른 어촌지역보다 높지 않은 관계로, 수산업 기반의 경제활동 다양화보다는 지역주민이 꼽는 ‘청정한 자연환경’의 강점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발굴이 보다 주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략산업으로는 주민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생태관광 또는 해양스포츠 위락시설 운영을 제안할 수 있다. 더불어 해양바이오 등 대규모 인력유입이 가능한 신산업 발

굴과 마을단위의 해양치유단지 조성, 해양레저형보다 개방성이 높은 ‘청장년층 귀어·귀촌 특구’ 운영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삼척시 어촌마을 일대에서는 급격한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생활 SOC의 부족 문제가 제기된바, 정주생활기반 개선을 통해 생활서비스를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삼척 일원에는 각종 오염원 유발 시설 건립에 따른 환경관리 사업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제 5 장

강원도 어촌 신활력 방안

제1절 강원 어촌마을 신활력 제고 추진방안

1. 대응전략

1) 개요

(1) 기본방향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어촌마을의 신활력 방안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강원 수산업·어촌의 실태 및 전망, 국내외 사례 연구, 어촌 인식도 및 유형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통된 대응방안을 <표 5-1>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2장은 수산업 및 어촌실태 및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수산업과 어촌사회의 급속한 위축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이 제시되었다.

첫째, 어업생산량은 잡는 어업의 전성기였던 1981년과 2017년을 비교해 보면 약 6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업 위축에 대한 문제는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관광활성화 등 어촌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해양수산물 수산업과 어촌분야에 대한 정책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강원도의 어가인구는 1970년 10만 6,189명에서 2017년 4,917명으로 40년이 지난 상황에서 95.4%나 감소하였다. 어촌사회의 심각한 초저출산과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특단의 어촌기반 구축을 위한 대응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셋째, 강원 어촌의 지역소멸 고위험지역은 2015년 기준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어촌공동체의 구조개편과 역량 강화를 통해 개방적인 어촌사회로의 전환과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어촌정책의 동향과 사례 등 식락하고 있는 어촌을 민·관(정부, 지자체, 주민주도 등)이 함께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내외 사례연구를 살펴보았다.

첫째, 해외 어촌정책 동향에서는 유럽연합의 공동체 주도형 지역개발(Community-Led Local Development)와 스마트 빌리지, 일본 지방창생전략(소거점화, Compact City)에서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와 특성별 맞춤형 어촌으로 활성화시켰던 시사점을 적용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내 어촌정책도 국정기조에 따른 혁신과 포용성장, 생활밀착형 SOC(어촌뉴딜 300), 어촌경제 활성화 등을 살펴보았고, 어촌 활성화와 관련된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외 사례에서 쇠락하는 어촌마을의 빈집활용, 연대·협력을 통한 소득과 일자리 창출(리버마켓),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경제, 복지자립을 이루어낸 사례 등을 통해 어촌공동체의 구조개편 및 역량강화, 특성별 맞춤형 어촌 활성화,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기반 구축 등의 대응방안으로 도출되었다.

제4장에서는 어촌 쇠락에 대한 주민의 인식도 조사와 74개 어촌마을에 대한 유형화 분석 등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강원지역의 어업인은 해당 어촌마을의 인구감소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77.0%로 나타났고, 경제적 요인(수산업 쇠퇴 및 일자리 감소)이 주요 원인으로 보는 경우가 73.0%로 조사되었다. 어업인이 인구감소에 대한 체감정도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촌사회에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어촌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어업인 어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어촌공동체 주도의 사업을 강화(52.7%), 귀어·귀촌 정책 확대(45.9%), 해양레저 일자리 확대(43.2%), 6차산업화 지원(41.9%) 등을 선택하였다. 어업인이 인식하는 어촌 활성화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소멸성과 수산업 위상을 기준으로 강원 74개 마을에 대해 유형화 분석을 해 본 결과, 수산중심형(속초, 고성), 해양레저형(양양, 강릉), 어촌쇠퇴형(삼척 등)으로 구분되었다. 강원 어촌의 유형특성별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어촌을 활성화하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표 5-1〉 강원 어촌마을 신활력 제고를 위한 대응전략 도출

구분		주요내용	대응전략
어촌 실태 및 전망	수산업	- 어업생산량 68% 감소 (‘81) 156,160톤 → (‘17) 50,374톤	③ 어촌 활성화 관련 정부정책연계 강화
	어촌사회	- 어가인구 95.4% 감소 (‘70) 106,189명 → (‘17) 4,917명	⑤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기반구축
	지역소멸 지수분석	- 지역소멸 고위험지역 2배 급증 (‘15) 25개소 → (‘41) 52개소	② 어촌공동체 구조개편 및 역량강화
국내외 사례	해외 어촌개발 정책동향	- 유럽 공동체 주도형 지역개발 (Community-Led Local Devel.)	① 어촌 신활력 민·관 거버넌스
		- 일본 지방창생전략 (소거점화, Compact City)	④ 특성별 맞춤형 어촌 활성화
	국내 어촌동향	- 생활형 SOC 확대(어촌뉴딜 300) - 포용성장 및 어촌 삶의 질 향상 - 어촌경제 활성화(소득 및 일자리)	③ 어촌 활성화 관련 정부정책연계 강화
	국내외 사례분석	- 빈집활용(가고시마현 이센정) - 소득/일자리 창출(리버마켓) - 기본소득 마련(철원 에너지 마을) - 삶의 질 제고(유럽 스마트 어촌)	② 어촌공동체 구조개편 및 역량강화 ④ 특성별 맞춤형 어촌 활성화 ⑤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기반구축
인식 조사 및 어촌 유형화	어촌 인식도 조사	- (인식) 인구감소 심각(77.0%) - (원인) 경제적 요인(73.0%)	⑤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기반구축
		- 어촌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어촌계 중심 사업 강화(52.7%) - 귀어·귀촌정책 확대(45.9%) - 해양레저 일자리 확대(43.2%) - 6차산업화 지원(41.9%)	③ 어촌 활성화 관련 정부정책 연계 강화
	어촌 유형화	- 수산중심형 : 소멸위험 ↓ + 수산 규모 ↑, 속초/고성 - 해양레저형 : 소멸위험 ↓ + 수산 규모 ↓, 양양/강릉 - 어촌쇠퇴형 : 소멸위험 ↑ + 수산 규모 ↓, 삼척/일부지역	④ 특성별 맞춤형 어촌 활성화

자료: 저자 작성

(2) 대응전략 체계

본 연구에서는 강원 어촌의 수산업 쇠퇴와 어촌사회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5대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강원지역 어촌의 신활력을 이끌 수 있는 동력원으로 행정과 민간영역 간 협업체계 등 상향식(Bottom-Up)과 현장밀착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해면중심의 어촌정책에서 벗어나 내륙어촌(내수면 어업지역)으로 이어지는 강원형 어업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내수면과 해면 어촌의 상생과 협력·연대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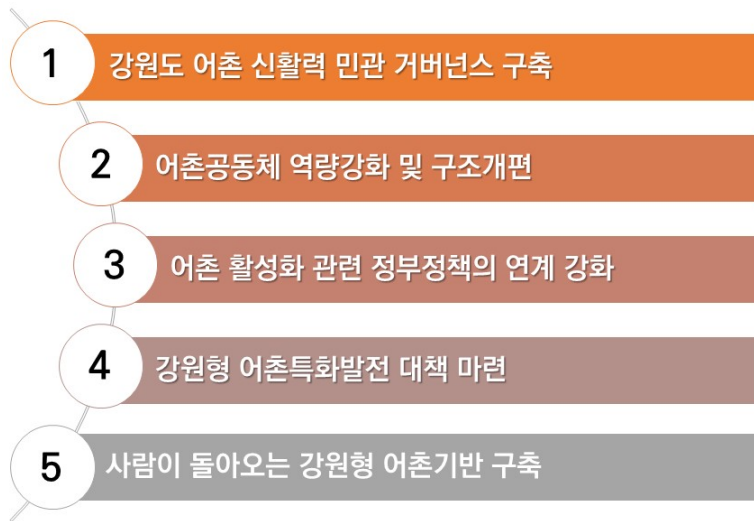
둘째, 강원지역 관내 어촌공동체는 높은 진입장벽과 내·외부의 갈등으로 인해 주변여건 변화와 기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어촌공동체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연대와 협력,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역량강화와 지역소멸 고위험에 대한 전망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촌계 간에 과감한 통합을 유도하고, 청년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통해 미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강원 어촌 신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강원도 환동해본부 주도로 정부의 수산업·어촌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범부처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지원정책과 해양수산부 어촌정책에 선도적인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사업유치 방안을 통해 지역여건과 니즈에 맞는 지원사업이 적기(適期), 적소(適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강원형 어촌특화발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남북 항구적인 평화구축과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강원 지역의 지역적 특수성 반영이 필요하다. 특히, 해면의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강마을 조성을 통한 남북 상생의 지역모델 마련 등 정부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특화사업 발굴과 추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강원지역 어촌사회는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다.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사회혁신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터전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이 진압장벽이 없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강원지역의 어촌은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정부정책과 지원방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강원형의 대책과 실행력을 기반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그림 5-1〉 강원 어촌 신활력을 위한 5대 대응전략



자료: 저자 작성

2) 전략별 추진방향

(1) 강원 어촌 신활력 민관 거버넌스 구축

강원 어촌 신활력의 제고는 어업공동체가 주도하고, 지자체에서 이끌어 줄 수 있는 민관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내수면과 해면의 어업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강원형 어촌

지원단을 구성하여 전문화된 중간지원조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현안문제 발굴과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강원도의 어촌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역소멸 대응, 수산업의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2) 어촌공동체 역량강화 및 구조개편

어촌공동체는 어촌사회를 이루는 근간으로 지역 수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주변의 여건 변화와 초저출산·고령화 등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지 못해 어촌사회는 이완·해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원지역의 어촌공동체는 마을어장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어촌계가 분할되거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어장소멸 등 다양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강원 어촌공동체는 내발적인 변화에 나서야 한다. 어촌계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가입조건과 정관 등 운영 규약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어촌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변 어촌계와의 통합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어촌 활성화 관련 정부정책의 연계 강화

최근 해양수산부는 쇠락하는 어촌의 지역재생(어촌뉴딜 300사업, 내수면산업 육성 및 강마을 활성화 등)과 포용성장 등을 표방하는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강원 어촌지역이 직면한 지역소멸,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 등 정부정책과 연계성을 높여 필요한 정책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어촌뉴딜 300사업은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책으로 강원 어촌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4) 강원형 어촌특화발전 대책 마련

강원 어촌은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특화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남북 접경지역을 둘러싼 항구적인 평화정착 구축과 경제 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내수면과 해면의 어촌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특히, 북한강과 한탄강 등 남북을 잇는 수계를 중심으로 남북한 상생의 지역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내수면산업 육성을 통해 통일 이후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 지역개발모델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동해안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비한 어업생산기지를 접경지역 일원에 조성하고, 동해안 수산업과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선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한편, 강원 어촌마을은 수산업 중심의 경제활동에서 해양레저기반 어촌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일부는 어장소멸과 지역소멸 등 쇠락의 기로에 서 있는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강원지역의 어촌마을은 유형별 특성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특화된 발전모델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5) 사람이 돌아오는 강원형 어촌기반 구축

강원 어촌지역은 지역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현재의 귀어귀촌 지원정책과 수산업의 여건으로 볼 때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어촌사회의 높은 진입장벽과 낮은 삶의 질 여건은 도시민의 이주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청년이 정착하는 데 진입규제가 없는 프리존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어촌마을 조성이 필요하다.

제2절 전략별 추진과제

1. 전략별 과제 도출

강원 어촌 신활력의 제고는 5대 대응전략의 실행방안으로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강원도 어촌 신활력 민관 거버넌스 구축은 어업지역 네트워크 구축, 신활력 지원단 등 3개 과제, 어촌공동체 역량강화 및 구조개편 2개 과제, 정부정책의 연계강화 4개 과제, 강원형 어촌특화발전 대책 3개 과제, 사람이 돌아오는 강원형 어촌기반 2개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표 5-2>와 같다.

<표 5-2> 강원 신활력 어촌 대응전략별 추진과제

5대 대응전략	15개 추진과제
1. 강원도 어촌 신활력 민관 거버넌스 구축	① 강원 어업지역 네트워크 구축
	② 강원도 어촌 신활력 지원단 신설 · 운영
	③ 강원지역 수산업 · 어촌 컨설턴트 양성
2. 어촌공동체 역량강화 및 구조개편	① 어촌계 체질개선 강화 및 역량강화 확대
	② 지역소멸 고위험 어촌지역 통합
3. 어촌 활성화 관련 정부정책의 연계 강화	① 강원형 생활 SOC 확대 및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② 귀어귀촌 정책
	③ 어촌산업 육성을 통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
	④ 어촌 · 어업인 삶의 질 향상
	⑤ 어촌관광 활성화
4. 강원형 어촌특화발전 대책 마련	① 남북 평화 강마을 조성 추진
	② 수산분야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특화어항 개발
	③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
5. 사람이 돌아오는 강원형 어촌기반 구축	① (가칭) ‘청년 귀어인 특별구역제도’ 추진
	② 어업지역 네트워크 기반 복지거점센터 도입

자료: 저자 작성

2. 어촌 신활력 추진과제

1) 강원도 어촌 신활력 민관 거버넌스 구축

(1) 강원 어업지역 네트워크 구축

강원 어업지역 네트워크는 어촌계, 어업계 등 어촌공동체를 기반으로 내수면과 해면 어업의 동질성과 지역성에 기초하여 상호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강원도 지역발전을 이끄는 네트워크 전략이다. 강원 어업지역 네트워크는 지원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와 지역별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며, 특히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제고와 지역공동체의 주도적인 사업추진을 유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림 5-2〉 강원 어업지역 네트워크 구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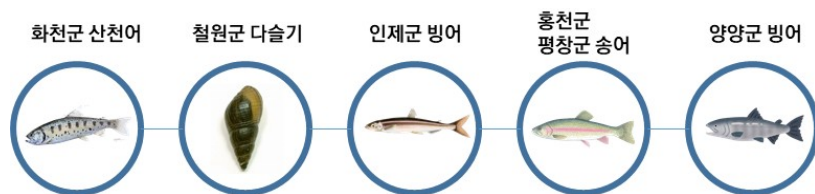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어업지역 네트워크 전략의 핵심은 사업을 하나의 어업계, 어촌계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기준으로 다수의 지역을 묶어 권역을 설정하여 지역활력을 도모하는 데 있다.

가. 내수면 어업지역 네트워크

내수면 어업지역 네트워크는 하천, 저수지·댐 등을 기반으로 어업활동을 영위하는 어업계, 양식업 경영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강원도는 북한강 수계를 중심으로 내수면 어업지역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며, 지역자원(수산, 역사·문화, 관광), 행정구역의 동질성,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토대로 사업권역 설정이 필요하다. 북한강 수계를 기반으로 하는 어업지역 네트워크는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세부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화천군은 산천어축제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철원군(다슬기축제), 인제군(빙어축제), 홍천군·평창군(송어축제), 양양군(연어축제) 등 인근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그림 5-3〉 강원 내수면 어업지역 네트워크 예시



자료: 저자 작성

나. 해면 어업지역 네트워크

강원도 해면 어업지역은 연근해어업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으며, 지역에 따라 항만(어항구), 국가어항에 거점을 형성하여 수산물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수산 거점지역의 주변에는 중소규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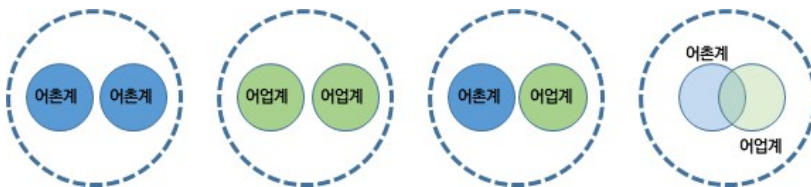
어촌·어항으로 구성되어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어촌뉴딜 300사업은 소외되었던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기존 거점지역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차별적인 콘텐츠 도입이 중요하다.

또한, 강원지역의 어업침체와 지역자원 여건으로 해양레저관광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어 수산업 중심의 어촌과 해양레저 등 다변화되고 있는 어촌 간 상호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어업지역 네트워크 기반 권역별 사업화 추진

어업지역 네트워크는 해면과 내수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화가 가능하고, 입지적 특성과 협력·연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큰 경우 어촌계, 어업계 간 권역화 방안도 가능하다. 특히, 어촌계와 어업계 간 물리적 협력·연대에서 더 나아가 하나의 지역공동체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그림 5-4〉 강원 어업지역 네트워크 기반 권역화 방안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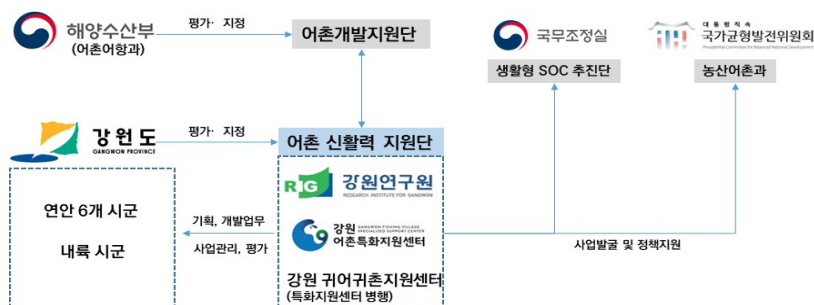
(2) 강원도 어촌 신활력 지원단 신설·운영

해양수산부는 어촌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개발·사업관리·평가할 수 있는 전담지원기구로 어촌개발지원단을 2018년부터 신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어촌개발지원단¹²⁾은 지역별 전담지원기능을 수행까지는 한계가 있고, 지역별 어촌정책의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칭) 강원도 어촌 신활력 지원단의 신설이 필요하다.

가. 강원도 어촌 신활력 지원단 신설

강원도 어촌 신활력 지원단은 강원도에서 공모를 통해 평가·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강원연구원, 강원 어촌특화지원센터, 강원 귀어귀촌지원센터(신설 시) 등으로 구성해 볼 수 있다. 강원도 어촌 신활력 지원단은 관내 연안 시군과 내륙 시군의 어촌정책의 기획, 개발업무, 사업지 관리, 성과평가 등을 지원한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어촌개발지원단과 협업체계를 통해 강원도 어촌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5-5〉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 거버넌스 체계(안)



자료: 저자 작성

12) 농특회계 100%('18년 8.4억), 공모를 통한 평가·지정 후 3년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은 도내 어촌정책 지원업무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생활형 SOC 추진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사업 발굴을 통한 정책건의와 지원업무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한다.

나. 강원도 어촌 신활력 지원단 수행업무

강원 어촌 신활력 지원단의 사업은 <표 5-3>과 같이 크게 7개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 생활형 SOC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어업지역 네트워크를 기획, 집행, 사후 성과관리까지 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업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는 강원형 모델로 특화시켜 향후 국가 전체적으로 확산시키고, 개도국의 ODA 사업화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표 5-3> 강원 신활력 지원단 사업내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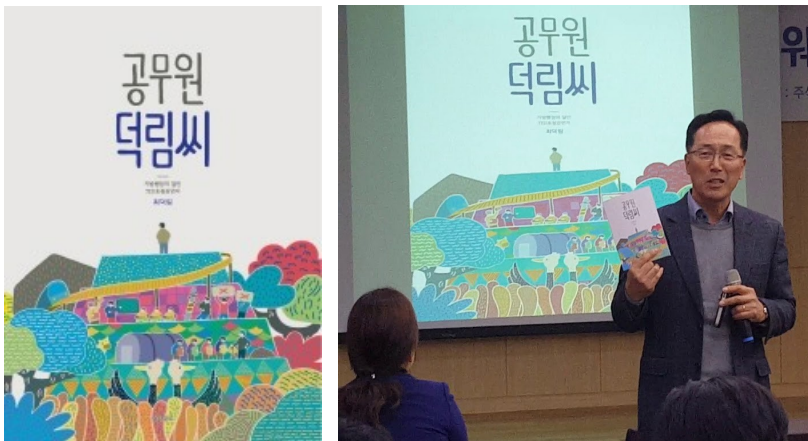
구분	사업내용
어촌공동체 역량강화	- 어촌주민 역량강화 컨설팅 (해수부 지원대상 제외)
지역전문가 풀 구축 및 관리	- 강원지역 전문가 인력 풀 구축 (건축, 공공디자인, 수산, 지역개발, 관광, 토목 등) - 전문가 컨설팅 매칭 및 성과관리
어촌뉴딜 300사업	- 어촌뉴딜 300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업무 지원 - 사업 집행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생활형 SOC 발굴 및 점검	- 강원지역 생활형 SOC 사업발굴 및 정책지원 (국무조정실 생활형 SOC 추진단)
어업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 강원형 어업지역 네트워크 구축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사전 검토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전 사업성 검토 - 현장 이행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 업무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지특회계 사업지 평가 · 관리	- 지특사업의 이행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자료: 저자 작성

(3) 강원지역 수산업 · 어촌 컨설턴트 양성

강원지역은 어업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더라도 어촌공동체의 내발적 동력으로 신활력을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건축, 공공디자인, 브랜드, 수산, 지역개발,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내 전문가도 부족한 실정이다. 관내 전문성과 어촌에 대한 열정을 갖춘 지역대학, 연구기관, 공무원(은퇴 또는 퇴직), 기업가, 관내 금융기관 등 인력 풀을 구축하고 이들의 전문성과 참여 의지를 고려한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해양분야의 은퇴공무원은 행정,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전문가로 전환하여 역할을 제고할 수 있다.

〈그림 5-6〉 지역전문가(은퇴공무원) 컨설팅 우수 사례



주: 순천만과 가정원 경험을 토대로 지역발전의 혁신에 대한 컨설턴트로 활동 (최덕림 前 순천시 국장)
 자료: 구글(검색어:공무원 덕림씨, 검색일: 2018. 1. 22.)

2) 어촌공동체 역량강화 및 구조개편

(1) 어촌계 체질개선 강화 및 역량강화 확대

가.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 및 표준화

어촌계는 어촌마을, 수산업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비법인 조직체이다. 어촌계는 자체적인 정관을 통해 어촌계원의 가입 조건, 어촌계의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촌계의 정관에는 어촌계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수협 조합원 가입(연간 60일 이상 어업 경영체 운영 또는 어업활동), 지역거주 1년 이상을 해야 하고, 가입비(납입금) 수백, 수천만 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몇 년간은 준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러한 문제로 어촌계원으로 가입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어촌계 내부에서는 납입금과 수입금을 적립하여 사업비를 지속 확보해왔고, 일부에서는 어촌계원 탈퇴 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의 사업비를 모두 소진하고 신규 가입자에게는 최소의 금액만 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정관을 각 어촌계에 제시했다. 강원도 어촌계는 여전히 비어업인 어촌계원이 많고, 어촌계원으로 가입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어촌마을, 어촌계가 소멸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어촌계 가입 문턱은 조속히 낮춰야 할 것이다.

나. 개방형 어촌계 지원 강화

충청남도는 어촌계원 가입 문턱을 낮추면서 어촌계원 수를 늘리고 어촌계 또는 어촌공동체 사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우수 사례를 선발하여 인센티브(최우수 1억 원, 우수 8천만 원, 장려 5천만 원)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할

어촌계를 선발하고, 연말에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어촌계를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이는 성공적인 사례이므로 강원도도 제도화하여 어촌계의 혁신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 강원 어촌 역량강화사업 확대 추진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예산은 총 5억 원이고 이 중 자체 인건비를 제외하면 지원사업비의 60%인 3억 원이다. 더 많은 어촌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대도 필요하다.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으로부터 도출된 성공적인 사업, 인구의 유입 등의 결과는 예산 확대를 가능하게 하여 더 많은 어촌마을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사업화를 위한 시설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는 초기시설지원, 시설 확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 마련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 강원 여성어업인 육성과 역할 강화

강원도 여성어업인은 내수면, 해수면 포함하여 1,018명이고, 최근 시·군별 여성어업인협회가 구성되고 여성어업인연합회도 구성되어 본격적인 수산업 활성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는 여성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3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성어업인 사무실 건립을 추진하고, 지역별로 자체 소득사업 추진도 계획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강원도는 여성어업인의 육성을 통해 감소하는 어업인을 보완하고 나아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등 소득사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여성어업인(대체로 어업을 하지는 않지만 어업인의 부인으로 어업협동조합 소속)들이 지역의 특산 수산물을 활용하여 식당운영, 도시락 판매, 가공품 생산 및 판매 등 6차산업화 추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강원도 여성어업인의 경우에도 지역의 수산물을 활용한 6차산업화를 통해 일자리, 소득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추진이 필요하고,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강원도의 경우, 일시 다획성 어종인 도루묵, 양미리 등이나 부가가치가 낮은 잡어를 활용한 가공품 개발, 식당운영 등으로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원과 방안은 다양하다. 단기적으로는 시·군별로 1개 이상의 6차산업화 사업 추진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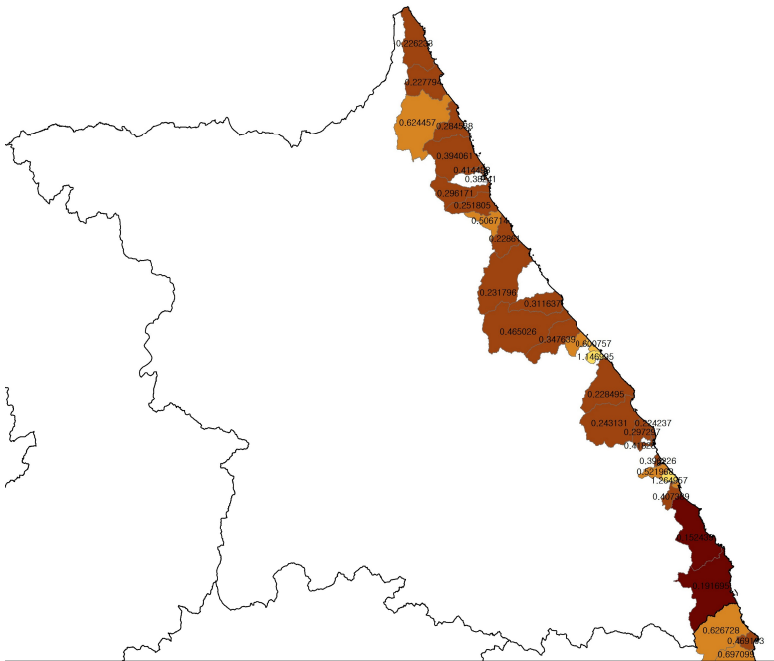
(2) 지역소멸 고위험 어촌지역 통합

강원 어촌지역의 지역소멸 위험성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역소멸지수가 0.2 미만인 고위험지역이 2017년 기준 22개소에서 2041년 51개소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삼척시는 대규모 에너지 특화단지 전략에 따라 어장소멸과 지역공동체 해체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역소멸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

강원지역 어촌사회의 미래전망은 어두운 것이 사실이다. 어촌공동체의 전략적 통합과 상생방안을 모색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특히, 지역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젊은 세대가 진입장벽 등 제약 없이 창업·창직이 가능하도록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행정 주도의 인위적인 통폐합은 불필요한 사회갈등이 유발할 수 있다. 어촌지역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소멸 고위험 어촌지의 통합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어업기반 인프라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청년 어업인의 정착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정책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다만, 향후에는 어촌지역의 전략적 통합과 청년 귀어인의 정착을 위한 터전 마련에 대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어촌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통합 대상을 선정하고, 어촌마을, 강원도, 전문가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합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림 5-7〉 강원 어촌의 지역소멸지수 현황



자료: 저자 작성

3) 어촌 활성화 관련 정부정책의 연계 강화

(1) 강원형 생활 SOC 확대 및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가. 생활 SOC 확대 추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생활형 SOC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어촌뉴딜 300사업이 생활형 SOC에 포함되면서 해양수산부, 지자체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무조정실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 추진사업의 효율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생활형 SOC 추진단을 신설하였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지자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신규수요를 발굴하고,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¹³⁾

강원형 생활 SOC 확대는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사업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지역현안 발굴과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단에 건의하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5-4>는 강원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한 것으로 수산축제 네트워크 구축(10개소), 어업지역 네트워크 기반 복지센터(4개소),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 어촌마을(6개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규사업 발굴은 강원지역에 선도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타 지역에서도 확대할 나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수산축제 네트워크 구축은 강원지역의 산천어, 빙어, 다슬기, 연어, 오징어, 도루묵 등 지역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여가·건강활동에 부합하고, 타 지역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13) 박상우 외(2018), p. 171.

〈표 5-4〉 강원 지역밀착형 생활 SOC 추진사업 확대(안)

구분		사업내용	비고
여가 건강 활동	①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 국민체육센터(60개소) -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50개소) - 전통시장 신설 현대화(450개소) 및 주차장 신규 조성(45개소)	
	②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	- 지방박물관 내 어린이 박물관(7개소) - VR/AR 체험존(19개 시설) - 수산축제 네트워크 구축(10개소)*	강원
지역 일자리 활력 제고	③ 취약지역 도시재생	- 노후주거지 도시재생 추진(168개소)	
	④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 어촌뉴딜(70개소) -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7개군)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지원(110개소)	
	⑤ 스마트 영농 확산	-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2개소)	
	⑥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 노후산단 재생(편조조성 2,500억 원) - 정부지원 스마트 공장(2,100개)	
생활 안전 환경	⑦ 복지시설 기능 보강	-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1,200개소) -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41개소) - 어업지역 네트워크 기반 복지센터(4개소)*	강원
	⑧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500억 원)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2.5만 개)	
	⑨ 미세먼지 대응 강화	- 도시바람길 숲(10개소) - 미세먼지 차단숲(50ha) - 수소 충전 인프라(30개소)	
	⑩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609개소) - 주택 태양광 지원(9.4만호) -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 어촌마을(6개소)*	강원

주: *는 강원지역에 확대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임

자료: 관계부처 합동,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 2018. 8. p. 4

나. 어촌뉴딜 300사업

어촌뉴딜 300사업은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어항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을 포함한 통합적인 개발로 사회, 문화, 경제, 환경적으로 어촌지역을 활성화 하는 해양수산부의 핵심적인 어촌 정책이다. 동 사업은 2019년부터 1단계로 7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30개소를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어촌뉴딜 사업은 타 부처 사업과 연계 및 협업과제 발굴을 통해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열악한 인프라 확충·정비의 완결성을 높여 어촌사회의 혁신을 이끄는 사업이다(〈표 5-5〉 참조).

강원의 어촌지역은 지역소멸과 수산업 침체에 따라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과의 접근성과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레저, 국민휴양에 대한 니즈도 높다. 따라서 어촌뉴딜 300사업의 4가지 유형에 따라 강원 어촌마을 74개 지역에 대해 선택과 맞춤형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행정이나 용역기관의 획일화된 사업계획 마련이 아니라 지역협의체¹⁴⁾를 중심으로 지역현안의 발굴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어촌뉴딜 300사업의 공모사업 평가에서도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어촌마을 개별 단위의 계획수립과 집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관내 시·군 단위, 강원도의 총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14) 지역협의체는 지자체 담당자, 해당지역 지역주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현장체감형 사업발굴 지원, 사업대상지 지역주민 의견수렴, 주민주도 사업추진 지원, 지속가능한 사업효과를 위한 지역공동체 지원 등의 역할을 함

〈표 5-5〉 어촌뉴딜 300사업 유형별 추진방향

구분	① 공통사업	② 특화사업	③ 타 부처 연계사업
해양레저형	- 접안시설 보강 (경사식 선착장 정비, 물양장 정비 등)	- 소규모 레저선박 계류 시설 확충 - 레저선박 보급수리 시설 설치 - 클럽하우스 설치(민자) - 해중레저 기반시설 조성 - 해중전망대 조성	- 마을지붕 · 담장 경관개선 (행안부, 농림부) - 마을안내판, 이정표 설치 (행안부, 농림부)
국민휴양형	- 안전시설 설치 (안전난간, 차막이 설치, 구조사다리, CCTV) - 어항구역 경관개선 (어구어항 보관창고, 경관조명 설치)	- 바다전망대 설치 - 어울림 정원 설치 - 어촌마당 스테이 (자부담 포함) - 갯벌생태공원 조성 - 해수풀장(민자) - 생태놀이터 조성	- 마을 생태숲 조성 (산림청) - 주차장 조성 (국토부)
수산특화형	- 어항 친수시설 설치 (어부림 조성, 정자, 파고라 등 휴식공간) - 여객 편의시설 (대합실, 화장실 등) - 어촌뉴딜 협의체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역량 강화 교육, 마을브랜드 개발)	- 바다낚시터 조성 - 위판장 개선(자부담) - 어부장터(마르쉐) - 수산물 공동 유통 · 가공센터 설치 - 수산특화거리 기반조성 - 맨손잡이 체험	- 상징조형물 설치 (문체부) - 오토캠핑장 조성 (문체부) - 마을 박물관 조성 (문체부)
재생기반형		- 어항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지원센터 - 방치시설 리모델링, 문화예술인 창작 전시공간 조성 - 청년어장 운영 - 어촌살아보기 주거지원	- 오페수 정화시설 설치 (환경부) - 노후 상수도 정비 (환경부)

자료: 해양수산부, 『19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가이드라인』, 2018, p. 6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가 일부 수정

(2) 귀어·귀촌 지원정책

가. 제1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18~2022년)

해양수산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2017년에 수립하였다. ‘기회의 바다,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의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과 16개 추진과제에 5년간 8,490억 원의 재정투자와 용자 지원이 이루어진다. 강원 어촌사회는 사람이 돌아오는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강원도는 해양수산부의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적극 반영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도시민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표 5-6〉 귀어·귀촌 지원정책의 전략 및 추진과제

추진전략	16개 추진과제
정책기반 강화 (4개 과제)	법·제도 개편
	귀어귀촌 조사·모니터링 체계 구축
	협업체 구성 및 거버넌스 정비
	홍보 및 정보제공 강화
교육체계 개편 및 내실화 (5개 과제)	정착지원 매뉴얼 개발·보급
	귀어·귀촌인 사전 체험기회 확대
	지역별·업종별 창업교육 지원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 및 상담 강화
	귀어귀촌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배치 지원
유형별 맞춤형 정착지원 강화 (4개 과제)	청년 어업인 중점 지원
	일자리 매칭을 통한 신규취업자 지원
	귀어 유형별 맞춤형 지원
	귀촌인 유입 활성화
상생 및 협력기반 강화 (3개 과제)	지역주민과 융화지원 강화
	어촌 정주여건 개선
	귀어인 개방 어촌계 지원

자료: 해양수산부, 『제1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 2017, p. 15의 내용을 저자가 일부 수정함

나. 청년 귀어 활성화 방안

해양수산부는 청년 귀어인의 어촌사회 조기 정착을 높여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수산업의 정예화된 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데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첫째, 청년어업인 창업 패키지 지원으로 35세 미만 도시청년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창업단계까지 풀패키지(창업보육, 창업자금) 방식으로 지원하고, 안정화단계 이후 연차별로 상환해 나가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동 지원정책은 혁신적 창업계획을 설계한 우수 청년 귀어인에게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정예화된 미래 수산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맞춤형 창업보육, 펀드 지원 등이 있다.

둘째,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이 있다. 어선어업 및 양식어업은 전문적인 기술습득에 3~5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동 기간에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35세 미만 도시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백만 원까지 지원하고, 영어 2년차부터 전년도 어업소득 등을 감안하고 차감하여 지급한다.

청년 귀어 활성화 지원은 강원 어촌사회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지원정책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어촌에서 창업·창직을 꿈꿀 수 있는 매력적인 지원정책과 미래 비전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야 한다. 강원지역에서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특단의 방안으로 청년 귀어인 유치방안에 대한 심층연구와 행정적인 뒷받침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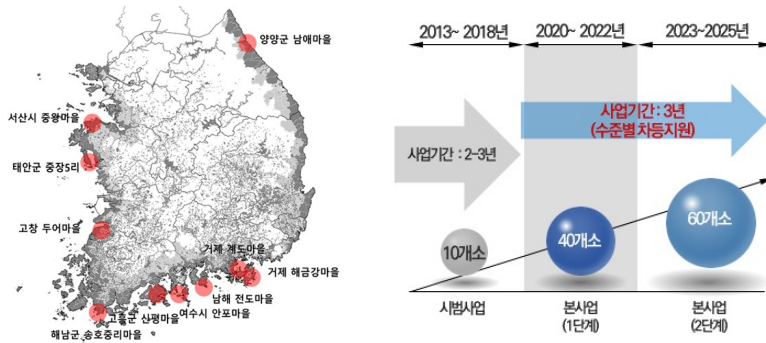
(3) 어촌산업 육성을 통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

가.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해양수산부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어촌특화

발전(6차산업화)을 2014년부터 시범사업 10개소에 대해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8년 완료에 따라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 사업 확대추진이 필요하다. 강원지역은 양양군 남애2리(바닷속 체험 마을)에 6차산업화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 정부의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이후 수산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지역 발굴과 추진계획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림 5-8〉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방안



자료: 저자 작성; 해양수산부, 『어촌 6차 산업화 추진방향 및 모델 연구』, 2015, p. 185

나.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어촌자원복합산업화는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 2차, 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시도 단위 어촌산업화를 촉진하는 지원정책으로 수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어촌 테마공원 조성, 6차산업화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자체는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기초하여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 필요한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여건에 맞게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4)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

가.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2015~2019년)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2015~2019년)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동 기본계획의 투·융자 규모는 46조 5천억 원으로 농어촌 주민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표 5-7〉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7대 영역 부문별 목표

구분	세부내용
보건·복지	농어촌 보건·복지 서비스 질 제고와 복지 체감도 증진
교육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
정주생활기반	공동체 주도의 살기 좋고, 편리한 정주기반 및 생활권 구현
경제활동·일자리	농어업·농어촌 자원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문화·여가	다양한 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
환경·경관	농어촌다움이 유지·보전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경관 조성
안전	자연재해 및 범죄·안전사고에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농어촌 조성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2014, p. 14

나.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강원도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2020~2024년)에 대비하여 어업 현장과 어촌사회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정책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강원도는 지역협의체 구축을 통해 어촌·어업인 현장수요 발굴과 이를 토대로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5-8〉 어촌어업인 삶의 질 지역협의체 구축·운영

구분	세부내용
지자체	강원도청, 관내 시군(해양수산과)
유관기관	지역·업종별 수협, 해양경찰청, 강원 어촌특화지원센터
어업인	관내 주요 어촌계 대표(최소 시군당 1개소 이상)
전문가	지역대학, 강원연구원
전문지원기관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전문지원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 저자 작성

(5) 어촌관광 활성화

가. 해양레저 활성화

강원도 양양은 해양레저의 명소이다. 특히 서핑에 좋은 바다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서퍼들이 발굴하였고, 지금은 명소가 되었다. 올해 현 남면을 방문하여 현남면장과 서핑과 어업인, 어촌마을 간의 관계를 논의한 바 있었다. 면장은 늘어나는 서퍼들과 서핑관련 상가들로 어업인, 어촌마을 주민들이 밀려나고 있고, 서로 갈등도 있다고 했다. 어업인들은 증가하는 레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어업에 피해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어업인들은 수산물을 활용한 단순 가공품이라도 제조한다면 서퍼들은 고객이 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상황이다.

어업인들은 설문조사에서 제시했듯이 해양레저의 활성화 속에서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지만 늘어나는 젊은 서퍼들을 상대로 한 서비스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촌계, 어촌마을 공동체의 역량이 문제일 수 있다. 역시 여기에도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이 필요하다. 서퍼들을 포함한 레저객,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수산물 가공 서비스에서 소득, 일자리 창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서핑을 비롯하여 요트, 수상바이크 등 점점 다양한 레저 스포츠가 몰

려울 것이다. 어촌특화지원센터,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사업 등의 전문적 컨설팅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 강원 마리나사업 추진

우리나라의 해상 마리나시설은 58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강원도는 양양 수산항, 강릉 강릉항, 속초 속초항, 삼척 덕산항의 4개소의 시설이 있다. 최근 고성 거진에 어촌마리나시설이 설치되었다. 강원도에는 현재까지 거점형 마리나항은 없는 상황이다. 마리나시설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도 어항 주변에 요트들이 군데군데 위치하고 있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요트는 대중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요트 등 레저 산업화를 위해 마리나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이다. 계류장이 없는 곳에서는 요트 레저관광객과 어업인들 간에 마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요트선박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해안의 지자체는 어항시설 등에 요트계류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어업인과의 협의를 통해 어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요트계류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거점 마리나시설이 없으므로 동해안에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시급하다. 거점시설은 유형에 따라 계류장의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해상과 육상에 수백 척의 요트를 계류할 수 있고, 배후에는 요트 등 선박제조, 선박수리 등 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유치를 통해 요트레저를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어업인이나 어촌마을은 배후지역에 식당을 비롯한 서비스업, 새로운 창업 등을 통해 소득,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서비스업은 레저객의 수요에 걸맞는 제품의 공급은 필수적이므로 어촌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업인과 어촌마을은 레저관광객을 피해 유발자로 볼 것이 아니라 고객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 내수면 어촌체험마을조성 사업 추진

어촌체험마을사업은 지금까지 해면 어촌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강원도는 댐호, 대형 하천, 저수지 등 내수면 수자원이 풍부하다. 최근에는 요트, 마리나, 낚시 등 레저가 활성화되면서 내수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도 많다. 마을 또는 어업계는 하천의 일정 구간을 정해서 체험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축제 개최, 수산자원을 활용한 각종 체험, 먹거리, 체험거리 등을 구비한다면 새로운 소득 창출도 가능하다.

춘천은 북한강 수계의 수산자원을 활용한 체험과 먹거리 명소화, 인제, 양구, 철원, 화천 등은 낚시체험, 평창, 영월, 정선 등은 송어양식이나 하천의 특산자원을 활용한 체험, 영동지역은 바다와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연어 등 각종 소하성 수산자원을 활용한 체험 등도 가능하다. 체험이 지역단위 축제, 문화상품화, 가공품 개발 등으로 연계된다면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하다. 지자체마다 특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체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강원형 어촌특화발전 대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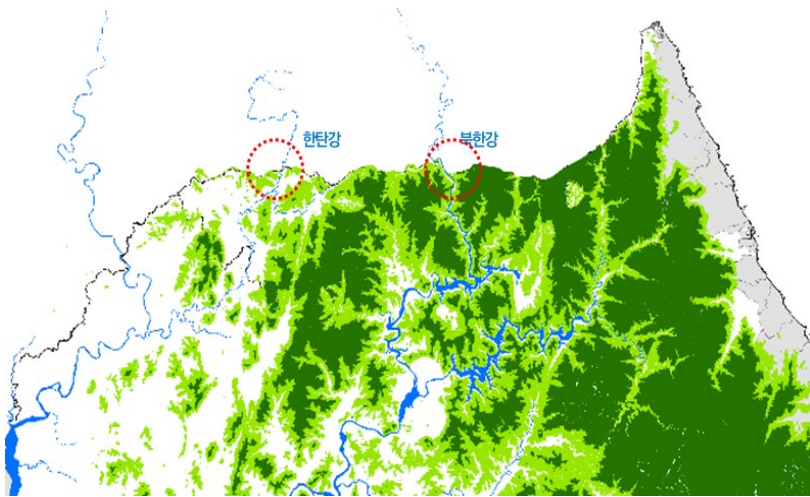
(1) 남북 평화 강원지역 강마을 조성 추진

가. 평화 강마을 조성 후보지역

강원도는 접경지역을 따라 국토의 절반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남북으로 북한강, 한탄강, 임진강이 관통하고 있으며, 지난 70년간 단절의 역사, 멈춤의 공간으로 남아 있다. 남북 경제협력의 논의와 더불어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상생을 도모하고, 향후 남북 간 공동체 주도의 협력방안을 선도하는 접경지역 내 ‘남북 평화 강마을’ 도입이 필요하다. 남북 평화 강마을은 북한강과 한탄강 일원의 접경지역으로 내수면산업을 기반으로 남북한 주민이 상생의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개념이다. 강원도는 오랜 기간 인위적인 개입이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조사와 커뮤니티 조성이 가능한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강마을 조성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림 5-9〉 남북 평화 강마을 대상지역(안)



자료: 저자 작성

나. 평화 강마을 조성 추진방안

남북한 평화 강마을은 어업생산기반 개선, 내수면 6차산업화, 남북한 주민공동체 구성, 내수면 공간계획 구축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첫째, 어업생산기반 개선은 북한강, 한탄강 등 내수면 수계의 환경 개선, 수산자원회복사업, 어항 등 계류시설 등의 확충·정비가 필요하다. 수산자원은 해당지역의 대표·전략품종을 발굴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이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내수면산업 육성은 대표·전략품종에 대한 유통·가공 등 6차 산업화, 관광활성화(생태탐방로, 어촌체험마을, 생태관 등)를 통해 국민들의 문화·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남북한 주민공동체 구축은 정치적인 성숙도를 고려해 볼 때 아직 사회·문화적으로 민감할 수 있다. 시범적인 공동체 조성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림 5-10〉 남북 평화 강마을 조성 추진방안

»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 도모
- 선도 시범사업 : 남북 평화 강마을 조성

» 내수면 어업생산기반 개선

- 환경개선, 수산자원회복, 어항(계류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정비

» 내수면 산업 육성

- 6차산업화, 관광활성화(생태탐방로, 어업체험마을, 생태관 등)

» 지역협의체 구축·운영

- 협의체(지자체, 어업계, 관련 전문가), 어업계 역량강화

» 내수면 공간계획구축

- 내수면 공유수면(하천, 저수지) : 잠·사용 관리체계 마련
- 공간계획(수산자원보호구역, 낚시구역, 어업구역, 수상레저 등)



자료: 저자 작성

(2) 강원지역 수산분야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특화어항 개발

동해안권 남북 평화어항 사업구상은 고성군 관내 또는 접경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후보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히, 남북 평화어항은 북한의 은덕어장을 포함한 평화수역과 쌍방이 설정하는 공동어로구역 내 어업인의 어로활동을 통해 명태, 오징어 등 동해안 수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요소이다. 또한 남북 평화어항은 남북한 공동의 어업전진기지 역할과 중국어선 불법어업

을 차단할 수 있는 프런티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남북 평화어항은 어선의 안전한 정박뿐만 아니라 유통 및 가공, 관광 활성화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거점형 특화어항으로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5-11〉 남북 평화수역의 특화어항 개발 개념



자료: 저자 작성; 구글(검색어:은덕어장,검색일: 2018. 10. 5.)

(3)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원 어촌의 지역소멸성과 수산업 위상에 따른 유형화 분석을 통해 수산중심형, 해양레저형, 어촌쇠퇴형 등을 도출하였다. 강원지역은 여건변화에 따라 수산업 중심의 어촌사회가 해양레저가 더 크게 나타나거나 어업침체와 지역소멸 등 급속하게 쇠퇴하는 지역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어촌의 유형별 구분과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산중심형은 어업여건이 비교적 견고한 고성 일원이 해당되며, 어촌 6차산업화, 어촌뉴딜 300사업(수산특화형), 특화어항개발 등 수산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해양레저형은 해수욕장, 스킨스쿠버 등 양양군, 강릉시를 중심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어촌뉴딜 300사업(해양레저형, 국민휴양형), 어촌 마리나역, 어촌관광 활성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어촌쇠퇴형은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삼척시 일원으로 어촌뉴딜 300사업(재생기반형), 인구유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표 5-9〉 유형별 맞춤형 지원

유형 구분	지원사업
수산중심형	• 어촌 6차산업화 지원 사업 • 어촌자원복합산업화 • 어촌뉴딜 300사업 • 특화어항개발(다기능어항, 청정어항 등)
해양레저형	• 어촌뉴딜 300사업 • 어촌 마리나역
어촌쇠퇴형	• 어촌뉴딜 300사업 • 귀어귀촌 지원 정책 • 청년 귀어인 특별구역제도 도입 • 지역밀착형 생활 SOC

자료: 저자 작성

5) 사람이 돌아오는 강원형 어촌기반 구축

(1) 강원 ‘청년 귀어인 특별구역제도’ 추진

청년 귀어인 특별구역제도는 어촌에 연고가 없는 도시민이 진입장벽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청년 귀어인 특별구역제도는 지역소멸 위험성이 높은 어촌지역 또는 어업권 소멸지역 등을 대상으로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어촌사회에 정착시켜야 한다. 특히, 예비 청년 귀어인이 어촌사회 진입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영어자금, 기술습득, 수산 및 어촌정보, 사전·사후 맞춤형 컨설팅, 생활안정자금(영어정착자금)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강원도는 지역소멸 고위험지역과 어장소멸지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강원도가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그림 5-12〉 강원 청년 귀어인 특별구역제도 도입방향



자료: 저자 작성

(2) 어업지역 네트워크 기반 강원형 복지거점센터 도입

가. 어촌 복지거점센터 설립

강원도 관내 어업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어촌 생활서비스 거점센터

는 어촌사회에서 니즈가 높은 생활서비스를 연안항·무역항(어항구) 또는 국가어항에 거점화하고, 거점센터 주변의 어촌마을 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지역 간 연계성을 높여 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어촌 생활서비스 거점센터는 마트, 수산시장(횃집센터 및 식당 포함), 금융서비스, 사무실, 어업인 교육센터(외국인어선원 포함), 다목적 문화·공연장, 사우나실, 이·미용실, 주거서비스(보일러, 전기수리, 주거환경 정비) 등 어촌사회에서 니즈가 높은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어촌 생활서비스는 거점센터의 서비스 커버리지는 해당 수협의 관할범위로 설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수요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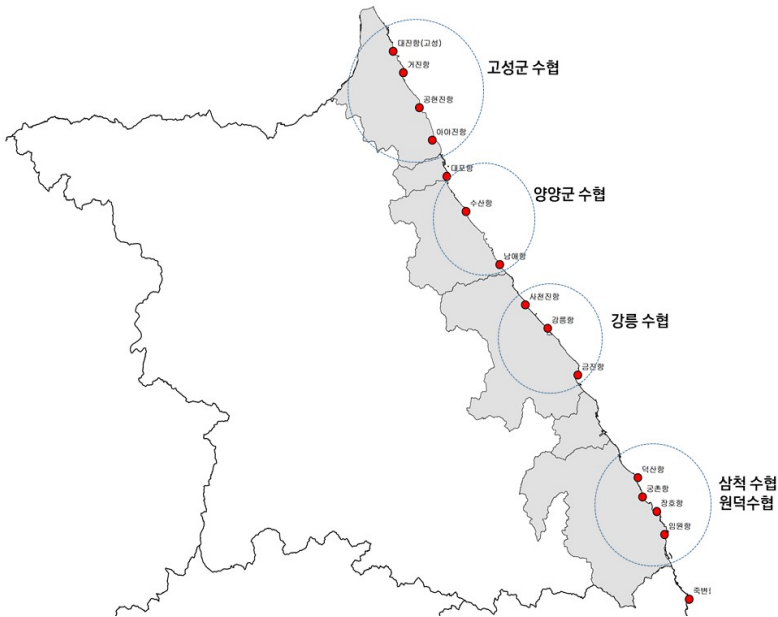
강원도는 관내 어업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어촌 생활서비스 거점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상하고, 사업주체와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과 예산을 확보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나. 어촌 복지거점센터 운영·관리 방안

강원 어촌 생활서비스 거점센터는 지구별 수협이 운영관리 주체로 나서 어업지역 네트워크 기반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복지수익을 통해 어업인과 어촌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강원 어촌 생활서비스 거점센터 운영·관리는 지구별 수협이 사업주체로 역할을 하고, 해당지역의 어촌계와 어촌주민의 생활서비스 니즈와 편의를 제공토록 한다. 특히, 어업활동 시 필요한 식품 등을 공급할 수 있는 마트와 금융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어업인과 어촌주민의 복지로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그림 5-13〉 강원 어촌 복지거점센터 운영·관리(안)



자료: 저자 작성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본 연구는 2년에 걸쳐 쇠퇴하는 강원 어촌마을의 신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후보지역을 선정하여 실증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강원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연구로 수행하였다.

강원 어촌마을은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2041년 인구추계전망과 지역소멸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어촌정책은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 인식보다는 관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어촌마을의 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 귀어·귀촌인 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강원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금회 수행된 1차년도 연구에서는 강원 어촌마을의 지역쇠퇴에 대한 진단과 대응전략별 맞춤형 신활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강원지역 여건에 맞는 어촌 신활력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3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강원 어업지역 네트워크는 내수면과 해면을 잇는 방안으로 어촌지역의 협력과 연대, 사업 간 연계성 제고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등 선도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어업지역 네트워크는 강원지역의 시범사업을 통해 어촌정책,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전략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강원지역은 어촌계 분할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역소멸 고험위험이 나타나는 어촌마을은 전략적 통합을 통해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강원도는 진입장벽이 높은 어촌사회의 규제와 제약이 없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셋째,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 지자체, 어촌주민은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낙후되고 소외된 어촌마을의 신활력 제고에 거는 기대가 높다. 사업단위의 구상에서 벗어나 강원도 내수면과 해면의 어촌 전체에 대한 계획수립을 통해 목표와 전략에 따른 사업공모가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강원형 어촌특화발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원도가 갖고 있는 남북 접경지역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남북 경제협력과 국토균형 발전에 대한 니즈를 어촌·어항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남북 평화 강마을, 평화수역 내 특화어항 개발 등은 국가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하여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 귀어인 특별구역제도’를 제안하여 강원도가 규제 프리존의 어촌사회를 만들고, 미래 수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청년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금회 수행된 대응전략과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쇠락하는 어촌을 변화시키는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정책제언

1. 강원지역 어항분야 남북 경제협력 시범사업 추진

어항분야 남북 경제협력 시범사업은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2018. 9. 19.)」를 토대로 제안하고자 한다. 동 합의는 남북 쌍방이 시범적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고,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은 항구적인 평화구축의 일환으로 서해안과 동해안에 시범적인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는 등 정치적·군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어항분야 남북 경제협력 시범사업 추진은 동해안의 중국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공동의 어업생산기반 인프라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명태살리기 프로젝트’, 오징어 채낚기 등 동해안 수산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과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동해안권 남북 평화어항 사업구상

어항분야 남북 경제협력 시범사업은 대내외적인 정치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정책 결정과 실행방안 추진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이후 남북, 북미 간 평화기반 구축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남북한 평화수역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속에서 남북 평화어항 조성에 대한 선제적인 사업구상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동해안권 남북 평화어항 사업구상은 고성군 관내 또는 접경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후보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히, 남북 평화어항은 북한의 은덕어장을 포함한 평화수역과 쌍방이 설정하는 공동어로구역 내 어업인의 어로활동을 통해 명태, 오징어 등 동해안 수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요소이다. 또한 남북 평화어항은 남북한 공동의 어업전진기지 역할과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차단할 수 있는 프런티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남북 평화어항은 어선의 안전한 정박뿐만 아니라 유통 및 가공, 관광 활성화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거점형 특화어항으로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6-1〉 동해안권 남북 평화어항 후보지역 및 북한 어장 위치



자료: 저자 작성, 구글(검색어:은덕어장,검색일: 2018. 10. 5.)

2) 강원지역 수산분야 남북 경제협력 선도사업 추진

남북 경제협력은 에너지, 산림, 농업, 해양·수산분야에서 폭 넓게 논의되고 있다. 해양·수산분야는 해역의 무력충돌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남북한 공동번영의 상징성, 특히 중국, 일본 등 해양세력을 둘러싼 동북아 해역의 입지적인 특성상 그 의미가 더 크다. 동해안권 남북 평화어항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수산분야 남북 경제협력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 평화어항 조성을 위한 사업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남북 평화어항 조성의 구체화를 위해 실시설계와 평화어항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환경성검토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

셋째, 평화어항 건설과 남북한 공동의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지침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남북 평화어항의 계획, 설계, 집행 등 쌍방의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 운영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등을 망라한 남북 평화어항 백서 등을 통해 수산분야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강원 접경지역 내 ‘남북 평화 강마을’ 도입 추진

강원도는 접경지역을 따라 국토의 절반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남북으로 북한강, 한탄강, 임진강이 관통하고 있으며, 지난 70년간 단절의 역사, 멈춤의 공간으로 남아 있다. 강마을은 강·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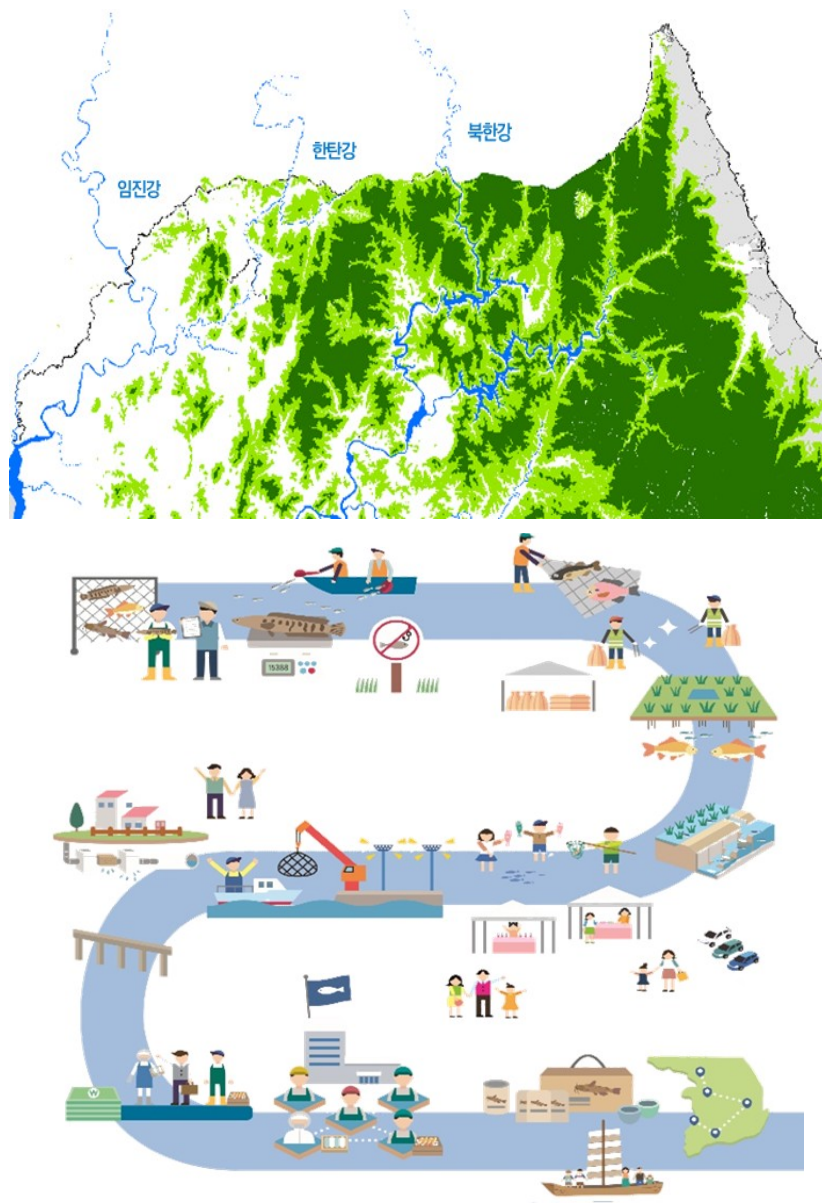
및 저수지·댐 등 내수면에서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어업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어업활동의 지속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촌락을 의미한다.¹⁵⁾ 남북 경제협력의 논의와 더불어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상생을 도모하고, 향후 남북 간 공동체 주도의 협력방안을 선도하는 접경지역 내 ‘남북 평화 강마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아이디어는 강원도 접경지역 내 내륙지역의 어촌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으로 내수면 어업지역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며, 평화 강마을은 내수면산업을 기반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상호 간 신뢰와 연대·협력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범적인 마을이다.

접경지역 내 ‘평화 강마을’은 남북한 지역상생 모델로써 선도적인 시범사업으로 해양수산부, 통일부, 강원도가 주도하는 협업체계를 통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평화 강마을이 남북이 상생하는 지역활성화 모델로 제시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상징적인 지역개발사업이 될 수 있다.

남북 평화 강마을은 내수면의 어업생산기반 개선(환경개선, 수산자원회복, 어항 등 기반시설), 내수면 산업육성(6차산업화, 관광활성화), 지역협의체 구축·운영(지자체, 남북 어업인 등), 내수면 공간계획(수산자원보호구역, 낚시구역, 어업구역, 수상레저활동구역 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15) 박상우 외(2017), pp. 22~23.

〈그림 6-2〉 평화 강마을 도입 후보지역 및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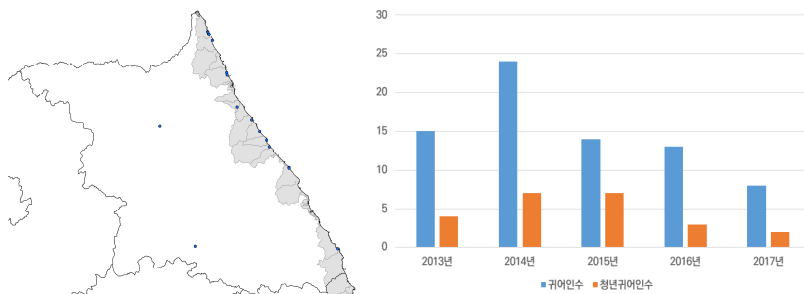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 강원 ‘청년 귀어인 특별구역제도’ 도입

강원도는 어선어업이 우세한 지역으로 도시민이 직접 신규어선(허가어업)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강원도 어촌 사회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지난 2013년 이후 귀어·귀촌인은 매년 10명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40세 미만의 청년 귀어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3명으로 연간 2~4명 정도가 정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 어촌사회의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귀어인 수도 2014년 24명을 정점으로 2015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청년 귀어인 유치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6-3〉 강원 청년 귀어인 현황



자료: 저자 작성; 국가통계포털(검색일: 2018.10.5.)

본 연구에서는 강원지역에 청년 귀어인 특별구역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청년 귀어인 특별구역제도는 어촌에 연고가 없는 도시민이 진입장벽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청년 귀어인 특별구역제도는 지역소멸 위험성이 높은 어촌지역 또는 어업권 소멸

지역 등을 대상으로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어촌사회에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특히, 예비 청년 귀어인이 어촌사회 진입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영어자금, 기술습득, 수산 및 어촌정보, 사전·사후 맞춤형 컨설팅, 생활안정자금(영어정착자금)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강원도는 지역 소멸 고위험지역과 어장소멸지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강원도가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그림 6-4〉 강원 청년 귀어인 특별구역제도 도입방향



자료: 저자 작성

4. 강원 지역특성을 반영한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해양수산부는 소외되었던 낙후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SOC를 지원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2019년에는 70개소를 1단계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소규모 항·포구 등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여 국민 휴양공간 제공,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수산업 부가가치 창출, 지역재생기반 등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현안 발굴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강원도는 2019년 1단계 사업에 총 3개소를 공모하여 고성군 반암항(어촌정주어항), 동해시 어달항(어촌정주어항) 2개소가 선정되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향후 230개소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어촌 활성화의 밑그림을 토대로 강원형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그 세부 추진전략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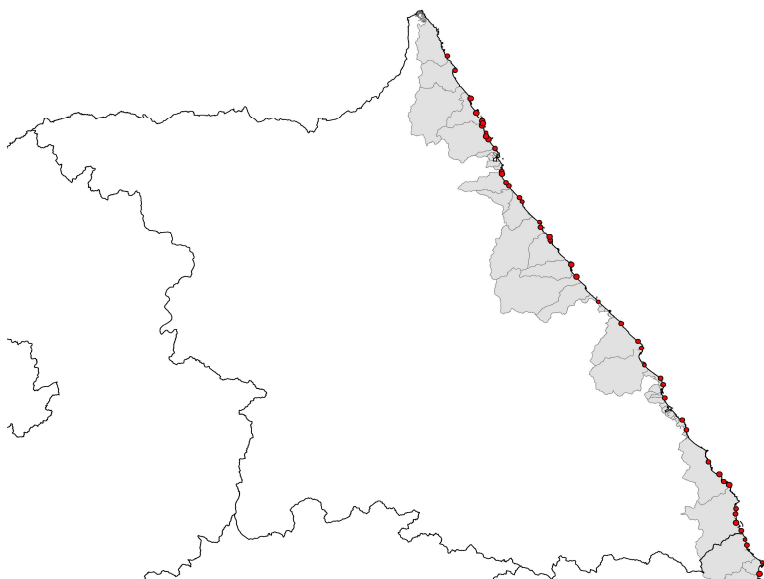
첫째, 강원도청(환동해본부)은 강원형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한 사업구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사업구상은 6개 연안 시·군의 해면과 내수면 어업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어업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강원도 수산업과 어촌의 활성화 방안을 구성해야 한다.

둘째,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도와 지역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지역협의체는 강원도 환동해본부를 중심으로 어업공동체(지역주민), 지역전문가, 중간지원조직(강원 어촌특화지원센터) 등으로 구성하여 현장밀착과 지속가능한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강원형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업인과 지역주민의 현안발굴을 토대로 과제가 발굴되고, 이를 토대로 인프라 시설과 운영·관리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는 어촌뉴딜 300사업의 추진에 앞서 어촌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회혁신 과제가 무엇인지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원형 어촌뉴딜 300사업은 생활 SOC 확충·정비도 중요하지만 어촌뉴딜을 통한 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성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강원지역의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과측정은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림 6-5〉 강원형 어촌뉴딜 300사업 가능지역



주: 강원 연안 시·군의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 항포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저자 작성

5. 어업지역 네트워크 기반 강원형 어촌 생활서비스 거점센터 설립 · 운영

어촌사회의 쇠퇴는 경제활동 위축과 낮은 삶의 질 여건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삶의 질 여건은 정주생활환경, 교육, 의료·복지, 문화여가,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 넓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어업지역의 특성상 경제활동의 시기(계절, 시간)와 장소가 농업활동지역이나 도시와는 다르기 때문에 어업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서비스 전달체계가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업지역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어촌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강원 어촌 생활서비스 거점센터 설립

강원도 관내 어업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어촌 생활서비스 거점센터는 어촌사회에서 니즈가 높은 생활서비스를 연안항·무역항(어항구) 또는 국가어항에 거점화하고, 거점센터 주변의 어촌마을 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지역 간 연계성을 높여 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어촌 생활서비스 거점센터는 마트, 수산시장(횃집센터 및 식당 포함), 금융서비스, 사무실, 어업인 교육센터(외국인어선원 포함), 다목적 문화·공연장, 사우나실, 이·미용실, 주거서비스(보일러, 전기수리, 주거환경 정비) 등 어촌사회에서 니즈가 높은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어촌 생활서비스는 거점센터의 서비스 커버리지는 해당 수협의 관할범위로 설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수요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강원도는 관내 어업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어촌 생활서비스 거점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상하고, 사업주체와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과 예산을 확보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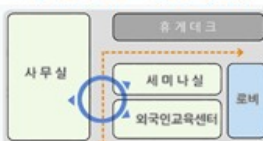
〈그림 6-6〉 어촌 생활서비스 거점센터 예시(제주 한림수협)



1F(마트, 수산시장, 금융)



2F(사무실, 교육센터 등)



4F(어업인 사우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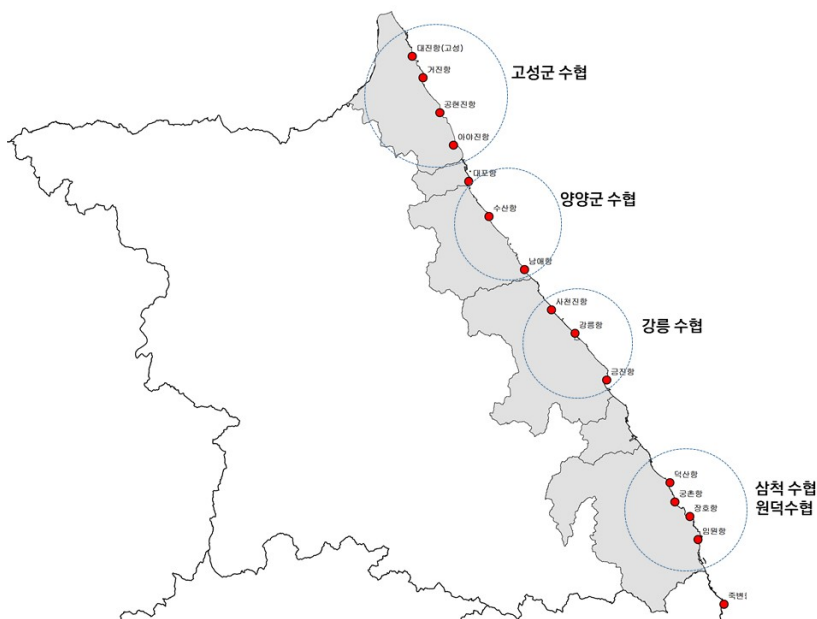
주: 한림수협 다목적 어업인복지센터(18개 어촌계, 2,500명)

자료: 제주시 한림수협 내부자료(현장 세미나 발표자료, 2018. 12. 26.)

2) 강원형 어촌 생활서비스 거점센터 운영·관리 방안

강원 어촌 생활서비스 거점센터는 지구별 수협이 운영관리 주체로 나서 어업지역 네트워크 기반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복지수익을 통해 어업인과 어촌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강원 어촌 생활서비스 거점센터 운영·관리는 지구별 수협이 사업주체로 역할을 하고, 해당지역의 어촌계와 어촌주민의 생활서비스 니즈와 편의를 제공토록 한다. 특히, 어업활동 시 필요한 식품 등을 공급할 수 있는 마트와 금융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어업인과 어촌주민의 복지로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그림 6-7〉 강원 어촌 생활서비스 거점센터 운영·관리(안)



자료: 저자 작성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통계』, 각 연도 (2012~2017).
- 관계부처 합동,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 2018. 8.
- 경제활력대책회의, 『어촌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어촌뉴딜 300」 후속조치 추진방안』, 2018.
- 김광익, 『인구감소기 읍면중심의 농촌지역 정주체계 특성분석 및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2014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2014.
- 박상우·류정곤·이상철·이호람·이상규, 『강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한국 해양수산물개발원, 2017.
- 박상우·이상규·윤영준·최만석·정병곤, 『어촌의 정주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2018.
- 박상헌·노승만·강종원·황규선·조명호·권오영·최원실, 『강원도 인구구조 분석과 지역소멸 대응 방안』, 강원연구원, 2017
- 박진경·김상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 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 수협중앙회, 『어촌분류평정 및 현황』, 각 연도(2015~2016).
- 안완배, 『문호리 리버마켓 사업계획 및 성과』, 2018.
- 이상림·조영태, 『H-P기법을 이용한 기초자치단체의 장래인구추계』, 한국인구한 28(1), p149-172
- 이지연, 「센서스 커버리지 측정을 위한 기대인구 추정기법」, 『통계연구』, 제10권 제2호, 2005.
- (주)레즐리, 『스마트 그린빌리지 문해5리 사업계획서』, 2018.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각 연도(1970~2017).

- 한림수협, 『어업인 복지센터 추진계획』, 2018.
- 해양수산부, 『어촌 6차 산업화 추진방향 및 모델 연구』, 2015.
- _____, 『제1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 2017.
- _____, 『19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가이드라인』, 2018.

〈국외 문헌〉

- Hamilton, Horace C. and Josef Perry, “A Short Method for Projection Population by Age from One Decennial Census to Another.”, *Social Forces*, 41(2), 1962.
- Smith, Stanley K., Jeff Tayman, and David A. Swanson, *State and Local Population Projections: Methodology and Analysis*,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2001.
- Smith, Stanley K. Jeff Tayman, 『An evaluation of population projections by age』, *Demography*, 40(4) p741-757, 2003

〈인터넷 자료〉

- 구글 이미지 검색,

속초양양인터넷뉴스, http://www.syi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36&idx=43265(검색일: 2019. 1.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검색일: 2019.1.25.)

통계청, 귀어인 통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검색일: 2018.10.5.)

해양수산부, 「어촌 6차산업화 인포그래픽」, <http://www.mof.go.kr/upload/article/17/201611221588a8bae1f64.png>(검색일: 2018. 10. 15.)

해양수산부,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http://www.mof.go.kr/jfile/readDownloadFile.do?fileId=MOF_ARTICLE_14523&fileSeq=1 (검색일: 2018. 10. 15.)

MT해양, <http://marine.mt.co.kr/articleView.html?sec=totalNews&no=2018101911450692997>(검색일: 2019. 1. 22.)

NPO法人尾道 空き家再生プロジェクト, <http://sarukomo.blog.fc2.com/blog-category-4.html> (검색일: 2018. 1. 15.)

속초양양인터넷뉴스, http://www.syi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36&idx=43265(검색일: 2018. 1. 22.)

머니투데이, <http://marine.mt.co.kr/articleView.html?sec=totalNews&no=2018101911450692997>(검색일: 2018. 1. 22.)

구글, https://www.google.com/search?biw=1246&bih=785&tbm=isch&sa=1&ei=aT1JXJ6EAo3m8wWUkZPYCg&q=%EA%B3%B5%EB%AC%B4%EC%9B%90+%EB%8D%95%EB%A6%BC%EC%94%A8&oq=%EA%B3%B5%EB%AC%B4%EC%9B%90+%EB%8D%95%EB%A6%BC%EC%94%A8&gs_l=img.3...5277838.5280285...0.0...0.138.1735.14j4.....0....1..gws-wiz-img....0j0i24.zogMPU5-JPg#imgsrc=y3b0qh-x5sjHpM:&spf=1548309002648(검색어:공무원 덕림씨, 검색일: 2018. 1. 22.)

구글, https://www.google.com/search?biw=1920&bih=940&tbm=isch&sa=1&ei=0e5GXPGvO8_t-QaV4LvYCg&q=%EC%9D%80%EB%8D%95%EC%96%B4%EC%9E%A5&oq=%EC%9D%80%EB%8D%95%EC%96%B4%EC%9E%A

5&gs_l=img.3807216.808767..808910...0.0..0.95.931.11.....0....1..gws-wiz-img,.....0j0i24j0i 5i30.GsnHQ4VAEdU#imgrc=0GZT1xiyUeDL4M:&spf=1548153340756(검색어:은덕어장, 검색일: 2018. 10. 5.)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검색일:2018.10.5)

부록

〈설문지〉

강원도 어촌마을 신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주민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강원 어촌마을의 신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주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강원지역 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연구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원의 아름다운 어촌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 설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8년 12월

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상우 부연구위원(051-797-4562) 황재희 전문연구원(051-797-4728)
조사기관	세종리서치(춘천) 조사총괄담당 성명 및 연락처 기재

SQ1. 귀하는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시/군 ()읍/면/동 ()리 ()어촌계

SQ2. 귀하는 현재 거주지역에 얼마나 오랜 기간 거주하셨습니까? ()년

SQ3. 귀하는 어촌이 아닌 지역(도시·농촌)에 3년 이상 거주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SQ4. 귀하는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어업(☞SQ5 진행) ② 수산물 가공·판매업 ③ 수산물 유통업
④ 요식업(식당) ⑤ 관광업 ⑥ 기타()

SQ5. 귀하는 어떻게 어업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어선어업 ② 양식어업 ③ 맨손·나잠어업 ④ 기 타()

SQ6.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성 ② 남성

SQ7. 귀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나이)

- ① 19~29세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PART A. 어촌마을 쇠퇴에 대한 주민인식

A1. 현재 거주하시는 마을이 침체 또는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A3)

A2. 현재 거주하시는 마을이 쇠퇴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급격한 주민 수 감소 ② 급속한 고령화 진전
③ 경제활동 기반 약화·붕괴 ④ 생활기반시설·공공서비스 부실
⑤ 기 타 ()

A3. 현재 거주하시는 마을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② 심각한 문제이다 ③ 보통이다
④ 문제없다 ⑤ 전혀 문제없다

A4. 현재 거주하시는 마을의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소득감소 및 경제활동 기회 축소 ② 주거기반 열악(주택, 수도 등)
③ 자녀교육 인프라 부족 ④ 생활서비스 취약(의료, 복지, 소매점 등)
⑤ 근린 환경오염 심화 ⑥ 기타 ()

A5. 현재 거주하시는 마을이 향후 소멸*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촌마을의 특징이 사라진 지역이 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되는 등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PART B. 어촌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민인식

B1. 현재 거주하시는 마을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 ⇒ () ⇒ () ⇒ () ⇒ () ⇒ ()

- | | |
|-------------------------|------------------------|
| ①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 ② 청장년층 도시인구 유입 |
| ③ 수산업 기반정비(인프라, 자원회복 등) | ④ 경제활동 다각화(가공·관광 등) |
| ⑤ 새로운 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 ⑥ 공공서비스 강화(교육·의료·문화 등) |

B1-1. 마을활성화를 위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B2. 현재 거주하시는 마을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어촌계 운영방식 개선 | ② 어촌계 중심 마을사업(발전기금) 추진 |
| ③ 정부 및 전문기관 교육·훈련 진행 | ④ 국내외 선진사례 시찰·조사 기회 확대 |
| ⑤ 현장밀착형 전문가 컨설팅 강화 | ⑥ 기타() |

B3. 현재 거주하시는 마을로 청장년층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경제활동 기회 창출 | ② 주거생활기반 개선 |
| ③ 귀어·귀촌 정책지원 확대 | ④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거주기간, 가입비 등) |
| ⑤ 교육인프라 개선 | ⑥ 가족친화형 마을조성 사업 추진 |
| ⑦ 기타() | |

B4. 현재 거주하시는 마을의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가장 효
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전략품종 선정 및 브랜드화 | ② 수산물 가공시설 증축·확대 |
| ③ 위판체계 정비 및 판로 확대 | |
| ④ 수산자원 관리체계 정비(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등) | |
| ⑤ 6차산업화 지원사업 확대 추진(수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관광 연계) | |

- ⑥ 여작업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추진
 ⑦ 기타()

B5. 현재 거주하시는 마을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역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사업 발굴
 ② 대국민 선호도가 높은 관광사업 발굴
 ③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소규모 관광사업 운영
 ④ 중앙·지방정부 주도의 대규모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해양레포츠단지, 마리나 등)
 ⑤ 기타()

B6. 현재 거주하시는 마을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산업 기반의 일자리 다각화 ② 해양레저 관광분야 일자리 확대
 ③ 신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 ④ 고령층·여성 친화형 일자리 발굴
 ⑤ 맞춤형 일자리 제공 서비스(숨은 일자리 찾기 등)
 ⑥ 기타()

PART C. 어촌마을의 특화 분야에 대한 주민의견

C1. 강원도의 어촌이 지니는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 ⇒ () ⇒ () ⇒ () ⇒ () ⇒ ()

- ① 풍부한 수산자원 ② 청정한 자연환경
 ③ 다양한 관광자원(역사, 문화, 생태 등) ④ 활발한 어촌공동체
 ⑤ 수도권과의 접근성(KTX, 고속도로) ⑥ 항만·물류 입지(동북아-수도권 연계)

C1-1.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C2. 현재 거주하시는 마을에는 어떠한 분야의 특화사업이 유망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산업(어선 · 양식어업) ② 해양레저 · 관광
③ 수산업의 6차산업화 ④ 바이오 · 에너지 등 신산업
⑤ 생태계 보전 및 연구기능(바다목장 등) ⑥ 기타 ()

C3. 현재 거주하시는 마을의 수산업 분야가 지니는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어획 및 위판 전문화(어종:) ② 다양한 어종을 대상으로 대규모 어획 · 위판
③ 특화어종 양식 환경(어종:) ④ 스마트양식 사업 추진
⑤ 수산가공상품 개발 · 판매 ⑥ 기타 ()

C4. 현재 거주하시는 마을의 해양레저 · 관광 분야가 지니는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체험형 생태관광 ② 학습형 역사 · 문화관광
③ 레저형 해양스포츠 및 경기운영 ④ 요양형 힐링관광
⑤ 대형 리조트 및 크루즈(마리나) ⑥ 기타 ()

C5. 현재 거주하시는 마을의 수산업 6차산업화를 위한 특화 ‘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C6. 현재 거주하시는 마을의 특화사업 정착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문인력 배치 ②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 훈련
③ 현장밀착형 실태조사 진행 ④ 지역간 사업중복 방지(지역별 차별화 지원)
⑤ 지원사업 예산 · 규모 확대 ⑥ 기타 ()

-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조사원 기입사항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	--	---------	--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연구	박수진
02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개선과 전환에 관한 연구	윤성순
03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연구 :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수요 대응을 중심으로	홍장원
04	양식장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방안 연구	김경신
05	수산부문 전망모형 「KMI-FOSiM」 구축연구 - 양식산업 전망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동
06	수산업 주요 연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관한 연구	임경희
07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박상우
08	국내 가두리 양식장 어장환경개선 방안	마창모
09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 어업의 허가제도 개선 방안	엄선희
10	과학적 해양사고조사체계 도입 및 구축기반 연구	박한선
11	컨테이너 해상물동량 예측 모형 구축방안 연구	고병욱
12	해운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황진희
13	건설용 모래 공급사슬관리(SCM) 방안 - 바다모래 가치 재산정을 중심으로 -	이연경
14	항만산업 종합통계 연구	하태영
15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관리방안 연구	최나영환
16	국내 컨테이너항만의 비용 함수 추정 및 효율성 연구	최석우
17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박한선
18	환동해권 물류 및 지역개발 기업진출 사례 분석 및 추진전략	이기열

2017년

01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김대영
02	연안침식 대응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윤성순
03	해양준조세 산정체계 개선방안	장정인
04	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최지연
05	반력동물산업 성장에 따른 수산분야 펫푸드 산업 활성화 방안	장홍석

06	강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박상우
07	Post-2020 국제기후변화 규범체계에 대응한 해양정책 개선방안 연구	박수진
08	한국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 수립 연구 -수산물 수출을 중심으로-	임경희
09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마창모
10	해운기업의 선박투자 행태 분석과 대응방안	김태일
11	IMO 지속발전 전략계획(SP) 대응방안 연구	박한선
12	컨테이너 해운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고병욱
13	동북아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전환수요 분석	이기열
14	컨테이너 해운기업의 환적 패턴 분석과 항만의 대응방안	김은수
15	현장수요기반 IoT/빅데이터 항만하역 안전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전형모
16	지진에 대비한 항만기능 유지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김우선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선화주 상생발전을 위한 해운산업투자 확대방안 연구	윤재웅
02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엄선희
03	낙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이정삼
04	해양생태도의 정책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박수진
05	국내 항만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의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안용성
06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한 항만배후단지내 FTZ활성화 방안연구	조지성
07	최저임금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기열
08	수산업·어촌분야 공익적 가치 평가체계 수립 및 사회적 경제 도입방안 연구	류정곤

2017년

01	파나마운하 확장에 따른 해운물류환경변화와 정책대응 방안	박용안
02	해양문화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홍장원
03	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 정책방향	황진희
04	제주도 항만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김근섭
05	수산물 산지경매사 직무 및 시험체계 개발	장홍석

06	한·중·일 신선물류산업 활성화 방안	장홍석
07	연안항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김근섭
08	지속가능한 갯벌어업을 위한 로드맵 마련 연구 - 갯벌어업 패류양식을 중심으로 -	마창모
09	해양수산 공공부문 인재육성 정책 방향	홍현표

현안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미안마 국립수산대학 설립 추진 방안 연구	정명화
02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김태일
03	해조류 국제양식규범확산에 따른 국내 김산업 수용태세 분석 -ASC인증을 중심으로-	이상철
0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 인력양성 방안 연구 - 국제물류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	박광서
05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계약 개선방안 연구	윤재웅
06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김은수
07	자율운항선박 도입 관련 대응정책 방향 연구	박혜리
08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	윤성순
09	강릉선 KTX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 연구	최일선
10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영석
11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정보 생산·활용방안	정지호
12	부산항 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하태영
13	해양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연구	한기원
14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장정인
15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이정삼
16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항만물류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이기열
17	한국 제조기업의 SCM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수용
18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연구-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병욱
19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한-베트남 수산식품·가공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정명화
20	신 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연구	최지연

21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발굴과 추진방향	최지연
22	학교급식의 수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	문석란

2017년

01	우리나라 해운금융의 한계 및 발전방향	전형진
02	한투발루 협력 증진을 위한 참다랑어 외해양식 투자의 타당성 분석	마창모
03	AMP 설치 수요조사 및 추진과제 연구	이연경
04	해외 진출 무역업체의 한국인 포워드 수요 추정 연구	신수용
05	선박교통관제(VTS)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	박한선
06	부산 영도구·중구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한진중공업·자갈치시장 사례 중심-	최나영환
07	수산시장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이현동
08	산업정책적 관점에서의 주요국 해운정책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고병욱
09	연안형 도시재생 기본구상 -부산 원도심 및 영도지역 사례 분석-	최지연
10	갯벌 복원 수요 확대에 따른 복원 표준모형 개발 방향	육근형
11	항만보안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김찬호
12	전자상거래 기반 상업항 개발전략	최상희
13	항만 내 여항구 개발과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광석
14	해운 얼라이언스 개편과 부산항 신항 환적 운영 개선 방향 연구	김은수
15	PA관할 항만 항계 확장에 따른 어업피해보상비 분담기준 마련	김근섭
16	페루 수산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정명화
17	러·일 간 남쿠릴 열도 분쟁의 최근 동향	현대송
18	부산항 신항 혼합형 전용터미널(Hybrid liner terminal) 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김근섭
19	해양경비 여건 분석과 역량 강화 방안	윤성순
20	바닷모래의 이용실태와 관리 개선방향	윤성순
21	우리나라 구조조정 정책사례 및 시사점 -한진해운을 중심으로-	황진희
22	한국 컨테이너선대 육성의 필요성	김태일
23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을 위한 기초연구	한광석
24	우리나라 항만산업 고용통계 조사 연구	하태영
25	뉴질랜드·노르웨이의 양식 수산물 수출 전략	임경희

26	빅데이터 적용 해운항만산업 연구분석 우선순위 연구	최종희
27	해양수산 생명자원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박수진
28	미·중 수산물 수출 비관세장벽 동향 및 대응 방안	임경희
29	도시-어촌 상생협력 인식도 조사	이상철
30	크루즈산업의 일자리 창출 규모와 정책과제	황진희
31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김태일
32	우리나라의 배출규제해역(ECA) 도입 방안 연구	이기열
33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강화에 따른 항만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심기섭
34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분야 및 고용효과 분석	박광서
35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체계 개선 방안	안용성
36	해양휴양복지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홍장원
37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의 국내 이행 방안	김경신
38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평가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신수용
39	2018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40	도시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형 어촌 개발 콘텐츠 발굴 연구	박상우
41	4차 산업혁명시대 항만물류산업 고도화 방안 연구	이연경
42	원양어선 승무 선원의 스트레스 분석에 관한 연구	이승우
4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나라 항만 경제특구 발전 방향	박성준
44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무인도서 기초정보 개선 연구	정지호
45	세계경영을 위한 해외 터미널 및 물류시설 투자방안	박주동
46	연안 소규모 하·폐수 처리시설의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장원근
47	거대선사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국적선사의 대응 방향	전형진
48	해양법 관련 최근 판례 및 동향 분석 - 남중국해 분쟁 등 해양법 판례 중심 -	최지현
49	화주 관점의 항만배후단지 역할 제고 방향	김은수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전라남도 작은 SOC사업 활성화 방안- 소규모 항·포구 개선사업 -	김근섭
02	2019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03	러시아 ARCTIC LNG-2 사업 참여 방안 연구	김민수
04	물류기술 R&D 추진동향 분석 연구	강무홍
05	우리나라 기업의 일대일로 물류분야 협력방안 연구	김형근
06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07	해양수산 분야 북극권 4차 산업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연구	김민수
08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육성 방안	이상철
09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해운협력 기반 구축 방안	황진희
10	영토 권원 이론의 현대적 발전과 한계	김원희
11	동해표기 문제 연구 - 동해 지명의 국제적 인지도 확산 방안	현대송
12	우리나라 기업의 창장물류 활용방안 연구	김형근
13	태국의 수산물 소비 트렌드 분석 및 수출전략 연구	임경희
14	제주 해상풍력발전지구 제도 개선 연구	육근형
15	해양수산 분야 「9 브릿지」 구축 방안 연구	박성준

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

인 쇄 | 2018년 2월 26일 인쇄

발 행 | 2018년 2월 28일 발행

발 행 인 | 양 창 호

발 행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 공감 Tel : 070-4407-6252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정가 6,000원